

정책연구 2002-지정-24

교육국제화 방안 및 국제교육전문가 양성 방안 연구

2002년 12월

연구책임자: 신 종호(서울대학교)

공동연구자: 김 동일(서울대학교)

김 창대(서울대학교)

연구보조자: 권 희경(서울대학교)

나 재선(서울대학교)

김 미순(서울대학교)

- 「이 정책연구는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이 정책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머리말

본 연구는 크게 교육국제화 현상과 관련된 세 개의 연구과제로 구성·운영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태국, 베트남, 홍콩 한국학교의 당면 과제들을 분석하고 이들 한국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들 한국학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은 크게 재정적 문제와 교과운영의 문제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의무교육제 적용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OECD와 UNESCO 국제기구의 교육관련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활동할 수 있는 국제교육 전문가 양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제기구의 전·현직 파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체제, 훈련, 그리고 복귀후 활용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 연구과제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안하고 있는 교육국제화 방안과 관련 법률안에 대한 평가 연구였다. 교육국제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현재 입안되고 있는 이들 정책(법률)안들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목표이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연구과제로 구성·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도 개별적 특성을 갖는 이들 세 연구과제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구성하지 않고, 각 연구과제별로 별도의 보고서 형태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를 개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차 례

연구과제 1: 동남아 한국학교 수요조사 연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 방법	9

II. 정부의 재외동포교육 현황 분석

1. 정부의 재외동포교육 담당 주체 및 주요 기능	12
2.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23

III. 홍콩 · 베트남 · 태국 지역 한국학교 현황

1. 홍콩 · 베트남 · 태국지역 재외 동포의 특징	30
2. 한국학교 시설 및 학교 소유 현황	36
3. 학교 운영 현황	37

4. 교직원 현황	39
5. 학생 및 졸업생 현황	40
6. 교육과정 현황	44
7. 재정 현황	47
8. 부설 한글학교 운영	53

IV. 홍콩 · 베트남 · 태국 한국학교 관련자

교육요구조사

1. 설문연구결과	55
2. 면담연구결과	63

V. 홍콩 · 베트남 · 태국 지역

한국학교의 개선 방안

1. 지역별 한국학교의 주요 당면 문제 및 활성화 방안	93
2. 중 · 장기적 한국학교 발전 방안	97

VI. 결론

1. 연구의 시사점	111
2. 연구의 제한점	112
참고문헌	114

연구과제 2: 국제기구 교육전문가 양성 방안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9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1

II. 교육관련 국제기구의 조직 및 기능 분석

1. 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123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29

III.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사업 참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사업참여 현황	137
2. 사업참여 관련 문제점	149

IV.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방안

1. 연구 대상 및 방법	156
---------------------	-----

2.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구 결과	156
---------------------------	-----

V. 마치는 말

1. 연구결과 종합	164
2. 연구의 제한점	165
참고문헌	166

연구과제 3: 국제교육정책 종합발전방안 정책 평가 연구

I. 서 론

1. 정책의 등장배경 및 정책평가를 위한 연구의 시작 설정	171
2. 정책 평가의 기준	175
3. 연구방법 및 절차	177

II. 교육시장개방과 관련논의 현황

1. WTO 교육시장개방 협상 경과 및 우리나라 현황	178
2. 교육시장개방의 주요 이슈	182

III. 정책안에 대한 평가 결과

1.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	193
2. 정책안의 실행가능성과 그 성과 혹은 파급효과	198
3. 교육시장개방과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기타 제언: 전반적 정책기조, 관련법률 및 기타 관련 제언	211

IV. 연구결과의 논의

1.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13
2. 연구의 제한점	215

참고문헌	217
------------	-----

표 차례

연구과제 1: 동남아 한국학교 수요조사 연구

<표Ⅱ-1>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사업추진 내용	13
<표Ⅱ-2>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외동포 관련세부사업내역	14
<표Ⅱ-3>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 일반 회계	15
<표Ⅱ-4> 재외동포교육의 목적	24
<표Ⅱ-5> 한국학교·한국교육원 현황	28
<표Ⅲ-1> 홍콩·베트남·태국의 재외동포 현황	35
<표Ⅲ-2> 홍콩·호치민·방콕 한국학교의 시설현황 (2002년 현재)	37
<표Ⅲ-3> 홍콩·호치민·방콕 한국학교 운영의 실제 (2002년 현재)	38
<표Ⅲ-4> 홍콩·호치민·방콕 한국학교의 교직원 현황 (2002년 현재)	40
<표Ⅲ-5> 홍콩 한국학교 졸업생 현황 (2002년 현재)	41
<표Ⅲ-6> 홍콩·호치민·방콕 한국학교 재학생 현황 (2002년 현재)	43

<표III-7> 홍콩 · 호치민 · 방콕 한국학교 학년별 재학생 현황 (2002년 현재)	44
<표III-8> 재외동포의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현황 (2002년 현재)	44
<표III-9> 호치민 한국학교 초등과정 주당 수업 시수	46
<표III-10>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과정 운영비 지원 내역	47
<표III-11>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과정 시설비 지원 현황	48
<표III-12> 2000년 호치민 한국학교 세입 내역	49
<표III-13> 홍콩 · 호치민 · 방콕 한국학교의 세입 내역 비교	49
<표III-14> 2001년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과정 세출내역	50
<표III-15> 2000년 호치민 한국학교 세출내역	51
<표III-16> 홍콩 · 호치민 한국학교 및 현지학교 · 국제학교 수업료 비교	53
<표IV-1> 교직원 및 학부모의 시설에 관한 요구 분석 결과	58
<표IV-2> 세 지역 한국학교 관계자의 한국학교 당면 문제에 관한 의식비교	63
<표V-1> 홍콩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 시설 비교	100
<표V-2> 홍콩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 교직원 현황 비교	102
<표V-3> 홍콩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 재학생 현황 비교	103
<표V-4> 홍콩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의 재정현황 비교	105

연구과제 2: 국제기구 교육전문가 양성 방안

<표II-1> OECD 조직 구성표	132
<표III-1> UNESCO 사업참여현황	138
<표III-2> OECD 교육위원회(ED)의 주요 연구 사업 및 한국 참여 현황	140
<표III-3>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의 주요 연구사업 및 한국 참여 현황	141
<표III-4> OECD 교원정책 검토사업 및 한국 참여현황	142
<표III-5> OECD 성인학습 주제적 검토사업 및 한국 참여현황	145
<표III-6> OECD 유아교육 · 보호정책 검토사업 및 한국 참여현황	147

연구과제 3: 국제교육정책 종합발전방안

정책 평가 연구

<표I-1>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관련 정부조치	173
<표II-1> 교육서비스 분야 제안서 내용 비교	180
<표II-2>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181
<표II-3> 교육시장이 국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188

그림 차례

연구과제 2: 국제기구 교육전문가 양성 방안

<그림III-1> 일본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전략 153

연구과제 3: 국제교육정책 종합 발전방안

정책 평가 연구

<그림I-1> 연구방법 및 절차 177

<그림II-1> WTO 서비스 협상 경과 178

<그림II-2> 교육시장의 형태 186

<그림III-1> 국제교육정책 종합발전방안: 국내교육
국제화 지원방안 205

부록 차례

연구과제 1: 동남아 한국학교 수요조사 연구

<부록 I-1> 설문지-교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용	219
<부록 I-2> 설문지-학부모용	235

연구과제 2: 국제기구 교육전문가 양성 방안

<부록 II-1> 국제교육전문가 면담질문지	254
-------------------------	-----

연구과제 1:

동남아 한국학교 수요조사

연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재외동포 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해외이주 역사는 일본의 식민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압정을 피하기 위해 혹은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
아서 국외로 망명하거나 이주하였다. 일제 말기에는 징병이나 징용으로 많은 젊은
이들이 강제 동원되어 소련의 사할린, 동남아, 일본 등지로 연행되어 갔다. 그 당시
이주해간 이민 1세들은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으며, 현재는 그곳에서 나고 자
란 이민 2·3·4세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
과 정부의 이민정책 추진 등으로 한국인의 해외진출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2
년 현재 565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미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외국에서 생활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1).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동포는 크게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구분할 수 있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외국민이란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
주하고 있는 자”를 그리고 외국국적 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리
킨다(정진곤 외, 1997). 이들은 국적에 있어서는 외국인이지만 민족으로는 한국인
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은 이들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널리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굳이 세계화·국제화 시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족을 종족·조상·종교·언어·영토 등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된지 오래다. 현대 사회에서 민족은 자신을 한 민족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정체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외동포는 그들이 자신들을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한 한국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를 한국인으로 인정한다면 이것만으로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재외동포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지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곧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재외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인식이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재외동포들의 문화적·경제적 수준이 곧 한국의 문화적·경제적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소 및 한·중간의 수교가 수립되면서 그곳의 동포들의 한국방문이 잦아졌다. 그들이 귀국할 때 선물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가져간 한국제품이 현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수출의 기회가 확대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비단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한국인의 성공적인 경제생활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정체성을 유지·신장하고, 한국인으로서 공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현지 실정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나아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홍콩 · 베트남 · 태국 지역에서 한국학교의 중요성

홍콩 · 베트남 · 태국 이 세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특성을 한마디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 이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동포가 적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정책에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주(亞洲) 지역으로 불리는 영역에 속해 있는 국가이다. 이 세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재외동포의 상당수가 영주교민이 아닌 파견 공무원이거나 기업의 주재 상사원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일시 체류민이라는 점이다. 파견에 의한 공무원이나 기업 상사원의 이주는 현지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들은 삶의 근거를 본국에 두고 있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외에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복귀할 예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영주교민들과는 다른 요구를 가진다. 이들은 영주교민들과는 달리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으므로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현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주 이주민들과는 달리 현지 적응의 문제가 시급하지 않다. 물론 현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익히고 현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취학연령에 있는 자녀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본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도 연계교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일시 체류민 자녀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한국학교이다. 한국학교는 국내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일시 체류민 자녀의 귀국 후 적응을 돋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현지 사정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재외동포 자녀의 현지 적응을 돋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02). 현재 17개국 25개의 한국학교가 설치

운영중이며, 일시 체류민이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중국, 구 소련 지역 등에서는 한국학교 신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중동 건설의 붐이 사라짐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한국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있으며, 국교 단절로 체류민의 숫자가 줄어든 대만 지역의 한국학교의 학생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정진곤 외, 1997).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의 재외동포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홍콩에 거주하는 우리동포의 수는 한때 8,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약 6,000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이와 함께 국제화의 추세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열망 또한 한국학교의 수요에 대한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영어를 배우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기에 유리한 영어권 국가의 국제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홍콩과는 달리 베트남의 경제 개방화 이후 한·베트남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동포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학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의 학부모도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 면에서는 홍콩과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태국 지역의 재외동포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동남아의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관광 가이드로 종사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파견 공무원이나 기업의 주재 상사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주 태국대사관 홈페이지). 따라서 이들은 자녀의 학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학교에 대한 수요는 국내 및 국외의 정치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한국학교의 현재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학교의 현재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은 물론이며, 현재의 한국학교의 모습이 설립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한국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 연구의 내용

가. 홍콩·베트남·태국 지역 한국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 지역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다.

개선점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문제 사태라 함은 '현재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바라는 상태'의 발생의 시작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그 것은 느낌에 불과하다. 그러한 느낌이 실제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더 경미한 사안일 수도 있다. 혹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학교의 개선점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실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면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수요자의 요구이다.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결국 수요자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 문제 사태에서 '바라는 상태'가 곧 수요자의 요구인 경우도 많다. 홍콩·베트남·태국 지역의 한국학교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국제학교와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학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나. 홍콩·베트남·태국 지역 한국학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점을 모색한다.

홍콩·베트남·태국 지역 한국학교의 실태 파악과 재외동포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 이 지역의 한국학교가 처한 상황과 요구를 파악했다면, 다음은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할 차례이다. 상황파악과 요구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들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이 지역의 한국학교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은 한국학교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 전반적인 한국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홍콩·베트남·태국 지역 한국학교의 문제점은 이 지역 한국학교만의 특수성이 라기보다는 한국학교 자체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 기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그것은 그 기관의 정체성을 의심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이든 그 설립 당

시의 목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 기관의 존립을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혹은 목적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를 맞는다. 본래의 목적을 유지할 것을 고집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오히려 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할 수도 있다. 반면에 다수의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급급하다면 그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큰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한국학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학교 본래의 설립 목적을 검토하고, 현 상황에서 본래의 설립 목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유지해야 한다면 그 정책방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새로운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모색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는 한국학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정부의 기관별 재외동포교육의 추진 현황 및 재외교육기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자료로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간한 연구물과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현황자료, 그리고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파견교사 연수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학위 논문, 학술지 개재 논문을 검토하였다. 또한 재외동포교육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인터넷 사이트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홍콩·베

트남·태국 지역의 재외동포 및 한국학교의 실태 조사는 현지 학교에서 교육인적 자원부에 보고한 보고서 및 현지 소재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나. 설문연구

홍콩·베트남·태국 지역의 한국학교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 개선 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 지역의 한국학교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문연구를 하였다. 그 처한 입장이 다르므로 그 요구도 다를 것이라는 예상 하에 설문지는 두 종류로 작성되었다.

하나는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용이며, 다른 하나는 학부모용이다. 조사 내용은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교직원 관련 사항·교육과정 및 내용 관련 사항·학교재정 관련 사항·학교주변기관의 역할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 등이며, 각각의 큰 제목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한 문항으로 작성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모든 문항에는 기타 란을 두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학부모용 설문지에는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용에 추가하여 한국학교에 대한 인식을 국제학교 등에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모든 자녀를 한국학교에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모를 구분하여 답하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들 두 유형의 설문지는 <부록1>과 <부록2>에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는 이메일로 현지 한국학교에 보내졌으며, 현지에서 한국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직원과 운영위원, 그리고 학부모에게 배포되었다. 그리고 면담연구를 위한 현지 방문시 연구자에 의해 회수되었다.

다. 면담연구

면담연구는 국내와 현지에서 두 차례 실시하였다. 국내 면담연구의 대상자는 동남아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한국학교 교사들이었으며, 국내 대상자를 상대로 한 면담연구는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파견 예정에 있는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에 참여하여 파견교사와 현지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현지 면담연구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면담 대상자는 한국학교의 교장 및 학교 재단 관계자와 학부모, 그리고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관이다. 연구자가 7박8일의 기간동안 직접 홍콩·베트남·태국 지역의 한국학교와 영사관을 방문하였다. 면담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학교의 현 실과 문제점 및 그들 각자가 겪는 어려움, 한국학교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면담내용은 설문내용과 거의 유사하였으며, 구조화 된 형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 정부의 재외동포교육 현황 분석

1. 정부의 재외동포교육 담당 주체 및 주요 기능

가. 교육인적자원부

(1)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우리나라 재외동포교육의 총괄 주무 업무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의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이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에서는 재외동포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재외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며, 재외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교사를 선발·인사를 관리하고, 귀국학생의 국내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정만섭, 2002).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1>, <표 II-2>, <표 II-3>과 같다.

<표 II-1>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사업추진 내용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이해교육과 현지적응교육으로 세계속의 한민족 형성 기반을 구축한다. 해외 일시 체류민 자녀에게 국내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실시를 통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 교육이 국내와 연계됨으로써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귀국후 학교,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고 재외동포들에게 사회교육적 방법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족 정체성 함양 및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교육기관 파견교원 인건비와 재외교육기관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한국학교 25개교와 한국교육원 35원에 대해 「교육기본법」(제29조제2항)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4조·15조)¹⁾에 의거하여 지원한다. 재외교육기관에서 현지공관을 통하여 소요예산 요구→예산확보→예산분배 기준마련→예산지원의 절차를 거친다. 정부에서 현지공관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학교 총 소요예산의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시설비의 경우, 총 소요예산의 50%를 대응자금으로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경우는 현지의 물가, 학생수, 학급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총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투자계획은 없으며 배당 예산은 동일하다. 99년도의 경우 총 예산액 216억5500만원에서 집행액은 190억4700만원으로 88%의 집행률을 보였다. 또한 2000년도에는 129억9800만원이 집행되어 총 예산 60%의 집행률을 보였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재외동포 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 촉진 방안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21.

<표 II-2>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외동포 관련 세부사업내역(단위:백만원)

세부 사업명	2000예산		2001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계	21655		21621		△34	△0.2
재외 한국학교 운영	10814	인건비(58명) 9190 운영비(22교) 1614	12813	인건비(60명) 10063 운영비(22교) 1607 교단선진화사업 1143	1999 876 △17 1143	15.6 9.5 △1.0 100.0
재외 한국교육 원 운영	7304	인건비(50명) 6511 운영비(33원) 593 사업비(33원) 200	7324	인건비(50명) 6469 운영비(33원) 577 사업비(33원) 278	20 △42 △16 78	0.3 0.6 △2.7 0.4
SAT II 사업지원	180	한국어과정설치 180	165	한국어과정설치 165	△15 △15	8.3 8.3
재외 교육기관 시설사업	3357	싱가포르한국학교 신축비(1차) 143 연변한국학교 신축비(1차) 435 북경한국학교 신축비 1999 사할린 한국교육원 신축비 780	1319	싱가포르한국학교 신축비(2차) 131 연변한국학교 신축비(2차) 399 호치민 한국학교 신축비(1차) 588 파라과이한국학교 보수비 201	△2038	△ 60.7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재외동포 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 촉진 방안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2.

<표 II-3>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 일반 회계(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99결산	2000예산 (A)	2001예산		증(△)감 (B-A)
			요구	조정(B)	
계	19,047	21,655	27,121	21,621	△34
한국학교 운영지원	10,786	10,814	16,368	12,813	1,999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8,081	7,304	8,664	7,324	20
SATⅡ 사업지원	180	180	165	165	△15
재외교육기관 시설지원	-	3,357	1,924	1,319	△2,038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재외동포 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 촉진 방안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22.

(2)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육진흥원은 1962년 3월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에서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 지도 기능을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2년 3월 28일 현재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출범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현재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재외동포 교육의 세계화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교육교류의 활성화이다. 이 중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가) 재외동포의 국내 초청교육 내실화

국제교육진흥원은 국내초청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한국어 교재 및 보조교재 개발에 힘쓰는 한편,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멀티미디어 교실 환경 구축과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행사 참관지도와 수학여행을 실시함으로써 현장교육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

정별 학생 의견 수렴과 수준별 반편성 운영 등으로 현장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모국수학 교육과정 운영

모국수학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어 장기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 계절제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어 장기교육과정은 대학예비교육과정에 속하며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교육과정은 중졸이상 40세 이하 재외동포로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계절제 교육과정은 일반 재외동포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5개 과정이 운영되었다. 2002년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총 400명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1억2853만3천원이 투입되었다.

(다) 재외동포 교육관계자 초청연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재외동포 교육관계자 초청연수는 실시대상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재외 25개 한국학교의 현지채용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재외 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가 있다. 2002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주일간 25명이 연수를 받았으며 2246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두 번째로 외국인 동포교육 관계자 초청연수가 실시된 바 있다. 연수 대상은 우리나라 동포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권 교육관계자들이며 2002년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25명이 연수를 마쳤으며 예산은 2604만2천원이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인 동포 교육관계자 초청연수가 있다. 이는 중국의 조선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2002년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2104만1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 운영하는 구 소련권 동포 교육관계자 초청연수과정이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동포교육 관계자 15명이 2002년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 동

안의 연수과정을 마쳤다. 본 연수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2818만9천원이다.

(라) 재외동포 국내초청 교육프로그램 개선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재외동포 국내초청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대상자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마) 재외동포교육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한 현지연수 강화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재외한국·한글학교 교원 등을 위한 현지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연수는 한국·한글학교 교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002년 8개권역 2,50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현지 실정에 맞는 연수 교재 제작, 재외동포교육 의견수렴 및 모국수학 안내 등을 통하여 현지연수 프로그램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바)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KOSNET)에 의한 한국어 교육

KOSNET을 통한 한국어 학습지원도 국제교육진흥원의 사업에 포함된다.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영어, 일어, 중국어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학습내용 및 자료를 보완하고 서반아어를 포함하여 언어권을 확대하였다. 2001년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80개국 7,331명이 등록, 440만회 접속이 이루어졌다. KOSNET 운영에는 8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사) 해외 입양인 교육과정 운영

해외 입양인은 현재 약 20여 개국 17만명에 이른다.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모국관과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생활 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 체험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

30명의 18세 이상 해외 입양인들이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140만6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아) 재외동포교육용 교재개발·보급

현지 실정에 맞는 수준별로 다양한 교재를 개발,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등에 보급함으로써 재외동포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교재 및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82개국 115개 공관을 통하여 재외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로 보급된다. 2002년 현재 교재 4종과 시청각자료 2종을 개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교육관계자 의견 수렴과 자료 보급 체제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자) 『한국의 교육(Education in Korea)화보』 발간

우리나라 교육에 관한 정보자료를 영문책자로 제작, 국내외 교육 관련기관에 배부함으로써 국제간의 교육 및 문화 이해증진과 교육정보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6089만5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총무처 정부 조직개편 방안 발표에 따라 1994년 3월 민간기관으로 전환한 국립 교육평가원이 1997년 12월 31일로 국립교육평가원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1998년 1월 1일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목적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교과용 도서를 연구·개발하고, 초·중·고 교육평가 및 대학수학 능력시험 등 각종 교육평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교육평가의 연구·시행,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및 검·인정 업무, 학교교육 지원 사업, 각종 국가고사 출제 관리, 기타 고사관련 수탁사업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교육과 관련된 기능은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및 검·인정 업무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교과교육 연구실로, 교과교육 연구실은 교과서 검정팀과 교과서 검정지원부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교육 연구실에서는 초·중·고 1종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며, 중·고 2종 교과용 도서의 경우 이에 대한 검·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재외동포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위탁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현지 실정에 맞는 수준별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고,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등에 보급함으로써 재외동포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크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개발과 보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국제교육진흥원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 외교 통상부

(1) 재외동포재단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를 위한 업무는 해외이주정책,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 재외동포 모국방문 지원, 흑인 지도자 방한초청, 사할린동포 모국방문지원, 재외동포재단 지원, 동포사회 안정화를 위한 외교활동비 지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활동은 주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

외동포가 거주국 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하도록 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조사연구, 홍보, 교류, 교육, 정보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재외동포재단의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 내용과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어 및 민족교육 지원사업이다. 민족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재외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이다. 재외 한글학교의 현황조사를 통해 지원 기준을 수립하고 일차적으로 공관별로 지원한다. 각 학교별 지원은 관할공관에 일임하고 있다. 이밖에 재외동포재단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국·구 소련지역 등 40개국 4개 공관 200 여개 재외 한글학교에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교육자료, 컴퓨터, 한국 동화책 등을 지원했으며, 폐교 위기에 처한 조선족 학교의 통·폐합 사업시 통합학교의 기숙사 건립 및 교사 증축비로 3억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둘째, 재외동포 장학사업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장학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다. 장학생은 해당 공관의 추천과 재단 장학생 선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되고 학업과정 동안 등록금 및 생활비 등 일체의 체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거주국의 정규학업과정을 이수한 학사 및 석사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국내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며, 장학금 지급기간은 한국어 어학과정 6개월과 대학원 과정 전 기간이다. 2001년 재외동포재단에서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5억2천4백만원이다. 이 밖의 장학사업으로는 중국·구 소련지역의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해당공관의 추천을 통하여 선발된 이 지역 소재 대학 재학 재외동포 학생에게 재단명의로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국내의 주요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재외동포 학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15명에게는 학기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 재외동포초청 교육연수 사업이다. 이 사업의 내용은 크게 재외동포 대학

생 모국순례연수와 재외동포 민족교육자 초청연수, 구 소련지역 한국어교사 육성 사업으로 나뉠 수 있다. 2001년 재외동포재단은 이 사업에 총 2억4백만원을 지원했다.

넷째, 국외 입양인 지원사업이다. 재외동포재단은 국외 입양인이 모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외입양인 자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국외 입양인 사후관리 사업 지원에도 3천만원을 지원했다.

다섯째, 재외동포 사이버 한국어 강좌 개발이다. 2001년 재외동포재단은 HTML 1,000페이지 분량(360시간)의 한국어 교재 및 컨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이버 강좌는 초급 한글에서 고급 한글강좌까지 총 60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래쉬 및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개발되었다.

다. 문화관광부

(1) 한국어 세계화 재단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재외동포관련 사업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문화를 보급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며, 동포 사회의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교민 대상의 해외공연 지원, 세계 한민족 청소년 축전 개최, 재외동포 체육대회 지원, 재외동포의 문화용품 구입지원, 한민족 뿌리 찾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교육관련 사업은 문화부 산하 한국어 세계화 재단의 주력사업인 한국어 보급을 꼽을 수 있다. 재외동포 한국인 2·3세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것은 앞으로 이들이 한국문화를 익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세계화 재단에서는 재외동포 2·3세, 한국학 연구기관·단체, 외국 대학의 한국어 학과를 대상으로 한글의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더욱 효율적인 한글 교육을 위한 인터넷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2)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은 우리나라 어문 정책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는 기구로서 특히 국어사전 편찬, 각종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제정·보급을 통하여 언어 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각종 어문 자료를 수집하여 국어 유산을 보존·연구함으로써 국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따라서 국립국어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크게 국어의 규범에 관한 연구 및 그 보급, 국어의 역사와 체계화에 관한 연구, 국민의 언어 생활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국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 연구 성과의 정리와 보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재외동포교육관련 사업으로는 재외동포 중 특히 중국이나 구 소련 지역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전문가 파견과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북한의 어문규범에 익숙한 이 지역의 동포들에게 우리의 어문규범을 보급함으로써 언어의 동질성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2년부터 매년 이를 지역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동포 한국어 교사들에게 어문규범과 문법, 우리말과 글의 역사, 언어 예절, 남북한 어문규범 차이 등 한국어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현지의 동포 한국어 교사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고 문화 유적지 답사와 지방 산업체 시찰도 시행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파견자 수는 43개 지역 87명, 파견 교육생 수는 총 1,820여 명, 그리고 초청 연수자 수는 총 143명이다. 또한 한국어 교재 지원사업으로 교재 및 동화책 등 보조 교재를 지원하는 데 2,7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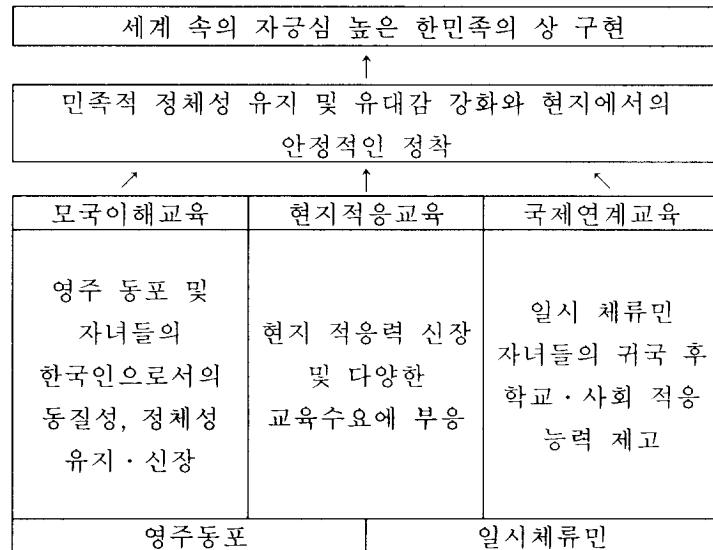
가. 재외교육기관 설립 목적

재외동포교육의 내용은 영주동포 및 자녀들의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정체성을 유지·신장하기 위한 모국이해 교육과 영주동포와 일시 체류민을 대상으로 한 현지 적응교육 그리고 일시 체류민 자녀들의 귀국 후 학교·사회 적응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연계교육으로 구분된다. 재외동포교육의 목적은 민족적 정체성 유지 및 유대감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나아가 세계 속의 자긍심이 높은 한민족의상을 구현하는 데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재외동포교육기관은 먼저 영주동포들에 대해서는 거주국 교육기관에서 현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음으로써 거주국에서의 유능한 일등시민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재외교육기관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과 정체성이 유지·신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의 언어·역사·문화를 비롯한 모국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시 체류민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현지에서의 적응과 아울러 귀국한 뒤 학교와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내교육과의 연계교육을 실시·지원하고 있다. 일시 체류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교를 설치하여 국내와 연계된 초·중등 과정을 직접 교육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 교재 개발·공급, 교사 파견 등을 지원하고 귀국 자녀들의 국내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4> 재외동포교육의 목적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국제교육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p.107.

나. 재외교육기관의 기능 및 현황

재외동포교육을 관掌하는 국내 기관은 국제교육진흥원이며, 그 산하에 현지 교육기관으로서 전일제 정규학교인 한국학교,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성인 · 청소년에게 한국어 ·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는 한국교육원, 현지 교회 등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주말학교인 한글학교 등이 있다. 이밖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교육관은 관내 동포교육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정만섭, 2002).

(1) 한국학교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에 설립된 정규학교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한인회이며, 교육부는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한국학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성격을 띤다.

한국학교의 설립 목적은 일시 체류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 교육과정과의 연계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다. 재외 한국학교 운영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 자녀들이 우리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케 함으로써 이들이 귀국 후 국내 학교에의 적응이 용이하도록 한다.

둘째, 내실있는 학교 운영을 통하여 동포 자녀들이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 한국 학교를 선호하여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충실을 기한다.

셋째, 현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부단히 개발하여 현지에서 한국어, 한국문화의 전파에 기여하도록 한다.

재외한국학교는 이와 같은 기본 목적을 학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시 체류민 자녀가 귀국 후에도 학업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내교육과정(제7차 개정)에서 제시한 기준(편제, 시간배당 등)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특수성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학교는 현재 17개국 25개교가 설치 운영중이며, 학생은 2002년 11월 현재 6,017명, 교원은 763명이다. 그 중 한국에서 파견된 교육 공무원이 56명이고, 현지에서 채용된 교사가 436명, 강사가 271명이다(정만섭, 2002). 현재는 일시 체류민의 수가 증가하여, 연계교육의 수요가 많은 동남아, 중국, 구 소련지역 등에 한국 학교 신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2000년 3월에는 연변 한국학교 및 호치민 한국 학교에 각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태국 방콕의 한국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천진 및 청도 등지에도 한국학교의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재외동포재단, 2002).

(2)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에 설치한 사회교육 기관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재외동포 성인 및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한국역사·문화 등 민족교육을 실시·지원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교육원의 업무영역은 크게 교육 활동, 교육 지원활동, 유학생 및 파견교수 관리, 홍보 및 자료수집, 교육관련 각종 행사, 한·주재국 교육 교류활동 지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원은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문화 등을 전파하여 한국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제이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현재 14개국에 35개원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재외동포 다수 거주지역인 중국 동북 3성 지역, 러시아 북까프까즈 지역에 교육원 신설을 추진중이다.

한국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만섭, 2002).

(가) 교육활동

한국교육원에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한국어, 한국역사·문화 등의 민족교육과 재외동포의 현지 교육수요를 고려한 음악, 서예, 노인교실 등 특별활동으로 구성된다. 한국교육원의 또 다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한글학교 지원을 들 수 있다. 관할 내 한글학교에 대하여 순회 장학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신설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한글학교 교장·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글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다. 이밖에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단기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초·중·고·대학 및 각종 학교와 협의하여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나) 교육지원 활동

한국교육원은 교육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령한 교과서 및 교재 배부 업무와 함께 자체 교재 제작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에 대한 모국 수학생 모집, 추천 및 설명회 개최·상담·사전교육 등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는 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특례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입시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각종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추천 및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SATII 등의 한국어 능력검정시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하여 본국을 방문하는 각종 연수단 및 방문인사 지원, 각종 학회·학술연구단체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 기타활동

한국교육원은 유학생 및 파견교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별 관내 유학생 수 등 유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관내 유학생을 지도·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원은 국비 유학생에 대해 본국에서 보내온 학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관내의 국비 해외파견 교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자료·홍보물 및 정기간행물의 배포, 영화상영 등을 통한 본국 홍보와 교육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주재국 교육관련 자료를 수집·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말 발표(웅변)대회, 학예회, 예술제, 사생대회, 글씨쓰기 대회, 백일장, 체육대회 등 각종 재외동포 관련 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는 한편, 한·주재국

간 교육기관 및 단체의 자매결연, 학술교류, 방문교류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5> 한국학교 · 한국교육원 현황

지역 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계	
	파견자 수	기관별 파견자수	파견자 수	기관별 파견자수	기 관 수	파견자 수
일본	22 (4개교)	동경 11 경도 2, 오사카 금강 4, 건국 5	22 (14개원)	가나가와 2, 동경 4, 오사카 3 후쿠오카 2, 히로시마 1, 삿포로 1 고베 2, 치바 1, 나가노 1, 니가타 1 교토 1, 기후 1, 센다이 1, 시모노세키 1	18	44
아주	25 (12개교)	부경 2, 천진 1, 연변 1, 상해 1, 홍콩 5, 연대 1 대만 2 (대북 1, 고옹 1), 호치민 2, 자카르타 7, 싱가폴 2, 방콕 0	1 (1개원)	시드니 1	13	26
북미	(1개교)	라성 0	8 (7개원)	워싱턴 1, 뉴욕 1, 시카고 1 LA 1, 센프란시스코 1, 휴스턴 1, 카나다 1	9	7
남미	4 (3개교)	파라과이 2, 브라질 1 아르헨티나 1	3 (3개원)	파라과이 1, 쌍파울로(브라질) 1 아르헨티나 1	6	7
구주 C I S	1 (1개교)	모스크바 1	12 (10개원)	프랑스 1, 독일 1, 영국 1 비ушки 2, 알마아티 1, 타슈켄트 2, 사할린 1, 로스토프나도누 2, 블라디보스톡 1, 하바로프스크 1	11	13
중동	4 (4개교)	사우디아라비아(ჯ다 1, 리야드 1) 카이로 1, 태헤란 1			4	4
계	56	15개국 25개교	46	14개국 35개 교육원	60	101

출처 : 재외동포재단(2002.5). 재외동포기관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3) 한글학교

한국학교, 토요학교, 한글학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 기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설립한 사회교육 기관이다. 한글학교는 주로 주말(토요일)을 이용하여 한국어·한국역사·문화 등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지 동포(종교단체, 동포단체, 등)가 설립·운영하고 있다. 한글학교의 예산지원 업무는 98년도부터 외무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한도 내에서 교과서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2002년 11월 현재 96개국에 1,923개교가 있고, 학생은 11만1천3백여 명, 교원은 1만2천84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설학원과 같이 수시 설치 또는 폐지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재외동포재단, 2002).

(4) 교육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다. 교육관의 직함은 교육관(Educational Attache), 참사관, 수석교육관, 영사(Educational consul: 총영사관 근무) 등으로 나누어 진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중에서 선발되고 임기는 3년이며,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범위내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재직중에는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무관·공보관 등과 함께 재외공관에서 공관장의 외교업무 수행을 보좌하며 관내 동포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정만섭, 2002).

III. 홍콩·베트남·태국 지역 한국학교 현황¹⁾

일본의 한국학교들이 1950-60년대에 설립되었고, 중동 건설의 불을 타고 중동의 한국학교들이 1970년대에 세워진 것에 비하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동남 아시아 지역의 한국학교는 비교적 늦게 개교한 편이다. 홍콩 한국국제학교(이하 홍콩 한국학교)는 한국어 과정의 경우 1988년에 초등학교 과정이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4년 주재국의 설립인가를 받아 영어 과정이 개설되었다(홍콩 한국국제학교, 2002). 베트남의 호치민 한국학교는 1998년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베트남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현재 호치민 한국학교는 현지에서 정규학교로 인정받고 있다(호치민 한국학교, 2002). 태국의 방콕 한국국제학교(이하 방콕 한국학교)는 재외동포 인구수와 이민 역사에 비해 늦게 설립된 편이다. 2002년 3월 1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주재국의 설립인가를 신청중에 있다(방콕 한국국제학교, 2002).

1. 홍콩·베트남·태국지역 재외 동포의 특징

2001년 현재 재외동포 수는 5,653,809명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

1) 세 지역의 한국학교 현황에 관한 내용은 주로 <홍콩 한국 국제학교(2002). 홍콩 한국국제학교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태국 방콕 국제학교(2002)호치민 한국학교(2002). 호치민한국학교 현황 보고. 교육인적자원부.>, <태국 방콕 국제학교(2002). 태국 방콕 국제학교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를 참고로 하였다.

중 일본과 중국 및 중동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재외동포 수는 77,400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수의 1.2%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홍콩·베트남·태국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22,000명 가량으로 이 지역의 재외동포의 인구는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의 약 30%에 이른다. 더구나 최근 재외동포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베트남 지역의 경우 1995년에 1,227명이던 것이 1999년에는 5,544명, 2001년 현재는 6,226명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다. 태국 재외동포의 증가 추세는 베트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95년 5,564명에서 현재는 9,870명으로 그 인구가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이 지역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외교통상부, 2001).

가. 홍콩 재외 동포의 특징

1980~90년대에 이르러 국내 경제의 급진적 발전으로 인한 많은 금융기관과 상사들의 진출로 한 때는 한인의 수가 8,000명에 이른 때도 있었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로 그 수가 줄어 현재는 약 6,000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영주권 소유자는 약 1,700명 정도이며, 일시 체류자는 4,300명 정도이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상사 주재원이 886명, 서비스업 종사자가 638명으로 가장 많고, 이밖에 상업, 사무직, 생산직 종사자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 이상의 학생 수는 126명이며, 고교생 이하의 취학생 수는 613명으로 집계된다(외교통상부, 2001).

한국인이 홍콩에 살게 된 것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중국에 살던 교포들 중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홍콩으로 나온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에 정착하거나, 중국내륙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격렬해짐에 따라 이를 피해 홍콩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 자리잡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들 중 일부는 귀국하였고, 약 40여 세대가 남아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교민사회가

형성되었다(주 홍콩 총영사관 홈페이지).

1950년대의 홍콩은 작은 항구도시에 불과하였다. 당시 런던올림픽(1948년)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일행이 홍콩을 경유한 것이 우리나라와 홍콩의 가장 큰 교류로 기록된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5개의 무역상사의 지사가 홍콩에 진출하고, 외환은행이 개점하는 등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교민인구는 250명 정도였으며, 교포2세들의 한글교육을 위하여 홍콩 한국학원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주 홍콩 총영사관 홈페이지).

1969년 정부의 수출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Korea Center가 설립되어 우리 상품의 광고와 각 상사의 진출을 위한 기지 역할을 하면서 교민인구는 점차로 늘어났다. 1970~80년대에도 국내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많은 주재상사가 진출했으며, 이후 현지에서 퇴직하여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인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주 홍콩 총영사관 홈페이지).

나. 베트남 재외동포의 특징

한국인의 베트남 이민은 1975년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단절되었던 한·베트남 간 수교가 탈냉전의 분위기를 타고 재개됨으로써 다시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위기를 느낀 베트남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이후 1990년 구 소련, 199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한·베트남의 수교는 이러한 외교적 맥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교 이전에도 개방화의 물결을 따라 1983년부터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있었다. 처음 한국과 베트남의 직교역이 시작된 것은 1988년의 일이며, 한국 정부가 대 베트남 직접 투자를 허용한 것은 1992년 1월이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 16억8천6백만 달러(미화)를 수출하여 16.7%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1년에는 17억3천2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2.7%의 성장을 나타냈다.

수입 면에서는 2000년에 3억3천2백만 달러, 2001년에 3억8천6백만 달리를 기록하여 각각 22%, 19.6%의 급성장을 보였다. 투자 면에서 보아도 2000년에 74건, 1억6천6백만 달러에서, 2001년 332건, 32억 5천9백만 달러로 상당한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교류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한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Hung, Pham Viet, 2000).

2001년 현재 베트남에는 총 86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남자는 593명이며, 여자는 268명으로 이 중 2/3정도인 582명이 수도인 하노이 시에 거주하고 있다. 전원이 일시 체류자로 직업적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상사 주재원이 396명으로 전체의 50%정도를 차지한다. 이밖에 공기업 주재원이 46명, 상업 27명, 서비스업 종사자가 15명으로 기업 주재원에 비하면 적은 수이다. 교민의 30-40%가 무직업자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은 범죄 등의 이유로 도피 형태의 이주를 한 경우로 교민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교생 이하 취학연령 인구는 202명으로 집계된다(외교통상부, 2001).

다. 태국 재외 동포의 특징

2001년 외교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남자 5,946명과 여자 3,924명을 합하여 약 10,000명 정도이다. 그 중 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자는 각각 21명과 41명으로, 대부분의 거주자가 일시 체류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2,460명으로 대부분이 관광산업 관련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밖에 주재원이 약 400명, 상업 종사자가 약 800명 정도이다. 여자의 경우 남편의 직업에 따라 이주해온 가정주부가 대부분이며, 고교생 이하의 취학연령 아동은 488명인 것으로 집계된다(외교통상부, 2001).

태국으로의 한국인 이민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한 징용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이민 1세대들은 태국에 정착하여 대부분 무역·제조업에 종사하였다.

2. 한국학교 시설 및 학교 소유 현황

한국학교의 시설은 임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홍콩의 경우는 대지는 1995년부터 50년간 임차한 것이며, 건물은 1994년 준공된 것으로 학교 소유이다. 호치민과 방콕 한국학교는 현재 임차한 것이나, 방콕의 경우 현재 학교 건물을 건축 중이며, 2003년 2월 신축 교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홍콩 한국학교의 교지 면적은 3,960m², 교사는 6층 1개동으로 건평은 8,448m²이다. 호치민 한국학교의 경우는 교지 면적이 8,000m², 건평은 2,670m²이며, 방콕 한국학교는 교지 면적 3,360평, 건평은 545평이다. 일인이 차지하는 건면적을 살펴보면, 홍콩은 약 23m²이고, 호치민은 약 7.4m², 방콕은 약 6.8평으로, 일인당 건면적만으로 판단할 때, 홍콩의 경우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형편이 좀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급 수를 비교할 때 홍콩은 31개로 학급당 평균 인원이 한국어 과정의 경우 약 10명이며, 영어 과정의 경우는 약 20명으로 한국어 과정의 학생수가 영어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호치민 한국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으로 총 1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로 시설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방콕 한국학교의 일반 학급 수는 14개이며, 학생 총수는 8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급은 이중 일부분으로 이는 방콕 한국학교가 설립 초기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콩 한국학교의 경우 컴퓨터 실습실과 도서실, 미술실과 작업실, 음악실, 어학 실습실, 큰 규모의 실내 수영장, 체육관과 음악당, 식당, 테니스 코트, 실외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이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어 과정의 심한 재정적자 문제로 양 과정상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설 사용 권한에 있어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호치민의 경우도 국내의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환경이 나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인근 국제학교와 비교하여 본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학급당 인원 기준이 30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학부모들은 그 기준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태국 방콕 한국학교는 과학실, 도서실, 예능실 등의 특별교실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그 시설은 질적인 면에서 매우 열악한 설정이다. 이는 현재 학교 시설을 임시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사를 건축 중에 있으며, 이밖에 강당 및 체육관 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2003년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표 III-2> 홍콩 · 호치민 · 방콕 한국학교의 시설현황 (2002년 현재)

구분	교지	교사	연건 평	일반 교실	특별 교실	관리실	체육실	운동장	테니스코트	기숙사	화장실	강당	급식소	관사
홍콩	실수 1 면적 3960 m ²	1동 6층		31 8448	9 4190	4 625	4 210		1 2000	1 610		8 458	1 610	
호치민	실수 1 면적 8000	17 896		11 2670	5 935	1 425		107		3300		24 128		1 84.6
방콕	실수 1 면적 2260			20 545										2

3. 학교 운영 현황

한국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 인가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교사를 파견하는 등 공립학교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지에서는 사립학교의 성격이 강하다.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 즉 예산 · 결산 심의 및 의결권 등

재정에 관한 사항,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주요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은 대부분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교육부는 현지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파견교장의 권리보호를 위해 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재단 이사장은 한인회의 회장이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과과정 운영 등 일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일반적으로 교장에게 있다.

홍콩과 호치민의 한국학교는 위와 같은 한국학교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다만 호치민 한국학교의 교장은 재단의 이사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들에 대한 지도·관리 권리가 없기 때문에 행정관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등 그 권리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콕 한국학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방콕한국학교는 2002년 3월 설립되어 현재 파견교장 없이 임시 교감직무대리가 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타 한국학교에 비해 파견된 교장의 권한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한정짓고 있다. 재단의 역할을 주재국 학교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누고, 인가 전에는 학교 교육장 설치 및 학교 재정을 위한 모금 및 소득사업에, 인가 후에는 학교 재정을 위한 모금 및 소득사업에 국한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영과 관리 및 재정관리와 교직원 인사에 관한 결정권을 교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III-3> 홍콩·호치민·방콕 한국학교 운영의 실제 (2002년 현재)

	재단명칭	이사장	구성	기능
홍콩	한국국제학교 재단이사회	이순정(한 인회회장)	총19명	교직원인사권, 예산결산심의 및 의결권, 주요교육프로그램결정권
호치민	한국학교 이사회	류재목	총22명(당연직이 사 7인포함)	최고의결기구
방콕	KISB corporation	전원수(한 인회장)	총12명	학교재정을 위한 모금 및 소득사업

4. 교직원 현황

홍콩 한국학교의 사무직·기능직 직원을 제외한 교사의 수는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을 합하여 총51명이다. 이 중 한국어 과정의 교장과 영어 과정의 교감, 그리고 한국어 과정의 파견교사 3명을 제외하면, 모두 현지채용 교원이다. 역대 파견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88년 처음 교장직무대리인 교사 2인이 파견된 이래로, 2002년 4월 현재까지 교사 14명, 교장 3명이 파견되었다. 호치민 한국학교는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28명이 현지채용 교원이며, 방콕의 경우는 2003년 1월 1일자로 교장직무대리 교감이 파견될 예정이나 현재 파견교원은 없는 실정이다. 총 교사 수는 임시 교감직무대리를 포함하여 12명이다.

현지채용 교원에는 강사와 외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홍콩은 한국어 과정 강사가 5명, 영어 과정 강사가 2명으로 총 7명의 강사를 두고 있다. 외국인의 수는 현지채용 교사 중 한국어 과정에 4인, 영어 과정에 30인으로 영어 과정의 경우 32명중 30명이 외국인이다. 이들은 주로 영어 및 현지어 등 외국어 과목, 영어로 진행하는 기타 과목을 담당한다.

호치민의 경우에는 강사의 비중이 더욱 높다. 호치민 한국학교에는 원어민 영어 강사 7인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강사가 있다. 이는 총 교사수의 50%를 넘는 비중이다.

방콕 한국학교의 현지채용 강사는 6명이며, 외국인 교원의 수는 5명이다. 방콕의 경우 현재 교원 전원이 강사이다. 이는 방콕 한국학교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조건임을 말해준다. 또한 교원 중 외국인의 수가 많은 것은 한국학교가 외국에 설립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교민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콩, 베트남, 태국 모두 현지채용 교사는 물론 강사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즉 컴퓨터 교사나 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지채용 교사라고 할지라도 현재 본국 학교에서 고용휴직 상태인 자 혹은 주재 상사원 부인 중에 교원자격을 소지한 자 등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콩과 베트남의 음악과 미술 과목은 현재 교원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호주나 뉴질랜드 혹은 필리핀 출신이 다수이며 경험에 부족하여 교사의 수준에 있어서 다른 국제학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4> 홍콩·호치민·방콕 한국학교의 교직원 현황 (2002년 현재)

※()는 외국인

	교장	교감	파견		현지	강사(외국인)	사무직	계
			남	여				
홍콩	한국어	1(파견)		2	1	15(4)	4(1)	23(5)
	영어	1(1)	1(1)			32(30)	1(1)	
호치민	1	1	2		16	12(7)	16	46(7)
방콕						6(5)	1	6

5. 학생 및 졸업생 현황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 과정은 초등과정과 고등과정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학교 재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53명으로 전체 재학생 73명 중 약 73%를 차지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에 5명, 2학년에

8명, 3학년에 6명이 재학중이다.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 과정의 역대 초등학교 졸업생의 수를 살펴보면, 1998년에 14명, 1999년에 14명이다가 2000년에는 4명, 2001년에는 3명으로 줄었으며, 2002년에는 한명도 없었다. 중학교 졸업생의 경우 매년 5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2002년 4월 현재 재학생이 없으므로 2003년에는 졸업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5> 홍콩 한국학교 졸업생 현황 (2002년 현재)

졸업년도	계	02	01	00	99	98
한국어	유치원	92	18	4	15	12
	초등	66	.	3	4	14
	중등	27	5	5	3	4
	고등	40	13	12	15	.
영어	유치원	99	.	13	11	21
	초등	163	(34)	31	17	15
	중등	40	(19)	7	6	2

이런 현상이 빚어진 원인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자녀를 인근의 영국이나 미국에서 설립한 국제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처음부터 자녀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3국 국제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재외동포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65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89명, 고등학생은 24명으로 유치원을 포함하여 제3국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수는 409명에 이른다. 이는 홍콩의 전체 고등학교 이하 학년기 재외동포 학생 수 613명의 68%에 이르는 숫자이다.

홍콩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망은 홍콩 한국학교 영어 과정 재학생 추이를 통해도 나타난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한국어 과정의 학생

수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근까지 영어과정의 재학생 수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현 영어 과정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93명, 중학생 33명으로 한국어 과정보다 월등히 많다. 여기에 외국국적의 재학생 147명을 더하면 영어과정의 총 재학생 수는 284명이다. 그러나 현재 영어과정 재학생 중 중학생 수가 상당히 적고, 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학부모의 제3국 국제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영어 과정의 재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이한 점은 한국어 과정에 중학생이 한 명도 없는 반면, 고등학생은 19명이 재학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어 과정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주요대학의 특례입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가 입시준비에 유리하다는 점이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대학보다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고등학생의 전입수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호치민 한국학교는 98년에 설립되어 99년에 처음으로 유치원생 10명,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명 등 총 1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로 현재까지 유치원 26명,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8명이 졸업했다. 금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8~9명으로 추산되며 모두 국내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생 8명, 초등학생 129명, 중학생 49명, 고등학생 26명으로 총 재학생 수는 220명이다. 홍콩 한국학교와 비교해 볼 때 그 분포가 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근의 제3국 국제학교와 비교해 보아도 홍콩보다는 호치민의 한국학교 재학률이 높다. 재외동포의 제3국 국제학교 재학생 수는 유치원은 15명, 초등학교는 60명, 중등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15명으로 총 115명이다. 한국학교 재학생 대 국제학교 재학생의 비중이 2:1정도로 한국학교 재학생이 약 5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방콕 한국학교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교가 어렵다. 현재 학교

에서 초등과정만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초등학생 70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현지 정규학교와 인근 국제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2002년에 한국학교가 설립되었으므로 2001년 현재 488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취학연령의 학생들이 제3국 국제학교와 현지에 설립된 사립학원 등에 재학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6> 홍콩 · 호치민 · 방콕 한국학교 재학생 현황 (2002년 현재)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비고	계
홍 콩	한국어	학급	6	0	3		9
	한국어	학생	54	0	19	고3은 6명	73
	영어	학급	10	4	0	장애아특	16
		학생	103	34		수학급:2 (학생19)	137 147
호 치 민	한국어	학급	1	6	3	고3학급 없음	12
	한국어	학생 (모두일시체류)	8	137	49	모두일시 체류	212
방 콕	한국어	학급					
	한국어	학생	80				80

<표 III-7> 홍콩·호치민·방콕 한국학교 학년별 재학생 현황(2002년 현재)

			유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홍	한	학급		2	1	1	1	1		0	0	0	1	1	1
	국	학생		24	7	10	6	1	6	0	0	0	5	8	6
콩	영	학급		1	2	2	1	2	2	2	1	1	.	.	.
	어	학생		28	41	33	25	37	34	29	19	19	.	.	.
호치민	학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학생		8	22	28	20	30	19	18	20	18	12	11	12	14
방콕	학급		1	1	1	1	1								
	학생		20	22	19	9	15								

<표 III-8> 재외동포의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현황 (2002년 현재)

		유치원	초	중	고	계	비고
홍·콩	현지	5	18	8	5	36	고교생이하취학 생수 : 613명
	국제	31	265	89	24	409	
	계	36	283	97	29	445	
호치 민	현지		10	5	5	20	
	국제	15	60	35	15	115	프랑스학교 포함
	계	15	70	35	15	135	

6. 교육과정 현황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국내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현지 사정에 따라

교장의 권한으로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과정은 본국의 7차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외국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특성상 영어 및 현지어 수업의 비중이 높고, 세계사와 체육 등 기타과목의 경우에도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 과정 초등학교의 경우 3~6학년이 1일 8교시씩 주5일 동안 총 40시간의 수업을 받는데, 이중 한국어 교육과정시간은 24시간이며, 영어 10시간과 만다린 2시간 및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도덕과 체육을 포함하여 주당 18시간의 외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업의 42%가 영어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부의 경우는 총 40 이수단위 중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이 9시간으로 25%의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영어 5시간을 합하면 전체 수업의 35%가 영어와 관련된 수업이다. 특이한 점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국어 관련과목의 이수시간이 각각 12, 13시간, 수학이 6, 8시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내대학의 특례입학을 염두에 둔 교과과정 편성으로 보인다.

홍콩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학교가 홍콩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더욱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영어 과정에 더 많은 재외동포 학생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홍콩 한국학교의 영어과정의 경우 교감을 제외한 교장 및 일반교사 32명중 30명이 외국인인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과정을 제3국 국제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영어 과정에서는 영국국립 국제학교의 모델을 기본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영어권 국가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어나 수학 등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스포츠나 음악, 미술과 같은 분야의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31개의 다양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는 호치민과 방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호치

민의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주당 42시간의 수업시간 중 영어시간이 13시간이다. 이밖에도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과목만 특별히 능력별 우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을 영어의 날로 정해서 이날은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하루동안 학교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42시간의 수업시간 중 14시간이 영어시간이다. 방콕 한국학교에서는 초등과정에서 매일 2시간 씩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표 III-9> 호치민 한국학교 초등과정 주당 수업 시수

과목	주당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 어	7	7	6	6	5	5
수 학	4	4	4	4	4	4
사 회			2	2	2	2
과 학			3	3	3	3
체 육			2	2	2	2
음 악			2	2	1	1
미 술			2	2	2	2
실 과					1	1
도 덕			1	1	1	1
영 어	9	9	9	9	12	12
재량(컴퓨터)	1	1	1	1	2	2
재량(한문)					1	1
특 활	2	2	2	2	2	2
바른 생활	2	2				
슬기로운 생활	3	3				
즐거운 생활	6	6				
계	34	34	34	34	38	38

7. 재정 현황

가. 정부 지원 및 기타 세입 부문

홍콩 한국학교의 2001년도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 3,649,000 달러(미화) 중 한국정부의 지원은 143,000 달러로 3.9%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입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로 전체 세입의 8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한국정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설립 당시에 학교 설립에 투자되는 비용을 재단 이사회와 50%씩 분담하였다. 그 이후 92년에 신축교사 건물증축 명목으로 3,761,349 달러를 지원한 이래로 96년, 99년, 그리고 2001년에 각각 VTR, Computer의 구입비 등으로 12,000 달러에서 28,000 달러 정도를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매년 운영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72,000 달러를 지원해 왔는데,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109,749 달러와 128,600 달러로 그 액수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10>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과정 운영비 지원 내역 (단위: US\$)

연 도	지 원 금 액	내 역
1992.3. ~ 1995.2.28		
1995학년도	72,000	교사 인건비 43,200, 운영비 28,800
1996학년도	72,000	
1997학년도	72,000	
1998학년도	83,040	현지교사 인건비 60,000, 운영비 23,040
1999학년도	83,040	현지교사 인건비 60,000, 운영비 23,040
2000학년도	109,749	현지교원 인건비 85,800, 운영비 23,949
2001학년도	128,600	현지교원 인건비 105,600, 운영비 23,000

<표 III-11>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과정 시설비 지원 현황 (단위: US\$)

연 도	지 원 금 액	내 역
1992.3.1 ~ 1995.2.28	3,761,349	신축 교사 건물 증축
1995학년도	268,000	4개교실 및 도서관 1실 건축비
1996학년도	18,480	VTR, Computer 및 복사기 구입
1999학년도	12,000	행정용 Computer 12대 구입
2001학년도	28,641	교단 정보화 1단계 시설

호치민 한국학교의 경우 2000년 현재 총 세입 931,303 달러 중 정부 지원금은 289,000 달러로 30%를 조금 넘는다. 이는 홍콩 한국학교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99년에도 정부는 호치민 한국학교에 231,601 달러를 지원하여 총 세입의 약 30%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세입으로는 학생의 수업료가 480,712 달러로 51%를 차지하며, 입학금이 36,119 달러로 4%, 통학 버스비가 27,409 달러로 전체의 3%를 충당하고 있다. 교민과 재외동포재단의 기부금은 7,684 달러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콕 한국학교의 경우 설립초기에 정부에서 123,642 달러(5,329,427바트)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시설비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표 III-12> 2000년 호치민 한국학교 세입 내역 (단위: US\$)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정부 지원금	289,000	현지 채용교사 인건비 : 145,200 운영비 : 73,800 임차료 : 40,000 기타(대출금 상환) : 30,000
입 학 금	36,119	유치원 : 300 \$ × 15명 초등 500 \$ × 52명(유치원에서 초1입학시 200 \$) 중등 500 \$ × 13명
수 업 료	480,712	유치 250 \$ × 20명, 초등 280 \$ × 118명, 중등 350 \$ × 37명, 고등 400 \$ × 10명 (교사 자녀 16명 면제, 자녀 2인 10% 감면, 3인 20% 감면, 중간 입회학시 수업료 감면 및 반환)
통학 버스비	27,409	통학버스 이용시 22 \$/1인(185명)
기 부 금	7,684	(교민 기부금, 재외동포 재단)
잡 수 입	25,197	예금이자 425, 잡수입 4,072 기타(주택비상환금 등) 20,700
이사회 지원		
주재국 정부보조		
토 요 교 실	15,350	
전년도 이월	49,832	
계	931,303	

<표 III-13> 홍콩 · 베트남 · 태국 한국학교의 세입 내역 비교

	정부지원	수업료	기부금	기타
홍콩	3.9%	82.1%	2.8%	
호치민	31%	51.6%	0.8%	통학버스비, 토요교실수입
방콕	5,329,427 (바트)			정부지원은 설립초기지원

나. 세출 부문

세 학교 모두 인건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한국학교의 경우

는 1999년에는 전체 세출의 67.5%, 2000년에는 72.9%, 2001년에는 70.6%를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호치민 한국학교에서는 인건비 지출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년에 47%, 2000년에는 52% 였다. 방콕의 경우는 월 12,000 달러(미화)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홍콩 한국학교는 2001년에 운영비로 총 세출의 5.2%를 지출하였으나, 호치민과 방콕의 경우는 약 20%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시설비 및 수업 기자재의 확충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 한국학교는 한국어 과정만으로 볼 때 65,000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세입의 대부분을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어 과정의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어 과정의 적자를 영어 과정의 수업료로 충당하고 있는 설정인데, 이는 두 과정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홍콩 한국어 과정은 92~94년 사이에 교사를 신축하면서 생긴 부채 2,785,714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2001년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과정 세출내역(단위:1000 US\$)

항목	예산액	%
인건비	2,177	70.6
운영비	159	5.2
유지보수비	63	2.0
기타	683	22.2
계	3,082	100

<표 III-15> 2000년 호치민 한국학교 세출내역 (단위: US\$)

구 분		정부지원	기타수입	계	내 역
인 건 비	현지채용교사	145,200	312,621	457,821	24명/12개월
	고용원	17,374	4,954	22,328	17명/14개월
	기타		9,786	9,786	
	소계	162,574	327,361	489,935	
운 영 비	공공요금	28,258		28,258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용
	실험실습비	14,207	16,925	31,132	교재, 소모품, 행사비
	도서구입비		1,165	1,165	
	복리후생비	13,961	112,529	126,490	급식비 6000/월 의료비, 보험, 통학버스비등
	기관운영비		2,373	2,373	교사모임, 접대, 경조비, 지역발전금
	소계	56,426	132,992	189,418	
	자산취득비		12,795	12,795	컴퓨터, 금고, 캐비넷 구입등
	임차료	40,000		40,000	2500/8개월 5000/4개월
	대출금상환	30,000		30,000	개교시 대출금 상환 완료
	시설비		4,415	4,415	
	주택비대출		15,300	15,300	교사 주택 임차시 보조
	토요교실		15,073	15,073	
	기타		83,403	83,403	
	작년 이월금		50,964	50,964	
합계		289,000	642,303	931,303	

다. 학생 부담금 부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생 부담금은 세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 부담금은 크게 입학금과 수업료, 통학 버스비로 구분된다. 홍콩 한국학교의 경우 영

어 과정의 수업료가 한국어 과정에 비해 약 50%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과정의 초등학교 수업료는 월 607달러(미화), 고등학교는 월 788달러이며, 영어 과정의 경우는 초등학교 월 902달러, 중·고등학교 월 992달러이다. 이는 현지 정규학교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현지 공립학교는 9년 동안 무상 의무 교육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다. 현지 사립학교의 경우도 초등학교 수업료가 월 100~125 달러, 고등학교가 월 195달러로 한국 학교의 한국어 과정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현지에 소재하고 있는 제3국 국제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수업료가 564~805달러, 고등학교가 850~1440달러이다. 여기에 기타 교육비(유·초등학교 78달러, 중·고등학교 23달러)를 더하면 국제학교는 홍콩 한국학교 한국어 과정에 비해서는 적계는 1.2배에서 많게는 2배 가량 비싸며, 영어 과정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약 1.5배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입학금은 한국학교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 및 현지 사립학교, 그리고 현지 제3국 국제학교가 모두 65달러 정도로 비슷하며, 통학 버스비도 월 43달러 정도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치민 한국학교의 수업료는 유치원 월 200달러, 초등학교 월 230달러, 중등학교 월 300 달러, 고등학교 월 350달러이다. 입학금이 유치원 300달러, 초·중·고등학교 500달러로 홍콩과 비교할 때 수업료에 비해 입학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는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현지 초등학교의 수업료가 월 20달러인데 반해, 입학금은 그의 5~15배나 되는 100~300달러이다. 국제학교의 수업료는 초등의 경우 월 800달러, 중·고등의 경우 월 1000달러이며, 입학금은 22,000달러에 이른다.

호치민의 경우 학교에 따라 수업료의 차이가 많이 난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학교는 현지학교의 14배이며, 국제학교는 한국학교의 약 3배이다. 이것이 홍콩 한국학교에 비해 호치민 한국학교의 재학생이 많은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외동포 자

녀의 수가 많은 것은 주재 상사원의 경우 기업에서 자녀의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콩과 마찬가지로 호치민 재외동포 학부모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콕의 경우는 입학금 240달러, 수업료 학기당 480달러, 통학 버스비가 학기당 285달러로 타국에 비해 통학 버스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6> 홍콩 · 호치민 한국학교 및 현지학교 · 국제학교 수업료 비교

(단위:US\$)

		한국학교		현지학교	국제학교	비고
		한국어	영어			
홍콩	유			65-100	250-700	
	초	607	902	100-125	564-805	
	중		992	123	830-968	
	고	788		195	850-1449	
호치민	유	250		20	380	
	초	500		20	800	
	중	500		20	1000	
	고	500		20	1000	

8. 부설 한글학교 운영

홍콩과 호치민의 한국학교에서는 부설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주체는 한인회이며, 한국학교의 역할은 사용료를 받고 교실을 대여하는 정도이다. 홍콩 한국학교 부설 주말 한글학교는 초등학생 250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3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한글 또는 국어 학습이 부족한 교민 학생을 위해 30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글학교 재학생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 때문에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한글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글학교는 연중 토요일 4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수는 20명, 수강료는 월70달러(미화)이다.

호치민 한국학교 부설 주말 한글학교의 재학생은 한국학교 재학생에 적은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초등학생이 43명, 중학생이 6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한국학교 재학생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이민 역사가 짧으며, 대다수의 교민이 일시 체류민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글학교 강사수는 9명이며, 수업은 홍콩 한국학교와 마찬가지로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운영된다. 수강료는 월 200달러로 홍콩에 비해 비싸다.

IV. 홍콩 · 베트남 · 태국 한국학교 관련자 교육 요구조사

1. 설문연구 결과

설문지는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용 두 종류로 제작되었다(<부록 I-1>과 <부록 I-2> 참조). 설문의 목적은 한국학교의 각 영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한국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있다. 설문지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질문, 교직원 관련 질문, 교육과정 및 내용 관련 질문, 재정관련 질문, 학교주변기관의 역할 관련 질문, 기타 한국학교의 당면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부모 대상의 설문에서는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한국학교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았다.

가. 설문 참여자 분석

교직원용 설문 참여자는 홍콩에서 18명, 호치민이 9명, 방콕이 6명으로 총 33명이다. 홍콩의 4명과 호치민 1명의 파견교원을 제외하면 모두 현지채용 교원이었다. 홍콩 한국학교에서 이사회 임원 1인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1인의 의견이므로 이사회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是很 어렵다고 생각된다.

학부모용 설문에는 홍콩에서 41명, 호치민에서 9명, 방콕에서 56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홍콩과 호치민은 주부와 자영업자, 기업 주재상원, 현지회사 직원이 골고루 있었으며, 방콕은 자영업자와 현지회사 직원이 대부

분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녀를 모두 한국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였다. 1명의 학부모만 자녀가 국제학교에 재학중이라고 답했으며, 홍콩의 학부모 중 절반 가량이 한국학교와 국제학교, 그리고 한국학교와 현지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나, 홍콩의 응답자 41명 중 20명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나. 한국학교에 대한 인식 분석

학부모들은 대부분 한국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학부모들은 한국학교 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및 한국교육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국 국제학교와 같은 다른 학교에 보내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서 학부모의 대부분은 외국학생과의 자연스러운 경험과 영어 등의 외국어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장래 계획으로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자녀를 외국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부모가 자녀를 외국학교에 보내면서 한국어 실력감소와 귀국 후 적응문제, 대학입시 준비와 관련된 문제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설의 질적 향상, 우수교사 유치, 외국어 교육 강화,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 귀국 후 적응교육 강화 등을 한국학교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우수교사 유치와 외국어 교육 강화를 꼽았다. 그러나 자신들이 바라는 사항이 개선된다면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생각해 보겠다'와 '그렇지 않다' 등의 부정적인 대답이 2배 정도 많았다.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상당수가 한국인이므로 당연히 한국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유리한 점으로는 귀국 후 적응, 한국어 교육, 대학입시 준비 등을 꼽았다.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홍콩, 베트남, 태국의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절반은 ‘그렇다’에, 절반을 ‘그렇지 않다’에 답했다.

학부모들은 한국학교의 교사 수준 및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학교에 대한 열등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6명 중 43명이 ‘그렇다’, 38명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1명에 불과해 학부모들의 한국학교에 대한 불만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의견 분석

(1) 시설에 관한 의견 분석

홍콩에서는 학부모들이 특별학급이 증가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없었다. 그러나 호치민 한국학교는 교사용 설문조사 결과 시설 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의 응답자 중 5명이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편이라고 답했으며, 체육시설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역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교직원 편의시설과 행정장비 및 교육기자재 등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방콕 한국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6명 전원이 학급당 학생수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의 30%는 학급당 학생수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견에 차이를 보인다. 방콕의 특이한 점은 학부모와 교사들 모두 기숙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점이다. 이를 통해 방콕 한국학교의 경우 원거리 통학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콕의 경우도 호치민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상당수가 교직원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필요치 않다는 답이 많은 홍콩과 대조를 이룬다.

<표 IV-1> 교직원 및 학부모의 시설에 관한 요구 분석 결과

- 각 학교 관계자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

	홍콩	베트남	태국
교직원		일반학급수, 체육시설, 교직원 편의시설, 행정 장비 교육기자재	기숙사, 교직원 편의시설
학부모	특별학급	체육시설	일반학급수, 기숙사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분석

학교 운영에 관한 질문은 학교 운영의 영역을 예산, 교원 인사, 규칙 제정, 교육 과정 운영, 감사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현재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와 앞으로 그 영역에서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해 답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질문에서 특이한 점은 앞으로 학교 운영을 담당해야 할 주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 중에서 무응답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응답에 따르면 홍콩 한국학교에서는 재단 이사회가 예산 운영과 교원 인사, 감사에 있어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교원 인사에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늘어나야 하며, 감사의 역할은 대한민국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호치민 한국학교는 홍콩 한국학교에 비해 교장의 권한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치민 한국학교의 교육부 보고서를 기초로 한 문현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을 끈다. 문현연구에 의하면 교직원 인사, 학교 예·결산 심의, 기부금 모집 및 관리, 주요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교원 응답자 9명 중 4명이 예산운영 주체를 교장이라고 답했으며, 교장은 이밖에도 교원 인사, 규칙 제정,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응답에 의하면 교원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재단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호치민의 교사들은 규칙 제정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교사협의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들과 의견을 같이한다. 단, 감사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감사의 미래 주체로 대한민국 정부를 꼽았으나, 학부모들은 감사에 관해 학부모회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콕 한국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제외하고는 재단 이사회가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방콕에서도 교원 인사, 규칙 제정,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앞으로 파견될 교장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감사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재단 이사회가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예산운영과 교원인사,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학교규칙 제정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협의회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 교직원 관련 의견 분석

호치민 한국학교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파견 교원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채용 교원이나 강사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이는 교사 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원자격 소지를 교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교원의 교과관련 능력 향상, 외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 이해 능력 향상 등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연수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모두 연수기회 확대, 연수의 질적 향상, 연수내용의 다양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3국의 교원들이 모두 교원의 임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와 흥미를 끈다. 홍콩의 학부모는 50% 가량이 교원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방콕에서도 교원의 임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호치민 학부모들은 교직원들의 임금이 현 상태로 유지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교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은 교원의 법적지위 보장과 경력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치민 한국학교 전체 응답자 9명 중 8명이, 방콕 한국학교 응답자 6명 중 5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해 교원들의 법적지위 보장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마.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 분석

예상대로 홍콩 한국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은 연계교육과 영어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한글교육과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영어교육을 강조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답했다. 호치민 한국학교의 경우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영어교육의 강화를 현재 한국학교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방콕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교사는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반

해, 학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한글교육을,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교육으로 영어교육을 꼽았다.

한국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재는 대학입시관련 자료 등 한국 교육상황을 반영한 교재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현지 상황을 반영한 교재 및 영어·현지어 교재, 한국문화 및 한국어관련 교재, 예체능 및 특별활동 교재와 한국문화 및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교재 모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다. 방콕 한국학교의 교원들은 특히 예체능 및 특별활동을 위한 교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바. 재정에 관한 의견 분석

정부 재정지원 증가와 안정적인 재정수급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3국의 교원과 학부모들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학교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한 점은 학부모들이 교사들에 비해 재정지원의 증가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교원들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10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반면, 학부모의 경우 ‘200%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답한 학부모도 상당수 있었다.

3국의 교원과 학부모 모두 학생 부담금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호치민의 교원들은 1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이 학생 부담금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학생 부담금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호치민에서는 학부모들이 수업료와 비교하여 교육의 질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해 학부모의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 정부 및 학교주변기관에 관한 의견 분석

한국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들은 한국학교와 관련한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정지원 증가를 꼽았다. 이밖에 호치민 한국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들은 파견교원의 증가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가 학교 운영에 관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호치민에서는 교원의 70%이상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반대로 방콕에서는 학부모들은 정부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개입해 주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70%를 넘었으나, 교원들의 경우는 거의 전원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 대조를 이룬다.

3국의 교원과 학부모들은 모두 교육영사를 정부와 한국학교 사이의 중간 연락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교육담당 영사가 정부의 한국학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호치민의 교원들은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교육담당 영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 한국학교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 분석

홍콩 한국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른 한국학교의 정체성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33명 중 17명이 학생 수 감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홍콩 한국학교의 교원들은 정부지원 등 재정 부족 문제와 재단 이사회의 역할 비대 문제를 홍콩 한국학교가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한국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호치민 한국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 수 감소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르면 호치민에서도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호치민 한국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재정지원 등 재정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방콕 한국학교 교원들은 정부 재정지원 등 재정 부족 문제와 재단 이사회의 역

할 비대가 문제라고 답했다.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학생 수의 감소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으며, 50%의 학부모가 교사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표 IV-2> 세 지역 한국학교 관계자의 한국학교 당면 문제에 관한 의식 비교

	홍콩	베트남	태국
교직원	학생수 감소 재정부족 재단이사회역 할 비대	재정부족	재정부족 재단이사회 역할비대
학부모	학생수 감소 재정부족 재단이사회역 할 비대	학생수 감소	학생수감소 교사간 갈등

2. 면담연구 결과

면담연구의 대상자는 현지 한국학교의 관계자로 한국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실질적인 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 이사장과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한국학교의 수요자인 학부모 및 한국학교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관이 그 대상이었다. 면담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현지의 한국학교와 공관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입장에서 솔직한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가. 홍콩 한국학교

(1) 이사장 및 총교장 면담²⁾

(가) 한국학교 설립 과정

한국학교는 10년 전 홍콩정부로부터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홍콩 Chief Secretary 초청으로 한국 교민들과의 회의를 가진 적인 있었는데, 이 때 한국교민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자녀들이 다닐 학교라고 제안함으로써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홍콩정부는 학교에 대지를 지원하는 대신에 학교 이름을 한국학교라고 하지말고 국제학교라고 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한다. 후에 한국정부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요구한 것이 현재 두 교육과정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되었다는 것이 총교장의 설명이었다.

(나) 한국학교의 당면문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초기에는 한국어 과정 수요가 많았는데 현재는 영어 과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 과정은 현재 중학교 과정의 경우 학생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영어 과정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을 조금이라도 시설이 좋은 국제학교에서 시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영어 과정도 위축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사장과 총교장은 현재 국제학교들간의 경쟁에 있어서 홍콩 한국국제학교의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홍콩한국학교는 한국어과정과 영어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과정은 교육부 과견교장이, 영어과정은 현지채용교장이 최고책임자로 있으며, 이 두 과정을 총괄하는 총교장을 두고 있다. 현재 총교장은 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사장은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교육과정을 합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재정 운영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사장의 견해이다. 이 경우 이사장이 예상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모델은 한국사, 한국어 등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다른 국제학교의 예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과 총교장의 경험적 근거에 의하면 홍콩지역은 한국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보다는 국제교육의 요구가 더욱 강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어, 한국역사 등의 교육적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들은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들은 국제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지역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경쟁에 있어서 교민자녀의 경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장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한국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가능한 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에서 교육과정의 융통성을 허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으며, 학생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명분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교 운영에 기업적 경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사장과 총교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현재 적자 운영을 흑자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적 재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학교의 교육적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다.

(라) 정부 요청 · 희망사항

이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우선 교사 파견시 그 역할과 기능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절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현지학교의 실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재단이사회에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어 과정만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 과정의 통합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영어로 된 양질의 교재 제작과 공급을 꼽았다. 교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재 영어 과정의 경우처럼 캐나다 역사를 가르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어 과정이 150명의 외국인 학생과 교사들에게 한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영어과정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 교장 면담

교장 역시 홍콩 한국학교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수 감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학교 교장은 한국어 과정뿐만 아니라 영어 과정도 다른 국제학교와의 경쟁으로 학생수 감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어 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의 40%를 영어로 운영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학교가 국제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구나 홍콩 경제사정에 따라 홍콩 내의 외국인 수가 감소하면서 다른 국제학교에서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영어과정 학생들도 다른 국제학교로 빠져나가는 현실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학교 교장은 한국학교의 의무교육화를 제안하였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 운영상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이고, 학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교장이 제안하는 의무교육화는 일본인학교의 경우와 같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제를 의미한다.

교장은 재외동포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는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 외국국적의 영주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과 한국국적의 일시 체류민에 대

한 교육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일시 체류민을 위한 한국학교 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적교육에 한해서 정부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주동포를 위한 교육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일시 체류민을 위한 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등 관할 기관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3) 파견교사 면담

(가) 한국학교 당면문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파견교사들도 역시 학생수 감소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파견교사들은 학생수 감소의 주요 원인을 영어교육에 대한 맹목적 수요증가와 국외 대학 진학희망자 증가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은 2년 전부터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학교 학생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은 한국학교의 학비가 현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있다고 했다. 이들의 경우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현지학교나 혹은 질이 낮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어림잡아 300~5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들은 토요학교의 운영도 한국학교 학생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토요학교에서 축소된 한국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최소한의 연계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한국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현재 토요학교에서는 초등의 경우 국어 4시간, 중학교의 경우 국어 3시간, 국사 1시간,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4시간을 가르치고 있다. 토요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초등학생 260명(모두 국제학교 재학생), 중·고등학

생이 120명 정도이다. 토요학교의 수업료는 월 600달러(미화)로, 기업의 경우 토요학교의 수업료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요학교가 한국학교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인회로 토요학교의 수입 전액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토요학교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토요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인회와 토요학교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설학원((주)대교 등)의 진출도 한국학교의 한국어과정 수요를 대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중등과정의 경우 교과과정이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와 같이 야간 자율학습과 국어, 수학 중심의 보충수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학생들도 대학입시를 위한 개인 과외를 받는다고 했는데, 현지 과외 비용은 국어교과의 경우 시간당 600~900달러 정도로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한 비용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학교 보충수업의 경우는 시간당 90달러 정도의 저렴한 수업료를 받고 있다. 학생수의 유지·증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방침(7차교육과정) 보다는 대학입시 중심의 교과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름학교(summer school) 운영을 제안하였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름학교를 통해 한국학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다. 현지 재외동포들 중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한 상태이면서도 미국의 역사는 재미있고 한국의 역사는 재미없다는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 한국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

이들은 해외 한국학교 교재, 교사용 지도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의 '교사용 지도서'조차 제대로 제공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국내에 우선적으로 제공된 다음 한국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는 형편이라고 했다. 학생 및 교사용 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교과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교육진흥원과 교육과정평가원간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수익을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교사들은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한국어 과정에 6학년 학생이 2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6학년 학급을 없애고 학생들을 영어과정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한국 교육과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이유로 학생들이 영어 과정으로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었다.

학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강한 교육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교사는 어렸을 때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국어와 모국의 가치·문화·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학부모 상담시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4) 학부모 면담

(가) 한국어 과정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영주 이주민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한글(모국어)과 한국가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한글교육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이 토요학교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 체류민인 주재 상사원의 경우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이 학습 및 현지 적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어

리기 때문에 한국관련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과정에 취학중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한국학교에서의 교육이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 자라서 한국 사람임을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현지 주류사회 진출과 관련하여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보았다고 했다. 따라서 사춘기를 경험하는 중등과정에서의 한국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한국학교 교육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정한 자기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현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영어만 잘하는 사람은 많고, 영어만 가지고 인력을 뽑을 때는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한국으로의 대학진학도 한국학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한국과정이 없는 경우 한국 대학입시 준비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학교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또래 와의 만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 한국어 과정의 당면과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학부모들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수의 감소를 들고 있었다. 학생 부담금이 한국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학생수 감소는 우선 재정상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어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운영을 위한 최소 학생수가 3명인데, 현재 한국어과정 학생수가 한 학년에 10명을 넘지 않

는 형편이기 때문에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에 학급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수업의 진행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학생수의 감소는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아동기에는 여러 다른 아동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학생수가 적어서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여기에는 토요학교 운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요학교의 경우 한인회에 가입비(연600달러)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입학허가를 기다려야 할 상황일 정도로 많은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요학교를 한국학교에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수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토요학교의 수업료를 한인회에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등과정의 경우 국내 우수한 대학으로의 진학률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례 입학과 관련한 주요 과목을 강조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부모들은 7차교육과정 중심보다는 입시지도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과정의 경우는 수업료 감소를 한국학교 활성화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학교의 학비가 주재원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학기금 마련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인회에서 2001년에 일회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려운 교민에게 교육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주재원이 많은 홍콩의 특성상 학비를 내리는 것이 학교의 질적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다. 학부모들은 한국어 과정 활성화와 관련하여 취학전 아동반이

홍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계속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취학전 아동반에서 초등학교 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 한국학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현재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한국어 과정은 상당히 우수한 교사진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봉급 수준만을 가지고 교사의 질을 낮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단의 이사들은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사들이 학교의 일전반에 깊게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사무국 직원과 이들이 작성하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도 학부모들은 방과후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고등부에 대한 재정·인원 투자 지원이 없는 점 등을 한국학교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았다. 재단이사장과 총교장의 견해와는 달리 학부모들은 영어와 한국어 과정의 통합 운영은 현실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5) 교육영사 면담

(가) 한국학교 운영에 관한 견해

공관에서는 한국학교가 한인회, 진출 지상사, 정부 세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중 어느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미미한데 이는 정부의 재정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어 과정에만 약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교육영사는 한인회 회장이 한국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인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한국학교 운영에 한인회의 이권(직원채용, 판공비 전용 등)이 개입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인회가 한국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재단이사들의 재정적 참여가 전혀 없으며, 반면에 원로 재단이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라고 보았다. 재단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주재 상사원들의 자녀가 모두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도 재단이사들이 한국학교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1993년에 한 번 영사관에서 한국학교 재정감사를 실시한 이후로 한 번도 외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은 상황이라도 적절한 기관 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영사의 의견이었다.

토요한글학교는 한인회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현재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학교 재단 이사장을 한인회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토요 한글학교에 대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01년까지 한국학교의 한국어 과정 교사들은 한글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약 월 650달러를 지급 받았다고 한다. 교육영사는 이처럼 한글학교와 한인회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한국학교의 이사장을 한인회장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글학교가 한국학교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도 한글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나) 한국어 과정의 인식 및 필요성과 관련된 견해

처음 신축할 때에는 한국어 과정이 더 잘 운영되다가, 97년 이후 영어 과정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영어과정도 최근 다른 국제학교와의 경쟁에서 밀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영어과정의 경우 전

체적으로 340명 수준이 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현재 270명 수준으로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교육영사의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영어 과정에서 한국어 과정으로의 재정적 유출이 있는 경우 양 과정의 운영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교육영사는 영어 과정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과정을 인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경우 경쟁력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홍콩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수요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을 우려하였다. 교육영사도 이사장이나 총교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과정을 영어 과정으로 통합함으로써 한국학교를 명실상부한 국제학교로서 운영하는 것이 한국학교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가 교육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 베트남 한국학교

(1) 이사장 및 교장 면담

(가) 교민사회의 특징

97년 동남아 재정위기가 교민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호치민의 경우 97년 이전에는 1만여명 수준에서 그 이후 4천명까지 줄었다가 현재는 1만2천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지역투자에 있어서 4위로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섬유, 신발, 가방 등)가 많으며, 자영업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사장은 교민의 30%에서 40%는 직업이 없는 경우로, 이들은 범죄 이후 은신의 목적을 가진 일종의 도피 형태의 이주자들이라고 하였다.

거의 모든 상사원은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교민의 약

5%를 차지한다고 했다. 주재 상사원의 경우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다른 현지 교민들에 비해 학년기 아동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회사로부터 자녀의 학비를 지원 받는 중소기업 가족의 경우에도 자녀를 국제학교로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학교의 경우 입학금을 제외하고 학기당 순수 학비만 미화 6,0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따라서 종류 이하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의 자녀들이 한국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교민자녀의 2/3가 한국학교에, 1/3이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나) 한국학교 설립과정

이사장은 학교 건립이 추진되었던 시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했다. 당시에 태광산업이 10만 달러, 삼성에서 2만 달러를 기부하였으나, 경제 사정이 좋은 시기에 홍콩 한국학교의 경우 삼성에서 30만 달러를 기부한 것에 비하면 그 액수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했다. 1998년 당시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베트남 현지학교에 보내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교민들 사이에 한국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라고 한다.

연 8천 달러의 임대료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대기업 법인장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2년 간 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시작하였는데, 장기적으로 학교시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학교건립을 위한 모금을 시작하여 50만 달러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었고, 교육부에서 매칭펀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족분인 20만 달러는 장차 학교수입을 통해 갚기로 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3년 동안 20만 달러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98년 9월에 정식인가를 얻고 학교 건립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설립 당시 교사의 자질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 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총영사관 앞에서의

시위, 이사장 회사로의 투서 등의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지금도 학교 교사들의 강성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와 학교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 한국학교 재정관련 문제

작년에 재정적 여유가 생겨 학비를 내린 바 있다고 했다.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는 월 300달러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교장은 일부 자영업자들에게는 현재의 수업료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교민 중에는 자녀를 한국학교에도 보내지 못하는 사람(현재 30여명)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사장과 교장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수업료 수준을 월 100달러에서 월 150달러로 내리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업료 수준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증액되어야 하며, 최소한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한인회는 정착단계로 한인회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만이라도 의무교육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단측에서는 현재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로서 학교에서 계획하는 목표액은 약 2만 달러 정도라고 했다.

(라) 학교운영의 효율성 문제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교장, 1만 달러 이상 기부회사 임원, 선임 이사, 회계(공인회계사), 감사(은행장) 등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러나 회의시 반 이상의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사장은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계획중이라고 했다. 이사장은 또한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이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사들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 교사관련 문제

좋은 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기본적 재정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보조금 명목으로 내년부터 500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는 현지에서 일하는 초빙교사들의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할 계획인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사의 계약기간이 길 경우 새로운 교육체제의 계속적 유입에도 제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사장과 교장의 의견이었다. 최근 국내에서 초빙하는 형식으로 채용한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좋은 상황이며, 새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는 내년 2월에 교사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바) 학생 및 학부모관련 문제

현재 한국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학교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다고 한다.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특례시험 준비, 보충수업 요구, 교사의 질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간 당 교사 수당은 20불이며, 학급당 1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와 주말에 운영중이라고 했다.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충 수업비의 50%를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만을 학생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설학원에서도 입시준비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데, 이곳에서는 주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2) 교사면담

(가) 교육과정상의 문제

한국학교는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 수업일수와 시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 때문에 다른 교과목의 수업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제학교로 학생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현지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 한국학교의 경우 국어와 사회를 통합하여 ‘문학’이라는 과목으로 운영 중이며, 이와 같은 모델을 현지 한국학교의 특수성에 기초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사회교과와 같은 경우 국내와 현지의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근무환경과 관련된 문제

교사들은 초·중·고 세 학교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교장과 중등학교 교장을 번갈아 파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용휴직 상태인 현지채용 교원의 경우 가족들이 함께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급 만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학년기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현지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도 국내초빙 형식의 현지채용 교사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조건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불명확할 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

통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지채용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보상체계와 관련한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도서벽지 근무와 해외 현지 근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고용 휴직에 대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지채용 교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공문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육부는 자신들을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 학교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된 문제

교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사소한 일에 대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 결정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는 교사들에게 재단 이사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극단적인 예로 재단 이사장과 현재까지 상견례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학교운영 주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 교사들의 참여 의식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다.

(3) 학부모 면담

(가) 한국학교에 대한 인식

한국학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식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가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 때문에 한국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외국어

교육이나 국제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들은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이 본국에 돌아가서 적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 현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국제학교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는 이유로 꼽았다.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보다 영어교육 때문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중에는 국내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유학도 보내는데 현지에 와서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외국으로 대학에 보내려는 경우에는 특히 한국학교보다는 다른 국제학교로 보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나) 한국학교 발전과 관련한 학교에 대한 요청 사항

학부모들은 현재보다는 영어교육이 강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특정 교과의 경우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사 확보의 어려움과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아동의 이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특별 교과(미술, 체육)의 경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학부모들은 개인교수를 통해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인하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자영업을 하는 학부모의 경우 현재 학비가 부담이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재정적 여유를 고려하여 중등의 경우 월 200~250달러(미화), 초등의 경우 월 150~200달러 정도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바람이다.

학급당 학생 정원을 줄였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다. 현재는 규정상 30명 이하로

학급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 기준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권장도서와 같은 최신 서적 구입 문제, 도서 구입을 위한 재정 확보와 예산 배정을 증액해줄 것을 원하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사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학교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중등의 경우 학부모들은 해외교육 활동이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임한 교사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사들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의 경우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학입학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교사로부터 입시와 관련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학교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지금 현재는 사설학원을 통해 입시정보를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학부모의 상당수가 현지 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 때문이긴 하지만 한국학교가 한국총영사관 부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재단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4) 교육담당 영사 면담

대체적으로 현지 교육영사는 베트남 한국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한국학교는 현지 교민에 대한 교육적 기여도가 높으며, 그 운영 면에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학교의 재학생 중 10~20%의 학생이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학교에 다녔는데, 이들 중 절반 가량은 가정형편상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이었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한국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방침 상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 문제였다고 했다. 결국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도 등교 금지 조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수업료 감면 혜택을 준 바 있으며, 현재는 장학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다. 방콕 한국학교

(1) 재단 이사장 면담

(가) 한국학교 설립과정

1990년대 초 김영삼 대통령 방문(APEC) 시에 교육부에 한국학교 필요성을 대사관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학교설립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없었고, 교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의 필요성만 제시하였을 뿐이었다고 했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현지에서 기금을 먼저 조성하고 난 후 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것이 교민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했다. 이 때에도 토요학교(한글학교)는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본격적인 학교 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6년 전 '학교설립추진회'가 건립되었으며, 미화 약 6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당시에도 현 재단 이사장이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학교설립추진회의 활동을 통해 4년 후 약 10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게 되었다.

2001년 현 이사장이 한인회장이 된 후 주 태국 김국진 대사 면담에서 학년기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 원인으로 부모들이 비싼 국제학교의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문제와 현지학교에 보내기에는 언어와 국적이 문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또한 국제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도 언어문제로 인해 중간에 그만 둔 아동 수가 상당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홈스쿨이 운영되고 있는 등 교민 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함을 이야기하였다.

2001년 3월31일 현 이사장(한인회장)이 학교를 무조건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여 한국학교가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모집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5, 6학년 학생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졸업생의 학력인정 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2년 안에 교육부로부터 학력인정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개교 첫 해 19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다고 했다.

최소한 한글교육이라도 시작하자는 것이 학교 설립 당시의 목표였다고 했다. 이를 방콕 한인학교로 제정하고, 현재의 장소에서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학교를 시작하였다고 했다. 무허가(무인가)학교였으나 아동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시설이나 행정적 문제를 떠나서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열악한 조건에서라도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초기 교직원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채용하였다고 했다. 강사 형식으로 채용하였으므로 보수는 시간당 지불하였다고 했다. 학기 시작 초기에 교사의 보수는 한인회에서 모금한 기금에서 지출되었다. 이들 채용 교사들은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주해온 가정주부가 대부분으로 대부분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이

루어졌다. 교사 자격이 없더라도 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예: 국어국문학 전공자)도 일부 교사로 채용하였다.

한 학기가 지나자 학생 수가 35명이 되었다. 당시 교사의 자녀는 국제학교 등에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학기부터 중등자격이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교사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시 교사수가 적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체제인 담임제가 아닌 중등학교 식의 교과별 교사제를 운영하였다. 담임제 운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어 나중에 이를 담임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작년 학부모의 계속되는 요청에 따라 중등학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설립 당시 교사들을 모두 초등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2002년 1학기에 대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 학부모들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교과제 운영이 아닌 담임제 운영이 새로운 초등교사들을 채용한 뒤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재에도 급료제가 아닌 시간당 급료를 제공하는 강사료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설립 초기 당시 입학금은 120달러, 수업료는 한 학기 250달러였다. 이는 현지 태국 국제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이 1500달러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었다.

1년 동안 학교 운영을 한 결과 약6만 달러의 재정 결손이 발생하였다. 학생수는 적고 교사수가 많아 기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교민사회에 호소를 하여 기금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약 25만달러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현지 대기업이 진출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도가 10%정도로 매우 낮았으며, 한국전자(KEC)의 1만2천달러의 기부가 가장 큰 액수였다. 기금조성에는 오히려 현지에서 자영업(관광업, 음식점)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대기업 주재 상사원 현지교민의 경우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

2001년에 교육부에 학교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고 학력인증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 2001년 12월에 교육부 관계자들이 실사를 한 결과 한국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2년 2월28일부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태국의 경우 학교 설립을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외국 주체가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사립학교로 인정된다고 한다. 현재 한국학교도 현지 학력인정을 위해 사립학교 설립을 신청하였으며, 태국정부가 이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학교인가에는 시설과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가 임대냐 소유이냐는 중요치 않으며 단, 임대의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임대계약 조건만 갖추면 된다고 한다. 이 밖의 인가 조건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부지 면적을 1000평 정도를 갖추면 된다고 한다. 당시에 모인 기금으로 방콕 근교에 2500평의 학교부지를 구입하였고, 한국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교사 1동이 거의 완공되어 2003년 1학기부터 별도의 학교 공간을 가지고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현재의 학교 현황

학생수는 2002년 2학기 현재 79명에서 82명 정도가 재적중인 상황이다. 학생수의 증가에는 한국정부의 인가와 학교부지 매입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등록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입학금 약 250 달러, 수업료 약 500 달러, 식대비 약 130 달러, 교재비 약 50 달러, 버스비 약 300달러로 총 1230 달러 정도이다.

교육부에서 학교 경상비 명목으로 13만 달러를 지원하여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부지를 900평정도 추가 구입하여, 현재 학교 부지의 총 면적은 3300평 정도라고 한다. 학교 건물은 거의 건축 완료 중에 있으며, 건물은 교실 20 개, 식당, 도서실, 서무실, 교장실,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새 건물 시설의 경우에도 단순한 교육장만을 갖춘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국제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시설 투자를 위해 정부에 시설 지원금을 요청 중에 있으며 2003년부터 19만 5천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업체들에 대한 협력 요청을 통해 재정 확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한국전자가 설립 시 약 만2천5백 달러를, 2002년 삼성계열사에서 만2천5백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한국화약, 맥슨전자, 삼미싸운드 등의 회사에서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사장은 기업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사회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교사 면담

(가) 교사처우 개선 문제

대다수의 교사들이 배우자 동반휴직으로 태국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지교사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경력인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 가지 문제점은 강사료제로 운영되다 보니 방학의 경우 고용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의 급료 지급에 있어서도 강사료제로부터 전임 급료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급료가 시간제로 지급됨에 따라 방과후지도나 학부모 상담 등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업준비나 담임업무 수행과 같은 추가적 일에 대해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받고 있는 급료는 시간당 약 13달러로, 급료의 지급은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지급되고 있다.

(나) 정부 지원 요청사항

현지 태국정부로부터 학력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태국학교 설립 기준에 따르면 도서관에는 도서가 3,000권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한다. 현재 이사장이 재외동포재단에 책 기증을 요청한 상태이나, 아동들을 위한 더 많은 도서가 앞으로 학교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 재정 지원과 시설 투자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교육활동 시설은 교과서, 학생, 교사만 있는 상태이며, 실험용품, 기구들에 대한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때로는 교사 개인이 이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상태라고 한다.

또한 학기초 아동의 교과과정 지도자료의 조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교과서나 지도서는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방학중에 미리 교재나 지도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같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학교에 대한 무관심과 한국학교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관련자료들을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교사연수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단순히 한국어 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수가 부족하다는 점, 연수에 대한 재정 부담을 정부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문제점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다) 학생 수요 및 학부모 요구사항

한국학교보다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년기 아동이 많은 것은 기업 주재원들에 대한 소속 기업의 학비보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토요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의 수가 약 3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학교 재학생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했다. 이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토요한글학교에 온다고 한다. 반면에,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본국에 두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한국학교에 한국교육과 함께 영어교육을 많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수업 시수를 늘리면 한국 교육과정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영어수업 시수는 주당 10시간, 한국어과정 수업은 20시간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콕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약 절반 정도가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한국학교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한국학교의 의무교육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3) 학부모 면담

(기) 한국학교에 대한 인식

학부모들은 한국어와 한국 가치관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현지 교민의 경우 종사업종 특성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본국 적응 준비교육으로서 한국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현지 교민들이 국제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로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와 중학교와의 연계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국학교가 이러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잠재적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한국학교에 영어 교육과정과 한국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한국학교에 보내고 싶은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경우 초등학교는 한국 교육과정을, 중학교 이상은 영어 교육과정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한국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개설을 통해 아동들이 계속해서 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 과정이 개설되는 경우 한국학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연계교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학부모들은 차라리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자녀를 국제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국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 희망사항

학부모들은 교육과정면에서 한국어 교육과정과 영어 교육과정을 50%씩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 때문에 한국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바로 한국학교에서 국제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를 영어교육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한국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교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영어, 피아노, 미술, 체육 등의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활동에도 학교측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태국 공휴일과 한국 공휴일을 더하여 수업 결시일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교과운영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교과진도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 숙제를 통해 해결하거나 그냥 다음 학기(학년)로 넘기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 중학교 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 사항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중학교 과정의 개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학교에 중학교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마땅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보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초등과정을 한국학교에서 마치고도 중학교를 국제학교로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는 언어상·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한다. 또한 한국대학과의 연계를 고려해서도 중·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자녀를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한다.

중학교 인가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과별 교사 확보라고 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 예정에 있는 학생수(15~20명)에 비해 필요한 교사수는 상당히 많다. 따라서 교사확보를 위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라) 한국학교 발전의 제한점에 대한 의견

한국선교회(BIAS)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존재가 한국학교 학생 유입이 어려운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학교는 유치부, 초등, 중등을 갖추고 있으며, 5년 전에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태국 정부에서 학력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선교원 자녀의 경우 50% 등록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한국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요인은 토요학교이다. 토요학교가 국제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요학교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학교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인데, 토요학교 기능을 제한시킴으로써 상사 주재원들의 자녀들을 한국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 교육담당 영사 면담

(가) 재외국민 현황과 관련된 내용

현재 대사관에 등록된 인원은 약 5,000명 수준이며, 비공식적 인원은 1만에서 2

만 사이로 추정된다고 한다. 관광사업이 주종을 이루며 1,500명 정도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관광가이드 수입이 국제학교에 보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 11개의 상사협의회만이 존재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사주재원은 소수를 차지한다. 반면에 투자 제조업체는 150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당 가족구성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자녀들이 잠재적 한국학교 대상자이지만 현재로서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태국인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와 국적이 모두 한국인이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현지학교에 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제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학교 시작단계에서는 교민사회에서의 불신이 존재하였으나 학력인정과 학교부지 구입 이후에는 교민사회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태국 교민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학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담당 영사는 새 건물로의 이전 등 학교 정상화 이후에는 한국교육과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나) 한국학교 발전에 대한 견해

교육담당 영사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학부모들은 본국에서와 대등한 교육 여건을 희망하는데, 학부모들이 학교가 시작단계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영사의 의견이다. 그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학부모와의 공식적 대화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강사로 구성된 교사진과 과연 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학교행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진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담당 영사는 학교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 봉급 체계의

개선이라고 했다. 현재의 강사료제는 교민들이 학교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학생수의 증가와 수업료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관계조정, 교육기자재 구입, 교재 공급의 시기적 적절성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계획할 수 있는 전문가 초빙, 한국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고등학교과정 개설, 국제화·현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다) 한국학교와 관련한 영사관의 역할에 대한 견해

한국학교와 관련하여 영사관의 역할은 한국학교 시설, 교사 홍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교육원장, 교육 주재관을 파견해 주기를 요청한 상태이나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교민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교육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담당 교육부 직원을 파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교육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국내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V. 홍콩 · 베트남 · 태국 지역 한국학교의 개선 방안

1. 지역별 한국학교의 주요 당면 문제 및 활성화 방안

가. 홍콩 한국학교의 주요 당면 문제 및 활성화 방안

(1) 학생 수의 심각한 감소와 국제학교로의 전환 고려

홍콩 한국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과정뿐만 아니라 영어 과정의 학생 수가 최근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과정에서 학생 수 감소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별씨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런데 최근 타 국제학교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영어 과정에서도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영어 과정의 학생 수 감소는 그간 영어과정 학생의 수업료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았던 한국학교 전체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어 과정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파견 교장과 일부 학부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관계자들은 한국어과정을 영어과정과 통합시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의 통합을 통하여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국제학교로서 운영하는 것이 한국학교를 살리는 길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한국 교육과정은 타 국제학교에서와 같이 국어와 국사 중심의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한국학교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홍콩 한국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재단 이사장을 한인회장이 맡아왔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정운영과 인력채용 및 운영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글학교 운영은 한인회의 주요 수입원이다. 따라서 한글학교의 존재가 한국학교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학교의 폐지에 대한 논의조차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한글학교를 위해 한국학교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행정요원 및 교사 임면 등에 한인회의 이권이 개입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외부 감사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교육담당 영사에 따르면 홍콩 한국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제대로 된 외부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한다. 외부 감사제 도입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인회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 체제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나. 호치민 한국학교의 주요 당면 문제 및 활성화 방안

(1) 한국학교 수업료 인하를 통한 교육 소외층 축소

호치민 한국학교는 계속해서 수업료를 내려왔으나, 현지 교민사회의 특성상 재정적 문제로 인해 한국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과 한국학교에 다니지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미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정지’ 결정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과 장학금 지급 등의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지 상황에 맞게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정은 정부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만이라도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학교로서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허용

학부모들은 한국어·한국문화 등의 교육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국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보다는 영어교육 등 국제화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한국학교는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상사나 정부 주재원 자녀 등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다른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을 한국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국제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운영을 위한 파견교장의 권한 확대 필요성

현재 교육부 파견 교장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실체적 결정권이 없으며, 교사들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어서도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학교와 관련된 주요한 결정은 대부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장은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실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호치민 한국학교의 교사들은 대부분 고용 휴직 상태인 교사들을 국내에서 초빙하는 형식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교장은 교사들에 대한 통제권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

사들의 임의적 출퇴근이나, 다른 현지 사업에의 참여 등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어도 교장은 이러한 교사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장의 권한을 확보하고,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방콕 한국학교의 주요 당면 문제 및 활성화 방안

(1) 신규학교 이전과 관련한 교육시설 재정 지원

현재 방콕 한국학교는 임시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 신축 교사로 이전할 예정이며, 교육부로 19만5천 달러의 학교 시설 재정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교육시설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시설 확보와 관련해 계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초등학교 졸업 후 연계교육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인가 필요성

현재 초등학교 1~5학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에 졸업생이 배출되면 이들을 위한 중학교 연계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후 국제학교에 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사설학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초등학교를 한국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국제학교에 진학하려고 해도 영어 인터뷰 등 자격 요건을 통과하기 어렵고,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한국학교에 연계하여 계속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한국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며, 연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다수의 교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연계교육을 통해 한국학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

방콕 한국학교는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간제 강사의 형식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학생지도나 학부모 면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것이 학교에 대한 학부모 불만을 높이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교사들을 급료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제 추진을 통해 파견교사만으로 한국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현지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허용 요구

방콕 한국학교의 학부모들도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나 과학과 같은 교육과정도 다른 국제학교 수준으로 운영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와 경쟁력 있는 한국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중 · 장기적 한국학교 발전 방안

홍콩 · 베트남 · 태국 지역 한국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 각각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한국학교의 재정구조의 취약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학교의 운영비의 대부분은 학생 부담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부 등의 지원 사정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는 곧바로 한국학교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 수입 감소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학생수의 감소를 불러온다. 단순히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 증가 등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한국학교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학교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설립 목적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한국학교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의무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의무교육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전원을 파견교원으로 하며,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국학교를 국내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교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학교의 의무교육화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국학교 교육을 의무교육화 한다면 한국학교의 교육 목적은 종전대로 한국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학교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는 한국학교를 국제학교화하고 교육목적을 국제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현지에서 국제학교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 목적을 달리 설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현지 학교의 특색에 맞도록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가. 한국학교 교육의 의무 교육화 방안

(1) 의무교육화의 필요성

한국학교 학생의 대부분은 일시 체류민이다. 일시 체류민은 민족은 물론 국적 면에서도 명백한 한국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현법상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마땅히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재외동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많으며,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학생들은 상당한 수업료와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의 좋지 않은 다수의 재외동포의 자녀들이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학교 교육의 의무교육화는 어쩌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2) 의무교육화 방안 : 일본인학교 모델을 중심으로

(가) 일본인학교의 운영 현황 분석

일본인학교는 일본 국내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의 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된 전일제 교육시설을 말한다(서현진, 2000). 교육목적 면에서는 한국학교와 동일하나 한국학교에서 초·중·고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과 달리 일본인학교에서는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이므로 의무교육 기관인 일본인학교에서는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본인학교에 교사 전원을 파견하는 등 한국학교 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홍콩 일본인학교를 중심으로 일본인학교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1) 연혁

홍콩의 일본인학교는 196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소학교 과정 6학급으로 개강하였다. 이어 이듬해에는 중학교 과정이 신설되었고, 1970년에는 유치부가 개설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82년에는 중학부가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는 소학교가 중학교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 1997년 학생수의 증가로 소학교 과정에서 2부제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초등제2학교를 신설하여 현재는 두 개의 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시설 현황

홍콩 일본인학교의 소유 형태는 홍콩 한국학교와 동일하다. 부지는 홍콩 정부로부터 임대하였으며, 건물은 홍콩 거주 일본 교민과 일본정부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건축하였다. 홍콩 한국학교와 비교하여 학교 시설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홍콩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 시설 비교

구분	교지	연면적	학급수	특별 학급수	체육관 겸강당	풀장	도서관	비고
초등(A)	2,559m ²	9,623m ²	33	8	1	1	1	지상5층, 지하2층
초등(B)	9,200m ²	12,800m ²	40	16	1 (온수)	1	1	지상5층, 운동장2000m ²
중학교	2,597m ²	5,877m ²	11	13	1		1	지상8층
한국학교	3960m ²	8448m ²	31	9	1(강당)			지상6층, 테니스 코트

3) 일본인학교 현황에 관한 자료는 <홍콩 한국국제학교(2002). 홍콩 한국국제학교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를 참고하였다.

홍콩 한국학교가 초·중·고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지 면적과 연간평 면에서 홍콩 일본인학교는 한국학교와 비교되지 못할 만큼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학급 및 체육시설 등 부대 시설면에서도 일본인학교가 한국학교에 비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직원 현황

홍콩 일본인학교는 교원 정원의 83%가 일본 정부의 파견교원이다. 한국학교 교원의 대부분이 현지채용 교원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파견교원은 한국학교 파견교원과 마찬가지로 월급과 주택 보조비를 정부에서 지급받는다. 반면에 일본인학교의 현지채용 교원은 월급과 주택비를 학교에서 지급받고 있다. 이는 한국학교의 보수 지급 방식과 동일한데, 다만 한국학교에서는 현재채용 교원에게 주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인 학교에서는 현지채용 교원에게도 주택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홍콩 일본인학교와 홍콩 한국학교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일본인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교사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일본인 학교의 외국인 교사 수는 일본 본국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홍콩 한국학교에 외국인 교사가 많은 것은 재외동포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에 따라 홍콩 한국학교에서 영어과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V-2> 홍콩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 교직원 현황 비교

구분	총계	파견교원 (교장,교감포함)	현지채용	일본인 강사	외국인 강사	사무국	운전수	경비원 등
초등(A)	41	27	5	1	8			
초등(B)	40	24	5	3	8	12	7	16
중학교	28	20	1		7			
한국 학교	58	3	47(외국인 34)	5(한국인 강사)	2	7		

4) 재학생 현황

홍콩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는 재학생 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V-3>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학교의 재학생 수는 한국학교의 재학생 수에 비해 월등히 많다. 연혁에서도 보았듯이 홍콩 일본인학교는 학생수의 증가로 1997년 소학교를 신설한 바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제3국의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일본인 학생은 초·중등과정을 합하여 약400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홍콩 일본인학교 재학생과 국제학교 재학생을 합하여 홍콩에 거주하는 취학연령의 일본인 학생 수는 약 20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홍콩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의 약 75% 가 일본인학교에 재학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홍콩 거주 한국인 학생의 70% 가량이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표 V-3> 홍콩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 재학생 현황 비교

학년 학교	계	유치 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비교
초등(A)	653		117	108	113	108	100	106	
초등(B)	654		110	148	128	111	93	64	일본어과정
	139	21	22	23	23	21	15	14	영어과정
중학교	139		120	128	60				
한국 학교	초등	54		14	3	4	5	5	중등과정 재 학생없음
	고등	19		6	11	3			

* 홍콩 한국학교 재학생 수는 영어 과정을 제외한 한국어 과정 통계임.

5) 교육과정 운영 현황

일본인학교의 교육목적은 한국학교와 마찬가지로 본국과의 연계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일시체류민의 자녀들이 귀국 이후에 학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홍콩 일본인학교는 본국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국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홍콩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영어회화를 주당 2~3시간씩 추가로 운영하는 것과 초등과정의 경우 공작은 원어민(영어) 교사가 지도하는 것 정도이다. 이는 홍콩 한국학교에서 영어수업과 영어로 진행되는 기타 수업을 합하여 전체수업의 약 40%정도가 영어관련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6) 재정 현황

일본정부는 홍콩 일본인학교에 전 직원의 83%를 차지하는 파견교원의 급료와 주택비를 직접 지급하는 한편, 학교운영비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홍콩 한국학교가 전체 세입의 약 3.9%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데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

다. 홍콩 한국학교 세출의 70%가 교직원 인건비임을 생각한다면 일본인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금이 상당한 액수임을 알 수 있다.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일본인학교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학교에 비해 상당히 낮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일본인학교의 주 수입원이 학생부담금라는 것은 한국학교와 동일하다. 일본인학교의 학생들은 입학시 513달러의 입학금과 51달러의 시설비를 부담하며 매월 212달러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국학교의 입학금은 65달러로 일본인학교에 비해 훨씬 저렴하지만 수업료는 월 607달러로 일본인학교의 3배에 이른다. 따라서 일본인학교에서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한국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4> 홍콩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의 재정현황 비교

		일본인 학교	한국학교
세입	정부지원	전직원의 약83%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40%	전세입의 약3.9%
	학생부담금	전체 세입의 약82.1%	학교 운영비의 60%
	기부금	전체 세입의 2.8%	처음 개설시 받았으나 현재는 없는 상태임
세출	인건비	전세출의 약50% (현지채용교원의 월급 및 주택비)	전세출의 70.6%
	기타운영비	전세출의 약50%	전세출의 약30%
학생 부담 금	입학금	564 달러 (시설비51 달러 포함)	65 달러
	수업료	212 달러	607 달러(초등학교의 경우)

7) 일본인 학교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홍콩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80%는 기업의 주재상사원이다. 주재상사원의 평균 해외 근무기간은 3~5년 정도라고 한다. 일본인들은 3~5년 동안에 영어를 완벽하게 익히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만큼 영어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에 몇 년간의 외국생활을 경험하고 귀국한 이후에 일본의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해외체류 기간을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고 국제적 간각을 익히는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 귀국후의 적응과 연계교육을 고려하여 일본 본국의 교육과정

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본인학교에 다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또한 일본인들이 자녀들을 일본인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에서 국립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국내 고졸자는 ‘센타시험’(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을, 해외고졸자(교포, 외국인 포함)는 ‘통일시험’을 치러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각 사립대학별로 대학입학전형이 다른데, 이 두 경우 모두 해외 고졸자에게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없고, 일본인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일본인학교에서 중학교를 마친 경우 귀국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도 일본인들은 자녀를 국제학교보다는 일본인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

(나) 한국학교의 의무교육화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잇점

일본인학교가 한국학교와 다른 점은 초등과정에 해당하는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국내와 동등하게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해외 일본인학교에 현지어 교사 등을 제외한 전원의 교원을 파견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학교를 의무교육화 한다면 일본인학교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사실 교사의 대부분이 파견교사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일본인학교와 한국학교는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학교의 교육목적도 동일하며, 현지에서 교민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유사하다. 이로부터 일본정부의 재정 지원이 해외 일본인학교의 활성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학교를 의무교육화 함으로써 얻어지는 잇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학교의 주요 수

입원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이다. 따라서 한국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한국학교에 재정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일본인학교와 같이 정부가 한국학교의 교직원을 전원 파견하고, 이들의 월급과 기타 생활비용을 지원한다면 재정난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교의 학비는 타 국제학교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결코 적은 액수라고는 할 수 없다. 홍콩의 경우 일본인학교에 비해서는 3배에 이른다. 홍콩은 물론 베트남과 태국에는 한국학교의 비싼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재외동포 학생이 상당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한국학교를 의무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면 이제까지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다수의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교육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요자의 요구의 변화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육내용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들의 영어 및 국제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학생들이 국제학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학교 본래의 교육목적에서 벗어나더라도 영어 관련수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학교를 의무교육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면 국내교육과의 연계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래의 교육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원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파견한다면 간접적으로 교원 간 갈등 해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교원사이의 입장과 교원에 대한 처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교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교육화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현지채용 교원의 신분적·경제적인 불안정이 해결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다섯째, 한국학교가 의무교육화되면 학교의 성격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야 한

다. 현재는 한인회가 주도하는 사립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의무교육화 이후에는 정부에서 관여하는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불투명성, 교원의 임면에 따른 한인회의 이권개입 문제 등과 같은 한국학교의 재단 이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제학교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권을 허용하는 방안

(1) 국제학교로의 전환 필요성

의무교육화를 통한 점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대안적인 방안으로 한국학교를 국제학교로서 완전히 자율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학교를 지원하는 목적은 국적 교육이 아닌 국제화 교육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국제학교로의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가) 국제화 시대의 교육 수요에 부합

현대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은 필수적이다. 외국어 실력은 기본이고, 외국인과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문화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붐이 일어난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며, 어학연수 등의 외국생활 경험이 사회진출의 필수적인 코스로 여겨지고 있다. 일부러 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것이 심각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외국생활 경험을 기회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이 기회를 교육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하는 지역이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영어권 국가에서 설립한 국제학교

에서는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여 영어를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생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국제학교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학교 역시 재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한국학교에 대한 위상 변화의 필요성

현재 재외동포 학부모들의 교육수요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국제화 교육이다. 한국학교의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원인도 한국학교가 학부모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학비를 보조해 주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몇몇 연계교육에 대한 필요가 절실한 학생들만 한국학교에 다니는 현재와 같은 실정에서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에 대해 더욱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 자랑스러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학교를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

(2) 국제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학교의 위상 변화

현지에서는 한국학교를 영어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국제학교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학교의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단적인 예로 홍콩 한국학교의 존립을 우려하는 다수의 관계자들은 홍콩 한국학교의 영어 과정과 한국어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된 한국학교는 국제학교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학교를 국제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목적부터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학교의 교육목적은 학생들을 국제적인 사고와 감각을 지닌 인간으로 양성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제학교의 전학 희망자들은 대부분 고국을 떠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외국생활을 경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국제학교로서의 한국학교는 이들의 이러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목적을 중심으로 체류지역과 학교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교육목적이 수립되며, 그에 맞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언어는 다른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도구이므로 교과 중에서는 국제어인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몇몇 외국어 수업이 해당 언어로 진행될 것이다. 사회 등의 교육과정은 특정한 국가의 국적 교육이 아닌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학교 역시 교육과정에서 한국적 특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국제학교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며, 학교라는 특성상 가치관이 형성되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한국과 관계되는 내용을 많이 다루도록 하며, 선택과목 등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홍콩 한국학교의 경험은 한국학교의 국제화와 관련해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우선 한국학교가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된 한국학교가 국제학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 목적을 달리함으로써 한국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학교를 경쟁력 있는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학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VI. 결 론

1. 연구의 시사점

한 기관의 역할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그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 기관의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 기관의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학교는 교육부 산하의 현지교육기관으로 일시 체류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의 연계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태국·베트남·홍콩 지역 한국학교들은 현지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 문제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한국학교의 설립 목적과 그 기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 지역 한국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 감소이다. 학교에서 학생 수의 감소는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화 추세에 따른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 급증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해외 체류 기간을 영어 교육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가능한 한 자녀를 국제학교에 취학시키기를 원한다. 따라서 교민들 사이에서 한국학교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싸고 교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

성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학교에 대한 요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학교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다. 의무교육화한다는 것은 교육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전원을 파견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학교가 의무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그 동안 교육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왔던 많은 재외동포 자녀들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학교는 연계교육을 필요로 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교 활성화와 관련한 또 다른 대안적 방안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대로 한국 교육과정과의 연계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버리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학교가 국제학교로 전환된다면 체류국의 성격과 학교 각각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육목적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제학교는 그 성격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 학교가 각각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학교에 최대한 자율권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우선 선행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했음을 들 수 있다. 재외동포교육에 관한 자료는 상당수 있었지만, 동남아 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다수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미국·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국

과 소련 지역의 동포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재외동포는 그 수가 적은 데다 일시 체류민이 대다수인 것이 선행연구 부족의 원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 다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재외동포교육 관련 담당 부서의 업무 협조 부족을 들 수 있다. 초기 업무 협조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연구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질적인 연구결과를 제한된 기간 내에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서현진(2000). “일본의 세계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종현(1990). “재외한국인 자녀교육의 개선방안 연구-일본 및 동남아 지역의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외교통상부(2001.7).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재단(2002.5). **재외동포기관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 정만섭(2002).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기능과 과정교육공무원의 역할”.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 정진곤 외(1997.6). **해외교포 및 재외국민교육강화방안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태국 방콕 국제학교(2002). 태국 방콕 국제학교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국제교육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재외동포 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 촉진 방안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호치민 한국학교. 호치민한국학교 현황 보고. 교육인적자원부.
- 홍콩 한국국제학교(2002). 홍콩 한국국제학교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Hung, Pham Viet. “베트남의 대외개방정책과 베트남-한국의 수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
- 국제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niied.interedu.go.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http://www.okf.or.kr>

주베트남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vietnam/>

주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thailand/>

주호치민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mission/emb/embassy.mof>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mission/emb/embassy.mof>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한국어세계화재단 <http://kcaf.or.kr>

연구과제 2:
국제기구 교육전문가 양성
방안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냉전의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무한경쟁 시대, 세계화 시대 등 여러 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국가 간에 대립하던 지난 세기와는 달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국가와도 손잡을 수 있는 무한경쟁 시대에 도입한 것도 21세기 특징 중 하나이다. 더 이상 국경과 언어의 차이가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개방화,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국가간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자국의 국익증진을 위하여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사업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국제화,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국제사회의 각 분야에 미치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게 되며, 이제는 국제기구의 활동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회, 민간조직 및 개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치되는 외교·통상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1998).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혜자 위치에 있었으며, 능동적 참여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50년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에 가입하여 교육문화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나 오랫동안 그 활동이 미미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UNESCO에 9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는 등 국제교육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1996년에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윤영관·황병무 외, 1996). 이러한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참여 증가는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화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리더쉽 있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절연하여 살 수 없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상호협력 속에서만 생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주도적인 정책과 전략이 요구된다(박재영, 1998).

교육과 관련한 국제 업무는 오늘날 크게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협력은 유사한 그룹의 국가간 공동번영과 후진국 지원 등을 추구하는 것이고, 경쟁의 관계는 교육이 국제시장에서 하나의 커다란 서비스 체제로 존재하면서 이를 상품화하여 자국 교육시장의 통제 체제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활용의 접근과 대응 방법은 다분히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국제기구를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분야별 전략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기구의 조직구조의 기능, 성격,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별 사업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나 현안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기구 사업 및 활동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해당 조직과 기능, 운영의 개선은 물론, 다양한 국제교육협력 정보 체제 구축을 통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선진 각국의 참여 사례 및 활용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국제기구 활용 전략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참여 부족의 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국제 전문가의 부족이다. 국제기구 참여 및 활용 전략과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 설정에 무엇이라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출 인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기구 사업 및 활용·참여와 관련해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국제 전문가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분야 역시 그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NESCO와 OECD를 중심으로 주요 국제교육기구의 기능과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교육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 양성과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구체적 연구내용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내용

연구문제1: 교육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기능 및 교육사업 분석

UNESCO, OECD의 설립배경, 조직, 주요활동 및 교육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한다.

연구문제2: 우리나라 교육관련 국제기구 사업 참여 현황과 문제점 분석

UNESCO, OECD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과 전문가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문제3: 교육국제화와 이에 따른 교육부 국제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방안 모색

국제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전략을 지원체제 마련, 선발 후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파견 복귀 후 활용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육 전문가 양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헌분석과 국제 교육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 분석

UNESCO와 OECD의 기능과 역할, 참여 사업 및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출간된 각종 문헌,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헌분석 및 자료조사는 국제교육 전문가 양성 방안 모색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2) 면담

UNESCO와 OECD 등 주요 국제교육기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현재 이들 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UNESCO 한국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국내 관련 기관들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해 있는 UNSESCO와 OECD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II. 교육관련 국제기구의 조직 및 기능 분석

1. 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14개 전문기구(special agency) 중 하나인 UNESCO는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한 국가간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1945년 11월 16일에 설립되었다. 188개 정회원국과 6개 준회원국들이 가입하였으며, 파리에 위치한 UNESCO 본부를 비롯하여 전세계 73곳에 사무소와 부속 연구소를 두고 있다(유네스코 관계법규집 1999).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릿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UNESCO는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청소년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 UNESCO의 설립 배경

무수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전쟁의 재발 방지와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하여 세계 평화의 유지가 국가간의 군사적, 정치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인류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타국가·민족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불신과 편견 등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를 초월하는 국제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1924년 국제연맹 산하 ‘국제지적협력위원회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 of the League of Nations)’가 결성되었으나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국제지적협력위원회’의 실패는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제기구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합국 교육담당 장관들이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을 위하여 1942년 11월 런던에 모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활동 분야를 교육과 문화로만 한정하여 ‘유네코’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and Cultural Organization)로 명칭을 정하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과학 분야(Science)를 추가되면서 지금의 ‘유네스코’(UNESCO)가 되었다(유엔한국협회, 1996).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1945년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44개국 정부 대표와 많은 국제기구 읍서버들이 영국 런던에서 UNESCO 창설 준비 회의를 열어 ‘UNESCO 헌장’(Constitution of the UNESCO)을 채택하였다. 이듬해인 1946년 11월 4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20개국이 ‘UNESCO 헌장’ 비준서를 영국 외무부에 기탁함으로써, 마침내 인류 평화를 증진할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UNESCO가 탄생하게 되었다.

나. UNESCO의 조직

UNESCO는 모든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참가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General Conference), 58개국으로 구성되어 사업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집행부서인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다(서화숙·강인형 편, 1996).

총회는 회원국 전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2년에 1회씩 약 1개월에 걸쳐 개최된다. 주요임무는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거, 사무국장의 임명, 가

입의 승인, UNESCO의 정책·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의결, 국제조약 및 권고의 채택 등이다. 다음 총회는 2003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9).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5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매년 2회 이상 소집되며, 주요 임무는 총회 의사일정의 준비, 총회에서 채택한 사업의 실행 및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것 외에 사무총장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임명하게 한다. 집행이사국은 연임할 수 있는데, 한국은 1987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4차례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9).

사무국은 임기 6년의 사무총장 지휘 아래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들을 집행한다. 사무국은 파리 본부와 세계 각지에 설치된 지역사무처 및 각종 부속기관으로 구성된다. 본부의 직원은 세계 각국에서 모집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2,200명에 달하며, 60개국의 지역 사무처에는 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준비,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보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 등이다.

UNESCO 회원국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를 두고 있으며, 이 국가위원회는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 UNESCO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NESCO 현장의 권고에 따라 1954년 1월 30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 UNESCO의 주요활동

UNESCO 현장은 1)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국제협력, 2) 대중 교육과 문화 보급 촉진 및 장려, 3) 지식 유지·증대·전파·추구를 활동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UNESCO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며

활동 영역은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의 5대 주요 활동 영역과 청소년, 여성, 통계, 미래지향 연구 등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서화숙·강인형 편, 1996).

UNESCO는 6년 단위로 UNESCO 중기계획(Medium-Term Plan)을 세워 광범위한 분야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6차 중기계획(2002년~2007년)은 기초교육 강화, 수자원 확보, 과학기술 윤리 수립, 문화 다양성 증진, 평등한 정보 및 지식 이용권 보장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주요 사업

UNESCO의 모든 활동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UN의 목적에 부합하여 이루어진다. 2002-2003년에 추진 중인 프로그램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UNESCO 홈페이지).

(가) 모든 이를 기초 교육(Basic Education for All)

UNESCO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교육분야에서 기초교육은 항상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UNESCO는 세계 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문해자와 기초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기 아동 교육과 기초 기술 훈련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이해 교육, 교육제도 혁신, 국제교육 협력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과학기술 윤리 확립(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UNESCO의 과학분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초 과학 발전을 지원하고 과학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또한 환경·윤리 문

제 등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윤리위원회’와 ‘국제생명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신설을 현재 준비중이며,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과학자를 위한 윤리 장전을 마련하고 있다.

(다) 세계화에 맞선 문화 다양성 보호(Cultural Diversity against Globalization)

UNESCO는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소멸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총회에서 ‘문화다양성선언’과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밖에도 귀중한 인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비 전승, 공연 예술 같은 무형 문화재 보존과 수중 문화재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약소국이나 소수 민족의 문화 주체성을 고양하기 위한 소수민족 언어 기록과 보존도 UNESCO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라) 평등한 정보 접근권 보장(Equitable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서 정보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터넷에서 1) 다중 언어 사용, 2) 공적 정보 접근권 보장, 3) 교육과 연구 분야 정보 저작권 문제, 4) 용이한 네트워크 접근권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 관한 권고안 채택에 주력하고 있다. UNESCO는 또한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정보윤리 확립,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각 국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과 방향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 평화를 위한 문화·문명간 대화 방안(Towards a Culture of Peace and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UNESCO는 인류 평화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의 1억 명 서명 운동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02년은 '세계 문화유산의 해', '세계 생태관광의 해',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하고, 특히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라. UNESCO의 예산과 부담금

제 31차 총회(2001년)에서 승인한 2002~2003 회계 연도 UNESCO의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예산은 2년 단위로 책정하며, 31차 회계 연도(2002~2003년) 예산은 정규 예산 5억4천4백만 달러와 비정규 예산 3억2천만 달러를 합쳐 모두 8억6천4백만 달러이다. 정규 예산은 유엔 분담금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회원국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가장 많이 부담하는 일본이 22%, 다음은 G8 국가인 독일(12.98%), 프랑스(8.6%), 영국(7.4%), 이탈리아(6.7%) 순이며, 우리나라에는 2.56%로 9위에 올라 있다. 비정규 예산은 UNDP(12.5%), UNFPA(3.1%)와 이밖의 유엔기구(11.3%), 회원국의 분담금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신탁기금(fund-in-trust, 50.2%), 지역 은행(2.9%)과 세계 은행(1.7%), 관련 전문기구(2.3%), 개인 현금(15.5%)으로 조성된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교육에 17.5%, 자연·정밀 과학에 9.6%, 인문·사회 과학 5.3%, 문화 8.0%, 커뮤니케이션·정보 과학 6.1%, 참여 사업 지원 4.2%,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제공 15.7%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본부 관리 및 행정 업무에 쓰인다.

UNESCO 예산은 1985년까지는 2년 단위로 3~5%씩 꾸준히 늘었으나, 이 시기에 미국·영국·싱가포르가 탈퇴하면서 86~87 회계 연도에 무려 27.3%나 줄었다. 이후로도 UNESCO 예산은 꾸준히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현 예산은 1970년 대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오늘날 전 세계는 모든 분야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에 봉착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년 내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위기의 극복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경제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으며, 경제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는 곧 교육적 문제로 이어진다. 경제분야에서 인적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육력의 제고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문화 선진국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지난 30여 년간 세계경제 발전 및 세계경제 질서의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 가입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OECD는 경제적 시각에서 각 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활동을 활발히 진행시켜왔다. 따라서 OECD 가입은 전반적으로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운용의 선진화를 통한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 OECD의 개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에 따라 48년 결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서유럽 16개국)를 모태로 1961년 9월30일에 발족했다. OECD설립 당시 18개 유럽 국가들과 미국 및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설립후 일본과 호주를 비롯하여 최근엔 멕시코, 폴란드 등 8개국이 가입했고 2002년 현재 총 31개국으로 늘어났다. 회원국 전체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18%에 불과하나 GNP는 전세계의 85%, 수출입액은 70%이상을 차지하며, 1인당 GNP의 경우 평균 2만 달러 정도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선진국 클럽이다(OECD 홈페이지).

OECD는 회원국가 정부차원의 정책협조와 개도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 세계경제발전과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된 정책협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이 기구는 60년대 비관세장벽 철폐 및 반덤핑과세 인정, 70년대 일반특혜관세, 서비스·금융부문 자유화 등의 개념을 주창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위한 국제규약 제정을 선도해 왔다.

나. OECD 조직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ECD 조직은 의사결정기구와 전문 분야별 위원회 및 사무국, 각 분야별 독립기구들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매년 1회 전 회원국의 각료들이 참석하여 주요 정책 문제를 논의한다. 이사회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밑에 전문 분야별 위원회와 별도의 국제에너지 기구 등 독립적 부속기구가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는 자체 사무국 체제를 갖추고 있어 예산 운영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책임자로 OECD 상부조직의 지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국의 조직은 각 분야별로 국(Directorate), 부(Division), 과(Unit)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정리, 연구보고서 작성, 정책대안 및 해결방안의 제시, 결정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OECD의 또 다른 주요 조직으로 민간 자문기관인 기업·산업자문위원회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있다(주OECD 대한민국 주재부 홈페이지).

OECD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이사회(Council)에서 각종 결정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필요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연1회 개최되는 정기 각료급 이사회와 평상시 상주 대표부 대사급으로 개최되는 이사회가 있다. 그리고 이사회 직속으로 14개국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어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의결조정을 도모한다.

이사회 결정으로 필요한 분야별로 위원회, 작업단, 전문가 그룹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OECD에는 현재 26개 위원회와 약 200여 개에 이르는 작업단,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개 연 2~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와 각 위원회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산업자문위원회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반독립적 부속기구로서 국제에너지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 개발센터, 교육연구혁신센터가 있다.

일반적으로 OECD에 제기된 사안이나 프로젝트는 관련 작업반이나 전문가그룹에서 검토와 연구를 거쳐 해당 위원회에 상정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주요 사안들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 사항은 각료이사회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된다. OECD는 기본협약과 공동의 목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의 경제여건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만장일치를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회원국가의 상호동의에 의해 각종 결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채택한다.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지는데 기권이 가능하며, 기권할 경우 해당국가에는 관련 결의나 권고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II-1> OECD 조직 구성표

의사결정기관	구성	목적
Secretari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retary General: 1명 * Deputy Secretary General: 3명 * Assistant Secretary General : 1명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 대표부 회합: 월2회 (의장: Secretary General) * 장관급 회합: 연1회 (의장: 회원국 대표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 대표부(Permanent Delegation)는 대사급 관할하에 외교목적으로 설치
Executive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Council이 자체적으로 지명한 14명의 Council members로 구성 	
Specialized Committees (20여개) & Working Parties (200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수도 또는 OECD 상임 대표부로부터 파견된 문관들로 구성 * 독일 본, 일본 도쿄, 미국 위성 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nomic Policy Committee, 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 Trade Committee, Tourism Committee 등 본부 산하 출판 및 정보센터

출처: OECD 홈페이지

다. OECD 교육 분야의 조직 및 기능

OECD에서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교육·고용·노동·사회국: DEELSA (Directorate for Education,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이하 DEELSA)이었으나, 2002년 9월 1일자로 교육국(Directorate for Education)으로 분리, 독립되었고, 현재 구조 개편 중에 있다. 기존의 DEELSA는 통계지표과

(Statistics and Indicators Division)와 교육훈련과(Education and Training Division)의 관련 부서를 두고 있다.

DEELSA 사무국이 관리하는 위원회는 2개이며, 그 가운데 교육 문제는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EC)가 담당고 있다. 이러한 DEELSA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부속 기구가 있다. 1) 교육 시설의 설계, 운영, 유치 방안 제시를 담당하는 교육시설 프로그램(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 PEB), 2) 대학의 운영 및 발전 방안 협의를 담당하는 고등교육 운영 프로그램(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IMHE), 3)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혁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무국 부속기구이나 자체 사무국을 두고 예산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가 그러하다(서화숙·강인형 편, 1998).

OECD의 교육관련 연구사업의 핵심적 활동은 교육위원회(EC)와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부서의 주요 목표 및 연구사업은 중복되는 감도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회원국이 직면한 주요 교육정책 이슈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정책 분석 및 개발, 비교 연구, 우수 사례 보급 및 정책 권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교육연구혁신센터는 OECD의 유일한 혁신 센터로서 교육의 미래를 예측·대비하는 장기적 정책 연구 및 교육 혁신을 위한 이론 중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협동 작업과 연구 성과의 종합을 통하여 교육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문 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교육정책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서 교육연구혁신센터는 보다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정책 연구를 강조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의 경우를 보면 교육위원회와 교육 연구혁신센터가 모두 교육과 훈련 문제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

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훈련 정책에 관한 연구·분석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교육연구혁신센터는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혁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OECD의 교육위원회(E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고등교육 운영 프로그램(IMHE), 교육시설 프로그램(PEB)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임천순 외, 1999).

(1)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EC)

1970년에 설립된 교육위원회(EC)에는 전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교육통계(Education Statistics)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별 교육정책 검토 및 정보교환 업무를 비롯하여 국가간 교육협력 사업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교육위원회의 핵심 주제는 고등교육동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교육의 역할 변화 등이다.

(2)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는 1967년 7월 28일 설립된 OECD 산하 부속 기구로서 교육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OECD 회원국간의 교육에 관한 국제 토론을 개최한다. 따라서 CERI는 선진 산업국가에서의 교육제도 동향에 관한 정보와 토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 CERI는 거의 30년 동안 OECD 국가들의 교육에 관한 연구 및 혁신을 장려하여 왔으며, 활동 목표는 첫째, 연구와 정책 혁신 및 실행과의 연계를 장려하고 둘째, 세계의 교육 동향에 관한 지식을 풍요롭게 하며 셋째, 국가간

의 토의에 교육연구가, 실천가, 정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데 있다.

CERI는 OECD 직원과 전 세계의 외부 전문가를 함께 활용하여 주요 교육적 현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주요 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세미나와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장관회의 등과 같이 OECD 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교육장관들간의 토의를 통보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들의 교육 제도에 관한 국제지표개발을 지원한다. CERI의 활동은 OECD의 회원국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집행위원회(Governing Board)의 감독을 받으며, OECD 본부 직원들은 다른 국가에 있는 교육자, 개혁가, 연구자, 의사결정자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3) 고등교육 운영 프로그램(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IMHE)

IMHE는 고등교육이 팽창하는 시기의 절정기에 OECD의 체제 내에서 설립되었다. 1969년이래 IMHE는 성장, 축소, 재평가 등의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발달을 조정하여 왔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어온 사안은 학생인구의 대중화와 이질화로 인하여 질 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 및 국제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IMHE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맞아 정보,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IMHE의 목표는 고등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교류를 증진하며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 교육 경영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세계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를 증진하는 것이다. 둘째, 경영실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급하고

이 분야의 행정가와 전문가들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 공동체에서 세미나, 회의, 발간물을 통하여 통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고등교육 운영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계속교육과 평생 학습, 지역활동가로서의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의 다양화, 연구의 관리, 대중 고등교육의 질, 고등교육의 국제화, 법적인 문제, 관리(governance), 학생의 변화하는 기대에 대한 관리자의 반응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인 기관들의 기대와 회원국의 우선 과제를 반영한 것이며, 광범한 OECD 교육활동의 맥락에서 교육·고용·노동·사회국(DEELSA),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와 긴밀한 협력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IMHE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고등교육 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많은 국제적, 지역적 기관들과 업무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4) 교육시설 프로그램(Program on Education Building, PEB)

PEB는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아이디어, 정보, 연구 및 경험의 교류를 증진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회원으로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다. PEB 사업의 주요 의제는 교육시설의 질 개선, 교육을 위한 물리적 자원의 관리, 그리고 변화와 교육시설에 관한 영향 등이다. 또한 정보사회의 교육, 지역사회에서의 평생학습, 교육시설과 환경, 도서관과 학습자료센터, 초기단계 고등 교육을 위한 기관의 설계 및 유지 관리, 학교의 효율성 증진, 시설과 시설 활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III.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사업 참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사업참여 현황

가. UNESCO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동안 해온 UNESCO 활동은 UNESCO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여 온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적으로는 UNESCO 한국위원회 총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운영, UNESCO 한국위원회 예산과 사업의 검토와 지원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UNESCO 총회 및 정부 간 회의의 대표단으로 참가, 정부간 회의의 유치 및 개최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참가한 지역 국제회의로는 UNESCO 국제교육국(IBE) 이사회(1월/제네바), 아태지역 교육혁신사업(APEID) 회의(11월/방콕), 국제정보기술교육연구소(IITE/모스크바) 관련 지역 및 국제회의 등이 있다(UNESCO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아래의 표는 UNESCO 한국위원회가 2002년과 2003년에 참여하고자 한 사업신청안 내용이다. 최근 많은 사업들이 여성 혹은 정보화 사업에 관한 주제와 관련되는 것이며, 보조금은 대략 신청액의 80%정도 승인된다고 한다.

<표III-1> UNESCO 사업참여 현황

순위	사업명	신청액	승인액	집행시기	협력국
1	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국제전문가 회의	25,000	20,000	2002년 10월	태국, 영국, 독일, 그리스
2	여성정보화 현황조사	30,000	20,000	2002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3	정보사회와 동북아미래에 관한 지역회의	20,000	15,000	2003년 5-10월	일본, 중국
4	동서문화비교 심포지움	30,000	20,000	2003년 11월	중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인도
5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국제회의	25,000	15,000	2002년 12월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6	아태지역 국제 청소년 자원봉사자 리더 훈련 워크샵	25,000	10,000	2003년 11월	중국, 일본, 태국, 호주
	총액	155,000	100,000		

출처: UNESCO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나. OECD

(1) 2001~2002년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연구혁신센터의 주요 사업

다음의 <표III-2>는 OECD 교육위원회(EC)의 2001년과 2002년에 추진한 주요 연구 사업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표의 개발 및 정책분석, 교수-학습의 질

향상, ICT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의 개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혜택 강구, 평생학습의 기초 강화, 지식사회에 대응한 능력의 배양,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효과적 활용 등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직업능력개발원(KRIVET)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현황이다.

2001년에서 2002년 동안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는 여러 연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한국 또한 활동적으로 이들 연구 사업에 참여해 왔다. 다음의 <표 III-3>은 주요 연구 사업의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 통계 및 지표 개발, 미래의 학교를 위한 대안 개발, 지식의 경제학 및 지식 관리, 중등후 교육의 국제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학급 과학 및 두뇌 연구,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위한 시사점 통합을 위한 파트너쉽의 증진 교육 및 혁신 방안의 탐색 등이다. 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구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표III-2> OECD 교육위원회(ED)의 주요 연구 사업 및 한국 참여 현황

번호	기본 목표	주요 연구 사업	한국 참여 현황
1	교육 지표의 개발 및 정책분석	교육 통계 및 지표의 개발 · 분석	OECD 주요 국가 통계 Education at a Glance 발간 (KEDI)
		국가 교육 정책의 검토	
2	교수-학습의 질 향상	OECD교원 정책 검토 사업: 우수 교사의 충원, 개발 및 유지	KEDI
3	ICT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의 개발	ICT가 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	
4	모든 이를 위한 평생 학습의 혜택 강구	교육적 불평등: 원인 및 정책적 대응 방안	
5	평생 학습의 기초 강화	한국의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 분석: 주제적 검토	KEDI
		성인 학습에 대한 주제적 검토 후속 사업 (국제회의 개최: 2001.12)	KRIVET
6	지식 사회에 대응한 능력의 배양	평생 학습 촉진을 위한 국가 자격 제도의 역할	KRIVET
		진로 정보 · 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정책 협력 사업	KRIVET
7	평생 학습 증진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효과적 활용	평생 학습 재정 공동 지원 방안 연구	KRIVET
8		OECD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비교 연구	KICE
9		OECD성인 생활 가능 문해(ALL) 실태 국제 비교 조사 연구	KEDI
10		평생 교육 훈련 (CET)에 관한 국내 지표 개발 연구	KRIVET

<표III-3>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의 주요 연구사업 및 한국 참여 현황

번호	기본목표	주요 연구사업	한국 참여 현황
1	교육 통계 및 지표	교육 통계 및 지표의 개발 분석	
2	미래의 학교를 위한 대안 개발	학교교육에 있어서 혁신 및 미래 지향적 사고의 분석·증진 ICT가 학습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PCC 연차총회 개최(KEDI)
3	지식의 경제학 및 지식 관리	지식의 경제학 및 지식관리, 교육연구·개발의 역할, 학습경제 및 지식사회 등에 대한 개념화와 분석	KRIVET KEDI
4	중등후 교육의 국제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화 현상이 자격에 대한 수요 및 교육·훈련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의 검토	교육인적자원부
5	학급 과학 및 두뇌 연구: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위한 시사점	교육 전반, 교육과정개발, 교수-학습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인지 신경 과학 및 두뇌 연구 결과의 개념화 및 촉진	
6	통합을 위한 파트너쉽의 증진	공공/민간 부문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배제를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도모 및 동 방안의 진행 및 성과를 모니터할 수 있는 통계 지표 및 효과 측정 기제의 개발	
7	교육 혁신 방안의 탐색	교육 부문의 주목할만한 혁신 방안을 탐색, 성공적 대안을 평가	

출처: 임천순(1997). 제57차 CERI 집행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미간행자료. 교육부

(2) OECD 교원정책검토사업: 우수교사의 충원, 개발 및 유지

한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본 연구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배경보고서 작업과 OECD측에서 요청한 데이터 산출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다음은 OECD 교원정책 검토 사업 내용과 한국이 참여하는 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참여 연구자와 사업 배경 내용 및 목적과 최근 현황,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일정을 정리하였다.

<표III-4> OECD 교원정책검토사업 및 한국 참여 현황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자: 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공동연구자: 한유경(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사업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교육위원회가 설정한 주요 목표의 하나인 교수 - 학습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정책의 하나는 바로 교원 정책임. 2001년 4월에 개최된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 각국의 교육장관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교원의 질은 교육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교원 정책을 OECD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분야로 선정함. 동 연구사업은 교육 장관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OECD 사무국이 2002년-2003년에 수행될 2년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단지 교원 정책의 단면만을 다루기보다는 교원 양성에서 임용, 개발, 유지 전반에 걸친 이해 도모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음. OECD가 표방하고 있는 동 연구사업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에서 축적된 교원의 유인, 임용, 개발, 유지 관련 제반 연구의 종합 - 혁신적, 성공적 정책 이니셔티브 및 사례의 발굴 - 국가간 교원정책 관련 교훈 및 경험 공유 - 각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창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3월에 개최된 각국 대표 회의 및 2002년 5월 27-29 벨기에 브리셀에서 개최된 참여국 국내조정관 워크숍(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이근우, 교육정책과장 참석)을 통하여 연구사업의 분석틀, 방법론, 일정 등이 개략적으로 확정되었음. · 연구사업비: 분담금 40000 EURO(분석적연구 및 주제적 검토 포함) · 연구방법: 동 연구사업은 분석적 연구 및 주제별 검토라는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바, 한국은 두 가지 연구에 모두 참여하기로 통보하였음. - 분석적 연구는 동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문헌분석, 데이터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참여국 교원정책의 거시적 맥락 및 개별 요인, 정책 기제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함. - 주제별 검토는 국가간 심층적 비교를 위한 정보·자료를 수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교원정책 배경과 맥락, 주요 변수, 정책 기제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국에 정책 권고안을 제시함.
향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1월: 영문 중간보고서 OECD 제출 · 2002년 11월 25-26 제2차 National Coordinator Workshop 개최(프랑스 파리) · 2002년 12월: 1차년도 영문 최종보고서 제출, OECD 요청 국가 데이터 제출 · 2003년 1월 29-30: OECD의 사무국의 Mr. Paulo Santiago의 사전 방문 · 2003년 4월 20-29: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의 주제적 검토를 위한 한국 방문 · 2003년 3월: OECD 교육위원회에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개요 제출 · 2003년 10월: OECD 사무국에서 최종 종합보고서 초안 완성 및 제출 · 2004년 3월: 최종 종합보고서를 OECD 교육위원회에 제출, 보고서 발간 및 배포

(3) 성인학습에 대한 주제적 검토 후속 사업

성인학습은 OECD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발전, 개개인의 자아실현 및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록 제1라운드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제2라운드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라운드 사업 참여를 통하여 전 세계적 성인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아이디어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여야 할 것이다. <표Ⅲ-5>는 OECD 성인학습의 주제적 검토사업 및 한국 참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아직 책임 연구자는 미정인 상태이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 사업은 1996년 교육장관회의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2003년에 착수될 예정이다.

<표III-5> OECD 성인학습 주제적 검토사업 및 한국 참여 현황

연구자	책임자 미정
사업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6년 1월 OECD 교육장관 회의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전략은 각 나라의 문화 및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 목표, 기준, 접근에 대한 전적인 천착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들의 평생 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OECD에 요청하였음. 성인학습 주제 검토(DEELSA/ED13)에 대한 제안은 1998년 11월 교육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음. 고용·노동·사회 사무위원회의 1999년 3월 회의에서 논의 결과 추진이 확정됨. OECD 사무국은 1999년에서 2000년에 OECD 회원국의 주제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방안이 보다 견고하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는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러한 절차로 1999년에 각국의 배경보고서와 2000년에 비교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OECD의 성인교육에 대한 주제와 논지들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의 개발이며,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와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보장임을 강조하고 있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 1999-2000년도 제 1라운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2001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OECD 공동 주최로 성인학습 정책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동 컨퍼런스에는 약 25개국과 6개 국제기구에서 약 50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성인학습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현재 동 컨퍼런스 결과를 발간 작업 중에 있음. 현재 동 사업의 제1라운드는 종료되었으며, 제 2라운드 출범을 기다리고 있음. 제2라운드 사업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참가 의사를 표시하였음.
향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OECD 제 2차 성인학습정책 주제검토 사업 착수 참가국 준비회의 참석 및 사업계획 논의 제 2차 사업 검토 및 한국 국가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4) OECD 유아교육·보호정책 검토 사업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보호정책은 여타 부분에 비해 아직 추진이 미진한 부문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두 부처가 동일 연령대의 유아를 대상으로 중복 평행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표 III-6>은 OECD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검토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전문가와 관계자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 사업은 2002년에 발족하여 2004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 참여를 통해 다른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에 대하여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표III-6> OECD 유아교육 · 보호정책 검토사업 및 한국 참여 현황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자: 나정(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공동연구자: 유희정(한국여성개발원), 문무경(서울대학교)
사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교육위원회는 지난 3년(1998~2000년)에 걸쳐서 '유아교육 · 보호정책'에 대한 검토 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결과, 각국의 요청에 의해 제2차 사업(2002~2003년)을 추진하게 됨. 이 사업은 1996년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OECD 회원국 교육장관 회의가 계기가 되었음. 이 회의에서 장관들은 평생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동의하였음.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OECD 교육위원회는 가입 국가들의 유아교육 · 보호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됨. '유아교육 · 보호정책'에 대한 검토 사업, - 출생이후 의무교육 단계 이전의 유아(0~6세)에 대한 교육과 보호정책의 관심, 정책적 접근, 평가 및 연구가 핵심 주제이며, 특히 질(quality), 이용기회(access)와 공평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 - 각 국의 배경보고서를 내용을 토대로 유아교육 · 보호 관련 규제, 교직원 프로그램 내용과 실행, 가족 참여와 지원, 재원과 재정, 연구, 혁신 사례 등을 비교 · 분석하여 정책 동향, 정책 결정요인 및 정책의 성공 요인을 추출하여 제시함
사업 참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는 1997년 유아교육 개혁안 제시이후 개혁의 필요성에는 관계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시기에 OECD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 보호를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이 사업에 참여한 OECD 가입 국가들의 유아교육 · 보호정책에 대하여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 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 · 보호정책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활용 할 수 있음.

현황 및 추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6월 OECD 제 1차 유아교육 · 보호정책 검토사업 결과보고회의에 나정(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여 이 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함. 이후 OECD본부에 파견 나가 있던 교육부 황호진과장의 협조를 얻어서 유아 교육지원과와 국제협력과의 협의를 거쳐 제2차 검토사업에 참여하게 됨. · 사업비(전액 교육인적자원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금 : 54,000 EURO 총 6,4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1,000만원 2003년 5,400만원 분담지불-국제교류증진 국제부담금 - OECD전문가 국내방문 비용: 500만원-국제교류증진 국제부담금 - 연구비: 2,000만원-학술연구조성비, 2002년 특별정책연구과제 ·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 보호정책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임. 참여국가를 대상으로 본부 사업책임자의 사전 방문, 국가별 배경보고서 분석, OECD 유아교육 · 보호 정책전문가 검토단의 파견을 통한 해당 국가의 유아교육 · 보호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후 총괄 보고서를 통해 각 국에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임. - 지식베이스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 보호자료의 파악 및 신규 수록 작업을 위한 것임. 매년 2회의 정책 토의를 거쳐 참여 국가의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됨.
향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0월 14~15일: 지식베이스 개발사업 회의(프랑스 파리) · 2002년 10월 27~31일: OECD 본부 연구책임자 사전방문 · 2002년 12월: 배경보고서(국문,영문)작성완료 · 2003년 1월 지식베이스 개발사업 회의(네덜란드) · 2003년 5월 19~28일: OECD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검토단(6명) 한국 방문 · 2004년: 최종 종합 보고서 발행 및 결과보고 회의

2. 사업참여 관련 문제점

우리나라가 교육관련 국제기구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제기구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이것은 첫째,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참여 및 활용에 대한 정책적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기구 활동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의 양성과 파견이 체계적이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관련 정보 및 자료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활용상의 주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제기구 참여 정책의 전략 부재

우리나라가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서 단순 참여와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활동을 위한 정책 및 중장기적 전략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교육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많은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고 있으나 그에 맞는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기구의 정책을 형성하는 핵심 국가군의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국제기구 각종 사업에 단순히 참여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ECD, UNESC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상당수의 부처별 관련 공무원이 파견되고 있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근무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도 교육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 각 국제기구의 특성에 맞는 장·단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OECD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현재 OECD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즉, 성인학습, 고등교육정책, 그리고 노동,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략의 마련이 요청된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사업 등의 참여와 정책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적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공동체적 시각에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킴으로써 폭넓고 과감하게 교육 부문의 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에 대하여 현재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현재 국제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국제 행사나 국제기구 등의 유치에는 상당히 적극적이다(임천순 외, 1999).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유치는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이득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국제기구 본부의 지원 이외에도 국가차원에서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 국제교육 담당부서 및 부서간 협력 문제

교육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국제기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조직과 기능 그리고 특성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또한 각 기구의 정책결정은 의장단이나 부의장단 혹은 상급 부처나 위원회 또는 각 정부 협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급 진출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관련 각 국·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비해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기관 수준의 관심과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 활동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식적 조직과 절차는 그 특성이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 부처간에 역할 분담이 복잡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국제관계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제기구 본부와의 행정 절차는 국제기구 본부에서 각 국제기구 한국 상주대표부를 통하여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기구 한국 위원회, 국내 관련기관으로 진행되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업무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시일이 걸리며 한 소속 부처의 내부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일이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국제기구 활동의 양대 축인 국제기구 현지의 상주 대표부와 국내의 주무 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차원의 국제교육 관계 업무는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이 국제기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담당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적 규모가 협소하며, 잣은 인사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빈번히 교체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기구 관련 업무가 자주 단절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국제기구 활동이 부진한 원인 중 하나이다(임천순 외, 1999).

다. 재정의 영세성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부처들이 국제기구에서 국제 협력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의 경우를 보면 OECD 자체의 중앙예산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각국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다. 참가국은 적게는 4만 달러(미화), 많은 경우 수백만 달러 이

상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에 참가한다. 이 분담금은 사업 착수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국의 예산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극히 낮은 수준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활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정찬영 외, 1998).

라. 전문가 양성 및 파견 문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활동 전문가 양성 및 파견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기구 활동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국가간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담당자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책 일관성 유지가 어려우며 새롭게 업무를 파악하게 됨으로 인한 시간적 손해가 매우 크다. 이는 곧 우리나라 교육 부문 국제 협력 능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외교통상부, 상주 대표부의 경우 공무원 순환 보직제도에 의해 약 2~3년 만에 자리를 옮긴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 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단절적으로 사장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귀국 후 관련 업무와 국제 업무에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주재기구에서의 관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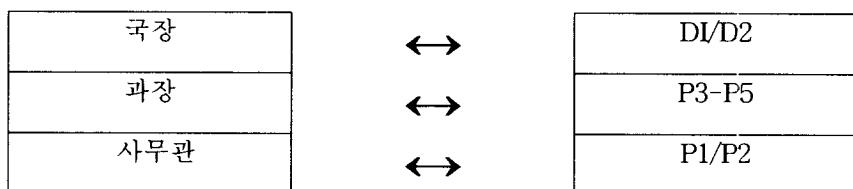
또한 최근 WHO 사무국장에 오른 이종욱씨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으로서 고위 정책 결정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으며, 다른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일하는 한국인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국제적 주요 의제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UNESCO에 자국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파견하여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등 UNESCO 전문가를 양성하여 UNESCO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는 일본 자국 인사를 UNESCO 사무총장으로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임천순 외, 1999).

그러나 과거 일본 역시 우리와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1970년대 일본의 경우,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 때문에 막대한 분담금을 내고도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주변적인 국가의 역할만을 해왔다. 분담금 비율에 비해 일본인 직원의 진출은 매우 적었고 이 때문에 주요 정책의 결정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연구하였다(임천순 외, 1999).

첫째, 자국 예산으로 국가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다시 복귀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다시 상위직급으로 파견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를 UNESCO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그림III-1>과 같다. 먼저 초임 사무관 중에서 UNESCO 파견자를 선발하여 P1, P2 급으로 근무하게 한 다음 다시 일본으로 복귀시켜 UNESCO 관련 업무를 보게 한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P3-P5의 중견으로 파견하거나 D1-D2의 고위직으로 파견하여 고위직 일본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III-1> 일본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전략

출처: 임천순 외(1999).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방안 연구. 교육부.

둘째,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Associate Expert로 파견하여 보다 유리하고 자연스럽게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상당수 일본인들이 이러한 통로를 통해 국제기구 직원으로 진출하였다.

셋째, 일본이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를 관리할 일본인을 함께 파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원조 효과와 함께 국제기구 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

넷째,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및 고위직 진출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UN 사무차장, WHO 사무총장, UN 난민 고등관을 이미 배출한 바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의 고위직에 일본인을 적극 진출시키고 있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본국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직이나 파견 절차를 밟아 일정 기간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경력 없이 초보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 본국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진출하여 근무 후 본국의 직장으로 복직하거나 바로 국제기구에 정착하기도 한다. 가능한 한 많은 민간인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무 후 해당 기구에서의 근무 경험을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 정보 및 자료의 활용 부족

국제 기구에서 산출되는 결과물들은 회의자료(Working Paper), 학술지, 단행본, 논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고 있다. 또한 각 기구 및 부설기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산출물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 국제기구별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목록이나 논문의 전문, 출판물에 접근할 수도 있다. 각 국제기구 사무실과 국회 도서관의 국제기구실은 방대한 국제기구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원문 자료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 자료가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협력관실은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과 사업에 관련된 엄청난 양과 규모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와 확산을 주관하는 일종의 Clearing House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IV.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방안

1.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자로 교육부 전직 파견자 3명과 현직 해외 파견자 4명 및 국제기구 현지 채용인 4명이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에 교육부 비 관계자가 포함된 이유는 제3자적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전직 파견자 면담은 2002년 12월 한 달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프랑스 파리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해외 파견자 면담은 2003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 출장을 통해 실시되었다. 면담 내용은 크게 우리나라 국제기구 참여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국제기구 참여 확대방안,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II-1>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구 결과

가. 선발, 지원, 행정 체제 개선 방안

(1) 전략 1: 선발제도 개선 방안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파견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 부문의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실무자들은 국가간·국제기구간

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외 업무를 추진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무의 공백을 없애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 임기를 일정 기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담당자나 부서의 전문성 축적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구축에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국제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들을 선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선발과 관련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기구 선발 및 파견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의 선발 및 파견 제도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파견자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선발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를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통해 응시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employ benefit 차원의 선발이 아닌 실제 전문성을 소유한 전문가를 선발해야 한다.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단순한 행정 실무 경험을 넘어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판단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영어의 경우 모국어 수준의 유창한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불어 등 제 2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적 자격요건 이외에도 국제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면서도 때로는 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적응력을 소유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2) 전략 2: 국제교육 담당 부서간 협의회 운영

국제기구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 참여를 위하여 교육부의 부서간 협의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과 인적자원정책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비해

야 한다. 이 두 부서간의 협의회에서는 국제기구의 동향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고려한 전문가 수요를 예측하며, 전문가 파견을 위한 예산, 결과, 효과 등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3) 전략 3: 국제 전문가 POOL 구축

교육 부문의 국제적 안목과 전문성을 지닌 교육부 직원들과 산하 연구기관원들을 하나의 전문가 풀(pool)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교육 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전문가 풀은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국제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각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정부의 교육 부문 국제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 조언 제공, 국제기구 회의에의 참여 및 활동, 국제 사업의 제안, 조정, 수행, 모니터링 및 정보 활용 등의 폭넓은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이들 인력풀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파견자들을 체계적으로 준비시키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국제기구 근무 경험을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4) 전략 4: 국제기구의 주요직 진출 방안: 목적사업 투자 방식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내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정책을 형성하는 핵심 국가군에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각종 기구나 사업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제 기구 직원 진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 때문에 막대한 분담금을 내고도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주변국의 역할을 면치 못해왔다. 분담금 비율에 비해 일본인 직원의 진출은 매우 적었고 이 때문에 주요 정책의 결정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목적 사업 투자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자국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국가공무원을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다시 복귀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다시 관련 사업에 상위직급으로 파견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임천순 외, 1999).

이러한 방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교육부 자체 사업 예산, 학술진흥재단 예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사업비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 변화를 통해 법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 우선 순위가 국제기구 사업 참여에 주어질 필요가 있다.

나. 전문가 선발 후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 전략 5: 부서 내 비형식 교육 강화: 멘터링 시스템(Mentoring System) 도입

국제교육기구 진출을 위한 공무원이 파견 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서 내 비형식 교육의 실시이다. 파견 경험이 있는 선임자 및 동료와의 업무 경험은 자연스러운 교육의 기회를 형성할 것이다. 동일 부서의 파견 경험자일 경우 같은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파견자의 전문 능력 배양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

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분야 별로 파견 경험자와 파견 희망자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전략 6: 현 파견자와 파견 예정자의 연계 시스템 도입

국제교육기구 파견 예정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과 연계하여 현지 국제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발이 파견 전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선발 이후에도 수행업무의 일부분으로서 파견 후 담당업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이를 통해 현지 파견자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전략 7: 민간위탁교육의 활성화: 유급 휴직 제의 도입

민간교육기관의 활용은 부족한 정부의 교육훈련 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 교육훈련의 다양화와 선택의 기회를 높인다는 점, 국제교육기구 진출을 위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접촉도록 함으로써 그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3개월이라는 단기적 연수·훈련이 아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훈련을 위한 유급 휴직제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 과정을 이수함으로서 국제교육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운영하는 국제기구 트레이닝 혹은 인턴쉽 프로그램에 유급 휴직의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전략 8: 현지연구 프로젝트 훈련 프로그램 도입: 관련 국제기구 사업 활동과 동향 조사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교육기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사업조사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경쟁을 통하여 계획서를 선택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현지에 직접 가서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일종의 ‘learning by doing’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급 휴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전문가 파견 복귀 후 단계

복귀 후 단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주재국의 국제기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을 경험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전략 부재이자 자원의 낭비다. 국제기구 파견 업무를 거친 공무원은 국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여 국제 업무 혹은 해당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전략 9: 국제기구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 파견자를 활용하는 방안(복귀 후 3개월 무보직 활용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비효율적인 인사제도로 인한 업무의 단절 등으로 인해 정보관리의 어려움이 많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집된 정보와 소중한 자료들 중 상당수가 상실되거나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된다면 누가 국제협력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제기구에 파견되었던 전문가들을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파견 복귀자를 복귀 직후 3개월 가량의 일정기간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활용한다면, 향후 파견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국내 정책 형성에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략10: 국제기구 관련 정부산하연구소로의 고용 휴직 장려 방안

국제기구의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산하 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평가원, 국제교육진흥원 등에 파견자들이 고용휴직 상태로 국제교육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이들을 현재 진행 중인 국제교육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국제기구 관련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교육 사업을 새롭게 계획·추진하도록 한다면, 이들의 국제기구에서 얻은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 기타방안: 민간 전문가 특별 채용

최근 국제기구에 현지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국제기구 진출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에서 기량을 펼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UNESCO, OECD, APEC 등 주요 교육 분야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해당기구의 본부 및 부속기구 등에 매년 일정 수의 인턴

을 파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민간인 자격으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했던 유경험자들을 특별 채용하여 국제기구 관련 교육사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V. 마치는 말

1. 연구결과 종합

이상에서 고찰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제교육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리더쉽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제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선발·지원·행정 체계의 개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그리고 복귀 후 활용 방안의 개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제 1단계인 선발, 지원, 행정 체계적 개선방안 단계에서는 먼저, 선발제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선발 및 파견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과 employ benefit 차원의 선발이 아닌 실제 전문성을 소유한 전문가를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교육 담당 부서간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 참여의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국제교육협력관실과 인적자원정책과의 협의체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교육 부문의 국제적 안목과 전문성을 지닌 교육부 직원들과 산하 연구기관원들을 하나의 전문가 풀(pool)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교육 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제기구의 주요직 진출 방안으로서 목적 사업 투자에 의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전문가 선발 후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부서 내 비형식 교육의

강화인 멘터링 시스템(Mentoring System) 도입, 현 파견자와 파견 예정자의 연계 시스템 도입, 민간위탁교육의 활성화와 현지 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급휴직 제의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파견 복귀 후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 파견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정부산하 연구소로의 고용 휴직 장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부 자체 내에서 국제교육 관련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관행적인 인사 제도가 전문성 중심의 인사제도로 변화도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 전반의 변화가 없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제에 적용되기에 상당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연구의 제한점

가. 제한된 국제교육 전문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 진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기구에 진출한 전문인력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아직까지 국제교육 전문가층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나. 자료수집의 제한점

단기 연구의 경우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초기 자료수집과 관련한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진행 및 질적 연구결과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철 외(1996). *새인사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 교육부(1999). *Education of Korea*.
- 교육부(1998). *한국 국제교육의 50년*.
- 김환식(1998). “국외특수훈련 결과 보고서 (UNESCO PROAP-태국 방콕)”, 교육부.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서울: 법문사.
- 서화숙 · 강인형 편(1998). *유엔 및 국제기구 : 취업전략과 현황*. 서울: 양문.
- 오기평(1992).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서울: 법문사.
- 오성호(1997). “공무원의 능력 발전 방안”.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겨울.
p. 37~55
- 유네스코 관계법규집(199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0년사(198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유엔이란 무엇인가(1996). 유엔한국협회.
- 윤영관 · 황병무 외(1996).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서울:민음사.
- 이근님 외(1997). *유네스코 교육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천순(1996). *국제교육 50년사*. 교육부.
- 임천순(1997). 제57차 CERI 집행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미간행자료. 교육부.
- 임천순(1998). 제61차 OECD 교육위원회 결과보고. 미간행자료. 교육부.

임천순 외(1999).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방안 연구. 교육부.

정우탁(1999). “1998년대 유네스코의 변화와 개혁”. 유네스코 포럼9호. 여름.

정찬영 외(1998). OECD 교육분야 정책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주OECD 대한민국 주재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mission/emb/embassy.mof?continent=EU&si_dcode=OE-OE§ion=B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UNESCO 홈페이지 <http://www.unesco.org>

UNESCO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unesco.or.kr>

연구과제 3:

국제교육정책 종합발전방안

정책 평가 연구

I. 서론

1. 정책의 등장배경 및 정책평가를 위한 연구의 시각 설정

사회 전반에 걸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과 관련된 제반 현상들의 변화 속도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교육서비스 부문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겠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뉴라운드라고 일컬어지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서비스 부문 협상 일정이 확정되어 교육을 포함한 국내 시장의 자발적인 변화보다는 외국의 요구에 의한 변화가 더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시장이 개방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맡겨놓는다고 하더라도, 개방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협상단계와 시장개방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의 기조를 형성하고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부에게 기대되는 역할일 것이다.

교육서비스 부문은 서비스 협상 논의에 포함되었던 초기부터 ‘교육이 서비스로서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었고,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적절한 합의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정에 합의한 이상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내의 찬반논의를 넘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라 교육시장은 1995년이래 사교육시장이 전면 개방되었고, 현재 뉴라운드 체제 하에서 공교육시장의 개방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찬성 이건 반대이건 간에 이미 양허안(offer) 제출 일정에 따라 2003년 3월까지 교육시장을 어떤 형태로든 개방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시장개방을 앞두고 이에 대한 국내의 찬반논의를 어떻게 설득하고 수렴하여 외국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정부의 당면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 대응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우루파이 라운드 당시 우리나라는 교육서비스분야를 전혀 양허하지 않았으나, 1992년과 1993년 한·미 쌍무협상 이후 1995년부터 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시장이 전면 개방되게 되었다. 앞서 교육부문은 전혀 개방의 의지가 없었으나 일단 물꼬가 트이자 개방을 위한 정책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였고, 뉴라운드를 전후로 하여서는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정부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부 조치들의 성격은 종합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고, 능동적 대응책이기보다는 수동적인 미봉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높으며, 뉴라운드 이후 정부조치의 경우에는 국내 교육계의 여론 수렴 없는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반발을 살 소지가 많아 보인다(<표 I-1>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안⁴⁾은 관련 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교육시장개방협상에 대한 전략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근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4) 「국제교육정책 종합발전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로, 열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분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1-1>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관련 정부조치

연도	협약	정부조치	내용 및 특징
1992.	한·미 쌍무협상 - 학원개방 요구	93.7.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개정 - 학원 개방 일정 고시 97.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95년부터 기술계·예체능계·사무계·외국어 학원 등 차례로 개방됨 사설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며 사설 학원계 전면 개방됨
1993.	한·미 쌍무협상- 의학·직업분야		95년부터 의학과 직업분야 완전개방
1997.		교육부 고등교육 개방조치 - 97년부터 외국대학과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허용, 98년부터 외국대학 설립 부분 허용, 99년부터 외국대학 설립 점차 확대	외국대학 설립 제한조치를 둠 -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 상의 '학교법인'에 한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설립요건 갖춘 자 종 선별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 학교만 허용
1998.		해외여행 및 해외송금 자유화 조치	초중고 학생들의 불법 조기유학을 부채질하는 결과 초래. 불법 조기유학생 숫자는 2001년 7천 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2001. 11.	WTO 제4차 각료회의	GATS 협상일자 확정됨. - 2002년 6월말까지 양허요구안 제출,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 제출,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 완료 후 2006년부터 GATS 협약 출범	
2001. 11.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 - (가칭)외국대학유치특별법 추진시사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근거로 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확충하기로 함.
2002. 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 제22조, 23조, 24조, 25조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학설립과 운영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
2002. 4.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을 통해 영리활동을 가능, 대학연구결과를 상업화 가능, 교비회계(수업료, 납부금) 전용 가능하도록 조치 함
2002. 6.	양허요구안 제출됨		미·호주·일본 등 9개국가로부터 교육부문 개방요구받음. 일부 국가는 초중등까지 개방요구.
2002. 8.		『경제특구법안』 입법예고 - 10월 국무회의 의결 통과 - 법안 19조, 20조	경제특구 내 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설립 가능, 등록금 이익 송금 가능, 특구 내 실질적인 교육개방의 법제화
2002. 9.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각종 특혜조치 법제화. △교지나 교사를 임대 사용 가능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를 면제 △교육과정운영 자율 △대학평의회 설치자유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보장
2002. 9.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 교원 임용에 외국인 임용근거를 마련, 초중등 기간제 교원 임용 시 외국인은 교원자격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

출처: 송권봉(2002). 교육개방: 한국교육위기의 새로운 단계. p.9. 진보교육 15호.

본 정책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현황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교육국제화 수준의 저조로 교육의 문화적 다양성과 선진지식축적의 빈곤을 초래하고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
- 실제 교육 관련 인적·물적 공동교류 등에 대비하는 법제도 및 정책적 대응 미흡
- 국제교육 관련 법제의 미비
- 교육국제화 진흥정책의 종합성 결여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 중인 정책안에 대하여 그 실행 가능성 및 대안을 중심으로 전반적이나 개괄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교육국제화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방안과 법률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이것은 교육의 국제화와 관련된 개념 및 그에 대한 시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교육의 국제화에 따른 기존의 문제의식과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상충되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설득하고 통합하는 적절한 정책적 시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의 국제화와 관련된 제반 현상을 아우르고 그에 따른 정책적·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셋째, 교육시장개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화 흐름 속에서 국가 및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제언이 가능하다는 것이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인 것이다.

2. 정책 평가의 기준

연구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 중인 「국제교육진흥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 우선 전반적인 교육의 국제화 현상 및 관련 논의들을 고찰한 뒤, 위에 논의한 연구의 시각을 중심으로 본 정책안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교육시장개방 및 교육의 국제화를 대비한 포괄적인 정책으로서 「국제교육진흥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생각은 크게 세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시장개방 및 국제교육진흥에 대한 본 정책안의 정책적 기조는 무엇이인가?

둘째, 본 정책안의 실행가능성과 그 성과 및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이와 관련된 이슈(issue)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위의 세 가지 질문에 기초하고 정책안의 내용적 순서에 따라 구성된 세부 정책 평가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평가의 기준>

1.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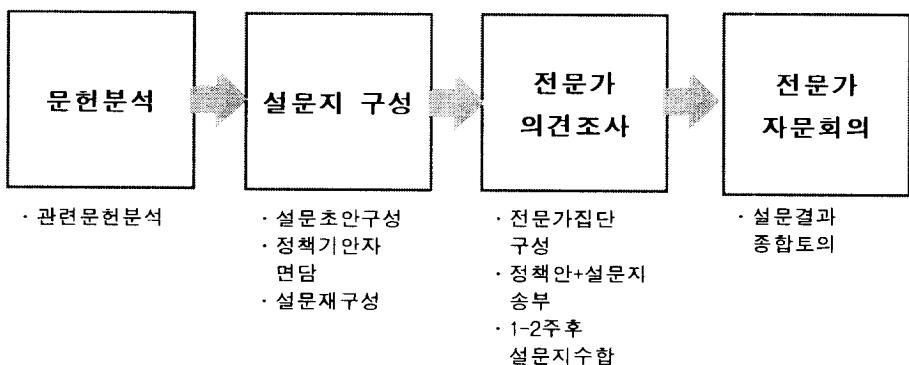
- 가. 본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경을 넘어선 교수-학습활동”으로서의 ‘교육 국제화’라는 개념적 규정이 ‘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여러 학문적 논의들(예, 국제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기에 타당한 개념인가?
- 나. 본 정책의 “국경을 넘어선 교수-학습 활동”으로서의 교육의 국제화 현상을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할 때,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 다. ‘교육 국제화’와 ‘교육의 공공성’ 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2. 정책안의 실행가능성과 그 성과 혹은 파급효과

- 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 목적과 기관의 특수성(교육사업의 주체)에 따라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에 본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나. 정규교육기관으로서 외국교육기관의 학력 인증을 통해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통제)이 정책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정책안 p.7). 형식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가 효과적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다. 수입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유지할 것인가(예, 외국교육기관의 교사의 자질 또는 자격 문제)? 나름의 평가기준 및 그 방법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 라. 교육시장개방 또는 교육의 국제화 현상과 관련하여 본 정책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내 교육의 국제교육진흥안(pp.8-12)은 실효성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대안은 무엇이겠는가?
 - 마. 본 정책의 이미 발표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나 '외국인학교 설립·입학자격·학력인정' 등이 비판받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적인 성격은 없는가?
 - 바. 정규교육기관으로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육 책무성 및 교육 공공성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기대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를 본 정책이 고려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 사. 교육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다면, 본 정책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교육자본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의 정책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국내교육의 해외진출을 함께 고려한 정책 대안이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들이 정부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3. 교육시장개방과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기타 제언: 전반적 정책기조, 관련법률 및 기타 관련 제언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는 크게 교육시장개방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 문헌분석과 본 정책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하여 관련동향을 파악한 뒤, 정책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초안은 연구자들이 정책안 및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마련하였고, 정책 기안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정책 기안 의도를 반영, 수정하였다. 관련 전문가는 교육시장개방 관련 연구 경험이 있거나, 국제이해교육 관련 전문가, 교육법 및 교육학 전문가 7인을 선정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다. 이들에게 각각 「국제교육진흥 종합발전방안」 원문과 연구자들이 구성한 '정책평가 기준에 관한 설문지'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약 1~2주간의 정책안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 설문 응답지를 수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소집하여 본 안에 관한 전문가들간의 종합적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1-1> 연구방법 및 절차

II. 교육시장개방과 관련논의 현황

1. WTO 교육시장개방 협상 경과 및 우리나라 현황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전까지는 서비스 부문이 비교역제로 간주되어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다자간 규범인 GATS를 통하여 서비스부문이 교역제에 포함되었고, 뉴라운드(DDA)에서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상 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2005년까지 거의 모든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UR 협상 결과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발효. 비교역제였던 서비스가 교역제로 간주되기 시작.
- 2001. 11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 협상체제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출범하여 개방을 위한 협상 일정 확정.
- DDA 결정에 따라 2002. 6. 30까지 각 국은 시장개방요구를 담은 양허요청안(request)을 교육상대국에 제출(한국도 중국 등 23개국에 요청안을 제출)
- 2003. 3. 31까지 자국의 시장개방안인 양허안(offer)을 WTO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비스 협상은 2004년까지 매듭짓고 결정된 사항은 2005년부터 발효될 예정

<그림 II-1> WTO 서비스 협상 경과

교육 부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처음 서비스로서 포함되었으나 협상의 주요쟁점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교육부문을 양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 쌍무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문이 열렸고, 이를 통해 사교육시장이 전면 개방되기 시작했다(<그림 II-1> 참조). 우리나라는 이를 기점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의 일환으로서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선회하였다(박순찬, 2002). 이러한 시장개방은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고등교육에서 초·중등교육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송권봉, 2002).

그러나 교육시장은 국내 교육계의 합의와 무관하게 협상일정에 따라 불가피한 개방을 앞두고 있다. 2002년 7월까지 우리나라에 협상 제안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이다. 이들은 교육서비스 교역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로 평가되고 있다(박순찬, 2002). 이들이 제안한 협상서는 주로 고등교육 이상의 분야에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는 초·중등교육분야까지 확대하여 양허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Mode 1, 2, 3, 4⁵⁾ 가운데 Mode 1, 2, 3의 양허를 요청하고 있다(김준동, 2002).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II-1> 참조).

5) WTO의 서비스 교역 형태: ① Mode 1; 국가간 서비스 공급, ② Mode 2; 해외소비, ③ Mode 3; 상업적 주재, ④ Mode 4; 자연인의 이동 (이후 주요 개념 논의에서 설명됨)

<표 II-1> 교육서비스분야 제안서 내용 비교

국가	제안 내용	기타 유의 사항
미국	고등교육, 성인교육, 훈련서비스 개방, ENT, 학작요구, 조세, 현지인 고용 요건, 소득·이익 송금 등 관련 장애요인 개선	국내법규, 보조금 관련 투명성 제고
뉴질랜드	“기타 교육서비스”에 단기훈련, 언어연수, 직업교육 등 포함	
호주	외환규제, 자격인정 제한, 지분 제한, 제휴협정 체결 제한, 비자 제한, 온라인 교육 제한 등의 장벽 완화	통신, 시청각, Mode 4 등을 포함하여 전체 서비스 협상 차원에서 논의 필요
일본	자유화 촉구(시장접근 제고, 내국민대우 보장, 국내 규제 완화), 소비자 보호 및 학위인정 조치 마련 필요	국제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출처: 김준동(2002).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세부의제별 간담회 토의자료집. 2002년 9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밖에 현재 우리나라라는 중국, 싱가폴, 대만, 브라질, 파키스탄 등에서도 양허요청을 받았으며, 호주, 중국, 일본, EC,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 양허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우리가 요구한 교육서비스 분야는 초·중등교육분야를 제외한 고등·성인·기타 교육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양허안의 주요 쟁점은 Mode 1과 Mode 2에 있어 허용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국내 현황과 대응방안이 준비되어 있는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상황이다.⁶⁾

초·중등교육이 교육시장개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이미 개방되어있는 학원 등 사교육시장을 제외한 가장 치열한 격전

6) 교육서비스 분야가 무역의 대상인가라는 질문과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논의는 아직 각국 및 각국 단체의 입장에 따라 매우 분분하며 일관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이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의 OECD/US 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포럼 출장보고서(2002, 내부문서)에 따르면, 각 입장들에서는 대체로 교육의 영리·비영리성이 서비스로서의 무역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비영리성을 띠는 사적 교육기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가 될 곳으로는 고등교육시장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시장은 대부분이 공공지원이 아닌 사적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어 양허를 요청한 국가들이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총교육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원은 OECD 평균치보다 훨씬 낮아 고등교육비는 거의 사적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2> 참조). 교육비의 절대 액수도 OECD 평균 이하로 교육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순찬, 2002). 사적부담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질적 교육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가장 크게 휘청거릴 분야가 바로 고등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II-2>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고등교육			전체 교육
	공공 부담	사적 부담	총계*	
한국(1998)	0.44	2.07	2.51	7.0
한국(1997)	0.5	1.95	2.5	7.4
한국(1995)	0.4	1.50	1.9	6.2
캐나다	1.53	0.32	1.85	6.2
프랑스	1.01	0.12	1.13	6.2
독일	0.97	0.08	1.04	5.6
영국	0.83	0.28	1.11	4.9
일본	0.43	0.60	1.02	4.7
미국	1.07	1.22	2.29	6.4
OECD전체	1.06	0.29	1.33	5.7

* 총계는 가계에 대한 공공 보조금을 추가로 포함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2000, 1998*.

재인용: 박순찬(2002).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및 국내 현황. '도하 대발 아젠다 협상' 세부의제별 간담회 토의자료집. 2002년 9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교육시장개방의 주요 이슈

교육의 국제화 현상은 세계화의 흐름과 교육시장개방과 맞물려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미래세대가 우리 문화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잡힌 정책적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종합적인 국제교육정책으로서 초점을 두어야 할 이 두 가지 맥락에 대한 여론의 인식이 부족하며, 전문가들 간의 합의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관련 주요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략적으로 살펴 개념 정리 및 합의 도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교육계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정리·비교하여 불가피한 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 교육계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교육시장개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가. 국제이해교육 및 교육시장개방 관련 주요 개념 이슈

교육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보다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사개념들이 빈번히 사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정확한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유사 용어 및 개념정의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의 출발점에 있어서

국제화 및 관련 개념, 의미, 시사점, 대응 방향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도출되어 정착되었다기보다는 그 기본 개념이나 의미조차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한 혼란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전숙자, 이인표, 1999, p. 25). 따라서 국제화와 관련된 유사개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일정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용어의 사용 맥락에 따라 고려해야 할 측면들을 살펴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때에 가지는 의미들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시장개방 및 국제교육 관련 정책의 종합성을 두 축으로 나누어 볼 때, 크게 초·중등 수준에서의 국제이해교육과 국가경쟁력으로 일컬어지는 WTO체제 하에서 교육시장 관련 개념이 먼저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국제화’와 ‘세계화’라는 두 용어가 서로 혼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 혹은 조직의 활동범위의 차이로 구분지을 수 있다. 즉,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국가(nation) 간의 경계를 넘어(inter) 일어나는 교류 현상 및 그 추세를 지칭한다면,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제화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기존의 국가개념을 초월하여 전 인류, 전 지구적 수준에서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통합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유석진, 1995).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교육적 요구로 국제화 또는 세계화가 교육과 연관될 때, 세계교육, 국가개발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지역교육, 인권 및 기본권 교육, 평화교육, 문해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관련 개념 혹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이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용어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상 세계화, 국제화라는 용어가 변화나 흐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교육 개념들 또한 고정된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이를 보는 시각과 그 내용의 강조점에 따라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정두용, 신은숙, 정득진, 2000). 이에 대하여 김현덕(2000)은 국제이해교육을 문화간 이해, 세계적인 시각 혹은 관점, 세계 각국인을

연결시키는 세계 체제,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나 이슈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가변적인 국제이해교육의 특성을 반영해주고 있다.(정두용 외, 2000에서 재인용)

이들 국제화에 대한 교육의 대응방식들, 통칭하여 국제이해교육은 최소한 세 가지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전숙자, 이인표, 1999). 첫째, 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교육이 그것이다. 둘째, 국제평화, 식량, 환경문제 등과 같이 인류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교육이다. 셋째,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인류공동체 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이러한 지구촌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교육을 말한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응방식으로서의 교육 요구들을 초·중등교육에서와 고등교육에서 나누어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초·중등 교육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고등교육에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에 보다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⁷⁾ 교육시장의 개방이 고등교육과 성인 및 기타교육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시장의 개방 대상에서 초·중등교육이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보편타당한 가치의 교육 측면과 경제 논리로서의 교육의 대상화는 교육현장에서도 그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⁸⁾

-
- 7) 국제이해교육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사회과 교과들의 교육과정 목표(김경자 외, 1997)는 거의 예외없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제대학원을 집중 육성한 바 있고,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정책에 대한 젊은이들의 대처전략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한 자기경쟁력 강화(예, 자격증 획득, 외국어 능력 신장, 대학원 진학 등)로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대학들의 개혁 움직임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8) 전숙자, 이인표(1999)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화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개념화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5.2%가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인류공동체 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이러한 혼란은 국제이해교육이 세계적 보편 가치인 평화와 협력, 인권과 자유,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퇴치와 불평등의 해소 등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국제화시대에 오히려 국가주의의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화의 의미수용 형태에 대한 한 연구(김경자 외, 1997)를 참고하면, 1) 국가 및 지역의 개발 및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주의'와 '지역주의', 2) 국가 간의 정체성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관계로서의 '국제주의', 3) 문화·생태·경제·정치·기술 등의 체제가 점차 하나의 체제로 기능한다는 범지구적·세계시민적 인식의 '세계주의'로 범주화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를 국가주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략은 국가주의 시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 시각의 맥락에서 교육의 국가경쟁력 혹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필요성을 증대시킨 WTO의 GATS로 대표되는 교육시장 개방 요구는 기존의 국제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이해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계 전반에 걸친 개혁의 움직임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렇다면 교육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교육개방 상황에서 교육시장이란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련의 서비스 산업군을 말한다(한준상, 1994). 초·중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특수교육기관, 전문강습소와 일반강습소 등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교육적 서비스 활동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최운실, 1991; 한준상, 1994). WTO의 교육서비스 활동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초등교육(취학전 교육서비스, 초등교육서비스 포함), 중등교육(일반 중등교육, 고등학교, 기술 및 직업교육 포함), 고등교육(중등교육 이후의 기술 및 직업교육, 대학 및 기타 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지구촌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교육한다.“라는 문항에 응답한 반면, 심층 면접에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 목표와 교사의 목표 인식의 불일치는 초·중등교육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국제이해교육과 국제수준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치의 혼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2> 교육시장의 형태

출처: 한준상(1994). 교육시장개방의 교육개혁과제. 한준상(1994). 한국교육개혁론. 학지사. p. 250

등교육), 성인교육(성인을 위한 비정규 고등교육 부문), 기타 교육에서의 상업적 차원의 서비스가 교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시장의 규모는 그만큼 방대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영리적 목적이 없는 서비스는 제외되기는 하지만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육체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WTO에서는 서비스의 교역 형태를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있으며, 교육부분의 예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간 서비스 공급 (Mode 1; Cross-border supply): 원격교육의 경우
- 해외소비 (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유학 형태
- 상업적 주재 (Mode 3; Commercial presence):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외국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관련 활동
- 자연인의 이동 (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외국인 교사 혹은 교수에 의해 교육이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분류기준은 교육시장개방의 대상이 '교수-학습행위'와 관련된 제반 교육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최근 양허요구안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기타교육의 훈련서비스(training service)와 교육 평가 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교육서비스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류기준이 보다 구체화된 교육시장개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교육시장분류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고려 및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나. 교육시장개방의 근본 이슈: 찬반 논리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논리는 '교육의 공공성 대 교육경쟁력 강화'로 요약 될 수 있다. 교육에는 공산품과 같은 재화가 가지는 특성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는 점에서 이 찬반 논리는 갈등의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 교육시장개방에 긍정적이며, 또한 WTO체제 하에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쟁점은 교육시장개방의 반대 논리에 대하여 어떻게 설득하고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최운실과 최돈민(1991)이 제시한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긍·부정적 파급효과는 개방에 대한 찬반논리가 가지는 주요 관심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표Ⅱ-3> 참조).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찬성 입장은 외국의 유수 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양성을 통한 국가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선택이 가능한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점, 이로써 국내 학문 및 기술 수준의 국제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시장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을 통하여 침투하는 외국 문화에 대한 우려, 국내교육이 교육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대외의존도만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 교육경비의 해외 과다 유출, 교육의 상품화 및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이 조성될 것에 대한 우려는 교육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이 가지는 논조의 주를 이루어 왔다.

GATS 협상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러한 찬반 갈등은 보다 침여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시장개방 반대 입장에서는 협상결과 예상되는 변화로 공교육에 대한 외

<표 11-3> 교육시장개방이 국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외국의 우수교육기관 유입을 통한 국내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교육을 통한 외국 문화의 침투
○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의 다양화	○ 국내 교육기관의 자생력 약화와 위축
○ 국내 학문·기술의 국제화 및 다원적 국제 관계망 형성	○ 국내 교육의 대외 의존도 심화
○ 국내 교육의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국제적 보급·확산	○ 교육적 경비의 과다 해외 유출을 통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손실
	○ 상업주의적 교육풍조의 만연
	○ 계층간 교육 위화감 조성

출처: 최운실, 최돈민(1991). 교육부문 시장개방의 전망과 대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국교육기관의 수도권 교육부문 진출 허용, 고등교육부문에서는 '학위판매 현상' 및 투자에 대한 과실송금의 전면 허용, 대입전형 등의 자율화에 따른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의 증가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공교육 분야의 개방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사교육 부문에 대하여는 학력평가서비스, 유학알선 등으로 사교육시장이 팽창될 것이며, 입시다양화에 따라 외국어학원 및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에 맞춘 대입 사교육시장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송권봉, 2002). 이러한 예상은 교육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교육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정책에 대한 반발이 더욱 강해질 것임을 시사해준다.⁹⁾

다음은 송권봉(2002)이 교육시장개방의 찬반논리를 주요 쟁점에 따라 정리한 것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시장개방 반대 입장에서 우려하는 바를 정책적 설득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협상과정의 전략을 찾아내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9) 일례로 이미 결성된 'WTO교육개방·시장화 관련 4대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활동을 들 수 있다.

(1) 인적자원개발 선택권 보장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 유수 교육기관으로부터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이것은 교육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소비자의 경제적·비경제적 후생 증대가 가능하며, 인적자원의 총체적인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면을 간과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일차적 관심은 '수익성 확보'에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인력수요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배려 없이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인력수요와 관계없이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되면 '고학력실업'의 악화 등 노동시장이 더욱 왜곡될 수 있다. 특히 절 낮은 외국교육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인적자원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2) 국내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교육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선진 교육프로그램이 유입되면 국내·외 교육기관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존을 위한 국내교육기관의 구조조정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촉진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수방법, 대학운영기법 등이 국내에 전수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교육시장을 단기간에 침식할 경우, 국내교육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역시 단기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교육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우리 교

육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될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3) 해외유학의 대체효과와 국제수지 개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해외유학의 경우 교육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외국교육기관으로의 유입을 통해 해외유학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경우, 유학비용의 절감은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방대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동시에 국내대학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본격화되어 현재와 같은 일방적 유학생 송출이 완화된다면 국제수지 적자도 크게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외국교육기관들이 국내 교육시장을 잠식하게 되어 교육적 경비의 과다 해외유출을 통한 경제적 손실 위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 들어온 외국대학들이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유학을 위한 준비단계로 삼거나 수업연한 중 일부는 본교에 진학시키는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에는 외국유학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교육기관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미흡할 경우 국제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국제 교류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국제교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며 여러 나라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 교육시장개방으로 국내 교육기관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한국의 교육 및 문화 보급에 따른 홍보에도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반면에 교육개방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에 기인하여

국내 교육·문화가 종속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지명도가 높은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할 경우 국내에서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게다가 특정 국가 위주로 교육이 편향된 성향을 보이고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논리를 살펴보았다. 정부는 이러한 논리의 조정자로서 이들을 수렴하기 위한 입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방의 폭과 속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찬반의 입장은 수렴하는 개방의 적정수준이 있는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방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불가피한 개방의 전제 하에 개방의 폭과 속도를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방의 수위는 각 국가에 대한 양허안에 의하므로 개방에 대한 소극적 대응책 마련보다는 상대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개방의 폭을 결정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교육시장개방 과정에서의 정책의 방향성

앞서 교육시장개방의 찬반 논리를 통해 '교육시장개방 이전'에 국내 교육계의 시장개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와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시장개방 협상과정'과 '교육시장개방 이후'에 대한 전망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교육시장개방 협상 과정에서의 정책적 방향성

단기적으로 교육시장개방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교육시장 현황 및 교육경쟁력 차원을 제고한 협상안들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취약한 교육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높은 교육 수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 교육구조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파악을 한 후 협상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약한 교육 경쟁력이 일정 수준 이상 강화될 수 있도록 개방의 시기를 유보하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별적, 점진적 개방으로 유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최운실, 최돈민, 1991). 한편 교육의 독특성으로 시장화·상업화에 대한 논란이 국제적으로 많은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국제회의 참여 등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망을 구성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무수준에서의 구체적인 협상전략은 국가별·교역형태별·교육수준별·사교육시장 등으로 각론화하여 구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시장개방 이후에 대한 정책적 고려

교육시장개방 이후에 국제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와 더불어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즉, 불가피한 교육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동시에 빠른 개방의 속도로 인한 부작용과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협상에 들어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외국 자본과 양질의 교육은 받아들이되 국내 교육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단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정부의 관리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교육이 국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III. 정책안에 대한 평가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 중인 「국제교육진흥 종합 발전방안」의 개념적 규정 및 정책의 기조, 정책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

가. 본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경을 넘어선 교수--학습활동”으로서의 ‘교육 국제화’라는 개념적 규정이 ‘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여러 학문적 논의들(예, 국제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기에 타당한 개념인가?

본 정책안에서 교육의 국제화, 국제교육, 교육시장개방 등 일련의 유사관련용어들이 명확한 의미와 적용범위들이 정리되고 구별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어 초점 있는 명료한 대책 및 법률안 마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고 전개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관련하여 본 정책안의 핵심적인 궁극적 목적(priority target)이 무엇인지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정책안의 일차적인 주된 목적이 1) 국제교육정책 종합발전방안인가, 2) 교육국제화 촉진 법률

안 제정인가, 3) 우수인적자원개발·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 유수 외국 교육기관 국내 진출 설치 촉진 제도 및 법제 마련인가, 4)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현실적인 WTO GATS 교육시장개방 대책 강구인가, 아니면 5) 상기 목적이 망라된 종합적 대책인가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에 적절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경을 넘어선 교수-학습활동으로서의 교육 국제화’의 정의는 본 안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전반과 이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에 통용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문현분석 부분에서의 (김경자 외, 1997) 참조), 세계화가 ‘국가주의’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맥락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국제화’는 ‘국가간 경쟁’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포함한다는 면에서 ‘교육시장개방’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국제화라 함은 국제적 표준 속에서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교육 서비스가 상품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간 교수-학습활동의 상호의존도 심화 현상”, 또는 “교육서비스 시장의 국제적 상호의존도 심화 현상” 등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단순히 ‘교육 국제화’를 외현적인 현상적 실체로 정의하기보다는 정책적 방안을 규정하는 조작적 정의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정책안이 교육의 국제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국제교육 전반에 걸친 진흥을 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 국제화’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와 더불어 국가의 국제교육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 및 그에 따른 정의가 요구된다.

나. 본 정책의 “국경을 넘어선 교수-학습 활동”으로서의 교육의 국제화 현상을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할 때,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대내·외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대내적 측면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시장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정책의 방향은 교육시장개방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하고 국내 교육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안이 함께 마련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내적인 측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어느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첫째, 세계의 국민이 모여서 활동하는 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전제 위에서 교육시장을 폭넓게 개방함으로써 외국의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모여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함으로써 인재와 지식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향

둘째, 점진적 시장개방 전략을 취하면서 우리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교육서비스 수출국을 지향하는 방향

셋째, GATS의 구분에 따라 볼 때, 해외소비(M2)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서비스 수입의 패턴을 M1, 3, 4 등으로 부분적으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

본 정책안에서 들고 있는 교육국제화 정책 목표 3가지는¹⁰⁾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위의 첫째와 둘째-로 정리될 수 있으며, 세부설명을 참조할 때 위의 둘째 정책 방향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 설명 부분에서 언급된 국제특구지역을 과도기에 변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위의 첫째 방향을 언급

10) 본 정책안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에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한국을 인재와 지식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국채 교육프로그램과 졸업장·학위자격의 경쟁력 제고, 이를 위한 국내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의 국제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 것이고, 첫째 방향과 둘째 방향은 서로 성질을 달리 하므로 전자가 후자의 과도기 대안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과 국제교육에 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의 방향이 난해해지고 초점이 흐려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첨부된 법률안의 구체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정책방향 수립의 기준으로 교육시장개방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개방전후 시기에 따른 체계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개방이전 정부는 교육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육서비스 산업과 교육시장, 영리형 교육기관과 비영리형 공교육기관에 대하여 어디까지 개방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협상에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방에 앞서 국내교육기관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우선 과제인 바, 국내 교육기관에의 규제 완화 및 지원 강구, 자율화·다양화·특화 촉진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교육기관을 선별하여 육성하고 거점화하는 대신 부실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태 처리하는 과감함이 있어야 한다.

개방은 WTO 체제하에 있는 우리에게, 국제무역질서에 동참하고 따르는 필연적이고도 필수적인 글로벌 동향이므로 정확한 현황 및 문제 진단과 준비를 통해 '끌려가는 소극적·부정적·타율적' 개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방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개방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과 국내기관의 외국 진출을 동시에 대등하게 촉진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개방전략 추진에 있어서는 국내교육기관에 이득이 극대화될 수 있는 영역·시기·방법 등을 구체화시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개방협상에서는 분야별 개방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하며, 이는 총론이 아닌 각론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각론화의 방향은 유·초·중등 공교육 분야와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 분야, 성인 및 직업교육, 특수영재교육 등 영

역별로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세워야 하며, 영리형 사교육기관과 비영리형 공공 교육기관의 구분도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마다 진출 방식이나 진출 목적, 진출 유형 등이 다양하고 차이가 많으므로, 진출 우선 가능국가들(예,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진단하여 국가별 쌍무 협상 차원의 각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의 교육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교육의 기간투자에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가 외국인을 통합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에게 통합되어 교육받는 현상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교육시장의 개방에 따라 정부의 역할 축소가 예상됨으로 개방을 통한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육관리체제가 우리 교육의 주체성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 ‘교육 국제화’와 ‘교육의 공공성’ 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교육시장개방 반대의 주된 논리가 교육의 공공성 유지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두 개념은 대립적 인상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적 개념 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교육의 국제화를 교육의 공공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은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교육의 공공성과의 대립된 관계를 중립적인 시각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 ‘교육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의 국제교육을 진흥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의 국제화는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을 보완하는 ‘보완재’(대체재가 아닌)로서의 기능이 강조될 수 있다. 환연하면 교육 국제화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교육의 상업화로 인한 역기능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

가 있을 것이다.

2. 정책안의 실행가능성과 그 성과 혹은 파급효과

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 목적과 기관의 특수성(교육사업의 주체)에 따라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에 본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 목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보여진다 1) 경제적 목적, 2) 종교적·이념적 목적, 그리고 3) 자국민 교육 목적이 그것이다. 세 번째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을 지닌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개방에 대하여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일단 국내 교육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교육기관의 퇴출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소재 고등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예상외로 퇴출을 빨리 경험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관리 주체가 정부에서 시장으로 옮겨감으로써 좋은 의미에서는 탈규제를 앞당길 수 있으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이 제약될 것이다.

국내의 교육열에 편승한 저질의 외국 교육기관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국에서 학생 유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비우수 주변 기관들이 영리 목적으로 진출해 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외유학 대체효과나 국내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는커녕 오히려 국내교육시장의 해외 참식 및 국내교육 공동화 현상만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1) 법인 설치나 시설 투자 등 실제적 교육투자 없이 교수인력과 프로그램 및 학위 기관 브랜드 명성 등만을 진출시켜 등록금 이익

과 로얄티 등을 본국으로 송금해 갈 경우, 2) 해외 유령기관의 진출과 등록금 입학금 등의 수령 후 폐교한 후 다른 명칭으로 재개교 후 재폐교와 파산을 반복하는 경우, 3)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인력 이동 없이 국내 부실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이름만 빌리고 로열티만 챙기는 식의 프랜차이즈 운영의 경우 국내 교육관련법상 무자격자가 단순히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 없이 교수행위를 할 경우, 5) 무차별적으로 개방이 예고되는 사이버 교육프로그램과 Off campus 학위 프로그램 문제, 6) 교육 경쟁력의 지표와 잣대, 기준이 외국어 교수능력, 외국어 원어 강의, 외국인 교수 확보율, 외국인 학생 보유율 등 외형적인 잣대로 편협화되어 실질적 교육의 질 제고나 성과 제고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차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에서 국제화에 따른 법적용을 명료화할 규율을 먼저 정립한다고 하였으나 정책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로 한다 해도 여전히 법적용이 명료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혼동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 법안 자료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대표자는 국내의 가장 유사한 법인에 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외국법인은 동일한 교육사업을 하는 국내 유사한 법인과 동일한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하였다. 먼저, 외국 법인의 성립과 존속에 관한 기준법은 외국법으로 추정되는데 기준법에 따른 존속 여부와 권리 능력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둘째, 유사한 법인에 준하여 등기하도록 하면 이 유사한 법인에 적용되는 법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다양한 존립 근거를 갖는 법인이 있다면 어느 법인에 준하여 권리·의무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셋째, 외국 법인과 동일한 교육사업을 하는 다른 국내 법인이 없으나 동일한 교육사업을 하는 국내 법인이 그 사업이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는 경우, 영리 추구 및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법인과 마찬가지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가의 가능성 여부도 의문시된다. 넷째, 영리 추구와 관련해 국내인이 외국인을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경우 영리 추구와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를 '학교법인'으로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를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지만, 간주한다는 것이 행정 처리상 학교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법률 행위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 대학과 공동 운영되는 외국 교육과정의 경우 이들 대학들을 국내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보며 학생과 교수도 국내 대학 학생과 교수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만 공동 운영하고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외국의 대학이 본국에서는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영리 목적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의 학생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나. 정규교육기관으로서 외국교육기관의 학력 인증을 통해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통제)이 정책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정책안 p.7). 형식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가 효과적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본 정책안에서는 '인증제'를 예시로 하여 외국인의 국내 교육사업활동에 대한 규율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나, 교육의 질을 통제하고 교육기관을 규율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와관련 협상시 내국민대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정규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수진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반면, 비학위 비정규 프로그램이나 학원 및 성인교육, 평생직업교육 시장들의 경우에는 국내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하지 않으므로, 동종의 외국기관에 대한 인증제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단, 학점은행제 적용 성인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설립·경영 자체를 매우 용이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며, 질 관리 기준의 내용면에서도 외국교육과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실효성 있는 기준의 정립 자체도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인증제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도 지도·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내 사무소를 학교법인으로 본다든지, 각종 단체도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여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곤란한 일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인증제의 적용은 국내진출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학력인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진출한 Temple University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아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식의 교육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기도 어렵거나 과거에 인증을 신청한 경우도 없다고 한다. 또한 외국 교육기관의 학력을 자국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를 국내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간 외교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정부차원의 인증보다는 ‘시장에서의 인증’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또한 정책안에 의하면 외국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원으로 취급한다고 하였는데, 인증 절차를 거쳐 학위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경우 학원과 대학의 경계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들이 학위를 수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인은 학원을 경영해도 인증을 통해 학위 수여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나, 반면에 외국교육과정 운영자에게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적 조치로서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학력인증’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국내 학교를 포함한 ‘학교평가체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 교사의 질, 학교운영방식 등에 대한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정보를 교육소비자들에게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인증은 앞으로 시장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오히려 정부는 교육기관의 활동에 대한 규칙(rule)을 정하고 이것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인증제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교육 체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 관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수입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유지할 것인가(예, 외국교육기관의 교사의 자질 또는 자격 문제)? 나름의 평가기준 및 그 방법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앞서 계속 지적되는 바와 같이 교육시장개방 이후 유입되는 외국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매우 깊다. 이들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율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의 교육은 단기간에 외국 교육기관의 상업적 목적만을 충족시키며, 개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이득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평가체제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계적이며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체제 하에서의 교육의 질 관리 역시 수준 높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이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소극적인 규율 방법은 현행 기준에서 정규 학교나 대학의 경우 국내 학교들과

동일한 학교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단, 평가기준들이 국제적인 공인기준들과 크게 다르거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도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예컨대 대학평가나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교사평가, 교수 평가 등과 맥락을 함께 하여 외국교육 기관과 교수 인력 등에 있어서도 일부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동일한 평가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Mode 3: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국내의 설립 기준을 준용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자연인 주재(Mode 4)에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사의 자격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교육과정 운영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교사의 자격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외국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국내 교육기관의 교사와 같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방안대로라면 더욱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일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로 각종 서류를 제출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받는다 해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외국의 다양한 학제와 자격인정 제도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고등교육은 해당 대학에 맡기고, 정부는 초·중등교육 교원에 대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양허한 42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만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연인 주재를 엄격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및 일정기간의 연수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기간제 또는 계약제로 채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현재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 규제 완화와 자율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기관의 새로운 평가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

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정시스템과 기준의 개발 및 적용은 반드시 국내기관과 외국기관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평가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평가체제’를 통해 평가정보를 공개·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수입되는 교육의 질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시설평가, 학교운영평가, 교사자격평가, 교육과정평가, 학생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정보를 교육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동차의 경우 수입차에 대해 내구성, 안전성,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 교육시장개방 또는 교육의 국제화 현상과 관련하여 본 정책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내 교육의 국제교육진흥안(pp.8-12)은 실효성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대안은 무엇이겠는가?

본 정책안에서 제시된 국내교육 국제화 지원 방안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들로 판단된다(<그림III-1>참조). 이와 관련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방안들이 우리 교육기관들의 국제화 수준 및 국제비교지표 등의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교육 국제화 실태 파악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취약구조와 상대적 비교 우위 부문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국제화와 자율화,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개방 이전에 획기적 지원을 위한 투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안에서 먼저 제시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국제화 지원방안과 관련 대학교육의 ‘경쟁력’ 지원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으로 인한 낮은 교육경쟁력에 대한 개선 및 지원 방안이 있을 때에 본 안에서 제시되는 정책안들의 현실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대학의 한국학 지원사업으로 한국학과 한국어 선택과목의 개설, 해외 한국인 교수 및 해외 한국어 연구소 등의 지원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등교육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성인 및 직업교육 부문의 해외 진출과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안에서 외국 유수 교육기관이 매력을 느낄 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인센티브도 다양하고 포괄적이기는 하나, 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측면에서 외국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예, 보조금, 수도권 설립 허가 등)가 취약해 보인다.

외국인 학생 유치는 국내 교육기관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이는 저개발국 유학생에 한정될 것임으로 국내 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안 중에서 외국 교육기관 또는 교직원과의 협력 및 공동 사업 실시, 교수 및 학생 교환 등을 저비용·고효율의 대안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태도(예, 연구비 지원 등)가 요망

국내교육 국제화 지원 방안

- 대학교육의 국제화 지원
-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교육분야 협력/공동사업
- 외국인, 외국인유학생 생활여건 개선
- 외국인 교수(교사)와 외국인학생 자격 및 체류
-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성인대상)
- 국제전문인력의 양성(국제고등학교-국제대학, 국제전문대학원)
- 국제교육교류 및 연구 신탁기금 사업 시행
- 전문학원의 국제경쟁력 강화
- 특별구역에서의 교육국제화 관련 특별 조치

<그림 III-1> 국제교육정책 종합발전방안: 국내교육 국제화 지원방안(pp. 8-12)

된다.

그 외에 외국인 국내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로 유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유학정책의 획기적 재검토(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조기유학과 편법 유학, 교육이민 등과 관련된 근본적 정책 검토 필요), 외국어 강의능력과 외국어 구사력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대학 및 학교와 각종 교육기관들의 원어 강의 확대와 교수진 및 교사들의 외국어 교수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교육·훈련 대책의 강구,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들의 교육 상담 컨설팅 및 편의 지원 시스템(예, foreign student advisor, foreign student consulting center 등)의 구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제시된 지원방안으로 국제고등학교, 국제대학, 국제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었다. 오히려 기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이미 과학교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를 확보하면 될 것이며, 이와 관련 박사학위 소지 초·중등학교 교원을 배치하고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전문인력학이라는 단일의 학문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신 국제대학을 설립하기보다 이미 많은 다양한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기존 대학에서 협동 과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 국제대학 진학에서 우선 입학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경우에 야기될 문제점도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국제고등학교 정원이 국제대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 현재 과학교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경쟁적으로 설립할 경우 결국 국제고등학교도 그간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도 있다.

마. 본 정책의 이미 발표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나 '외국인학교 설립·입학자격·학력인정' 등이 비판받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적인 성격은 없는가?

국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과 규제완화 정책, 자율화·다양화·특화 정책 등이 포괄적으로 추진되면서 동시에 본 정책안이 진행된다면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외국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면하게 함으로써 역시 국내 대학을 차별하는 성격을 갖게 되며,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균형있는 성장을 꾀해온 기존 정책과도 배치된다. 물론 외국교육기관에 외국인만이 입학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국인이 학생의 중심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서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외국 초·중등학교의 학력인정 문제는 탄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학제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교육 기회를 제한하기보다는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입학자격의 통제권을 국가가 아닌 학교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국내 외국인학교는 상급학교 입학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외국 대학에서는 인정해주며, 외국인학교 재학생이 졸업 전에 외국의 정규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다음 졸업한다면 역시 학력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결국 학력 인정 문제는 학생 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송금, 잔여재산 귀속, 영리 활동 가능 등의 파격적 조건도 분명히 역차별에 속한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외국의 유수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교육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로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노-하우를 익히고, 이를 기초로 교육 서비스를 수출하는, 이른바 후발성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불

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몇몇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러한 특혜 조치를 제공한다 해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투자하지 결코 교육 활동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할 의사는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안의 이러한 역차별적 성격에 대해서 정부는 교육단체나 교사, 교수, 대학 및 학교 관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논점 파악에 근거한 정책적 조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막연한 주장이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판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예상 문제 및 파급효과, 득실 분석(경제적, 경제외적 측면 포함)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 정규교육기관으로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육 책무성 및 교육 공공성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기대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를 본 정책이 고려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본 정책안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통제 장치로서 지도·감독권이나 인증 절차는 실제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의 책무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적절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투자 자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언제든지 폐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내교육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정책안에서는 설립·경영 주체를 매우 모호하게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학교 문을 닫아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를 갖고 있다.

교육 책무성 및 공공성은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그 범위와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유형분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각 유

형에 따라 법안을 구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원과 대학은 교육 사업체로서 교육 책무성과 공공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하게 교육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지 않고 단일의 법에서 함께 규정한다면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규교육기관의 경우 공교육의 영역으로서, 특히 국내 및 외국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개입하여 철저하게 공공성과 책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들의 수준과 신뢰도, 외국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피해 사례, 외국의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리는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어떠한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파산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학교재산 투자신탁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교육선택권과 교육의식의 변화, 혀세와 명목을 좇는 학력주의 및 일류학교병의 불식, 정확한 학교 및 교육정보에 근거한 교육선택 능력 배양 등의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소비자들의 현명한 교육적 선택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 차원에서의 새로운 교육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선호하는 성향이나 불합리한 교육적 선택을 조심스럽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 교육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다면, 본 정책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교육자본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의 정책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국내교육의 해외진출을 함께 고려한 정책 대안

이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들이 정부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교육 부문에 있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진출 가능 영역과 진출 가능 국가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진출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적 위치(세계 무역의 12위)로 인해 한국어 및 한국지역학에 대한 외국인의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면에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 대상국 교육기관에 ‘한국학 강좌’의 개설과 한국인 교강사 채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국교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산업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등 동남아 국가의 외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기본적 직업기술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기관 진출을 적극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장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에 디지털 인터넷 관련 정보통신교육과 관련 첨단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의 진출을 위한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 교육의 진출도 적극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버 교육프로그램들을 세계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사이버교육의 역수출을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덧붙여 이들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우리 교육기관과 외국의 타 교육기관이 컨소시움 등의 형태로 제휴하여 전략적으로 외국에 진출하는 형태도 적극 추천할 만 하다.

한편 적극적으로 외국학생을 국내에 유치하는 정책도 전략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산업연수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파견국을 거점으로 한국교육의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학생들의 생활여건(예, 비자, 의료보험 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국내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생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이 양호하고 졸

업자의 취업 기회는 넓은 편이므로 아시아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학생을 유치하거나 아시아 지역에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국내 학교와 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정책안에서 언급된 것처럼 연구신탁기금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국내교육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한 국외 교육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10여개의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또 13개 기관이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기관의 국내 진출 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인허가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시장개방과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기타 제언: 전반적 정책기조, 관련법률 및 기타 관련 제언

'법제화, 정책수립, 개방협상'이라는 전반적 정책기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교육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책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개방 효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면 개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질 우선주의, 교육의 지역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개방협상에 앞서 분야별 차별적인 협상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법률 정비가 매우 포괄적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교육시장 개방과 국제교육은 별개의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법률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국제교육은 국제교육진흥을 위한 특별법의 형태로 다루는 것이 우리 기존 법제와 부합하며, 교

육시장 개방의 경우에도 다양한 관련 법령의 체제를 고려하면서 규정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묘한 표현의 차이에 따라 앞으로 큰 실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서 학교법인이라고 해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조세혜택, 영리=조세부담”이라는 틀에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세 관련 사안 못지 않게 합법을 가장한 ‘탈법’ 운영의 가능성성이 매우 크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2005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때 까지 법률공개를 미루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실 교육시장개방의 과급효과가 엄청날 것임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교육계 전반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에 근거한 인식이 불충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는 세계적인 것이므로, 이를 위해 WTO, UNESCO, OECD 및 교육관련 국제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품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고유 문화의 핵심으로서 교육의 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서비스 시장화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강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및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시장개방과 교육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모든 국민이 교육국제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영어 조기 교육을 도입하고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소모적인 자원 낭비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민은 소외감과 함께 불안해하고 있다. 국제교육은 기존 우리 교육체제 속에서 함께 포함되어 시행되어야 할 교육이지 기존 교육과 별도로 새로운 교육, 또 추가로 해야 할 별도의 교육으로 이해되면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교육의 주체적 위치를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V. 연구결과의 논의

1.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사안을 담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본 정책안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안을 평가한 전문가들은 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 적극적 찬성 혹은 적극적 반대 입장에 서기보다는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의를 뒷받침하고 충실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각 현상과 이슈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실태자료 통계가 필요하다. 실제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념이 명확히 논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집·종합하여 실태를 적극 파악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으로서 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유관 용어의 정리 및 적절한 정책을 위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현상적 요소들로 구성된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본 정책안이 표방하는 바 포괄적인 국제교육 진흥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유사 개념간의 관계를 밝혀 본 정책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본 안의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안의 재구조화가 필

요하다.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이 주된 초점을 이루되, 이를 대비한 국제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 정책이 본 안의 목적이라고 상정할 경우, 본 정책은 1)국내 교육(한국교육의 정체성 확립,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 수립, 해외진출 장려 등)의 경쟁력 강화와 2)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교육시장의 범위 및 개방 속도, 각 분야별 각론화 대응/진출 전략 등), 그리고 3)국제이해교육(초·중등 수준의 교육 과정 제고 등)과 국제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부분은 학교급별, 교육의 분류기준(WTO, UN), 교역 형태 등에 따라 각론화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시장개방에 앞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기관 평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 목적의 공공성 유지, 각국의 학력 인증방식과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교육의 수월성 유지를 위해 시급히 요구된다.

다섯째, 본 안이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관련 정책안을 종합한다는 필요성을 한 축으로 하여 정책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교육시장개방의 맥락에서 현실적 필요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의 국제화와 관련된 제반 법제 측면을 정리하여 관련 법제와 정책 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차원의 효율적 활용면에서 적절하지 못하고, 대신 기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전문인력 양성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선진국들의 교육 국제화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불가피한 교육시장개방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국가 및 개인 차원의 이점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아홉째, 교육국제화를 둘러싼 쟁점을 진단하여 이로 인한 파급효과 및 특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나아가 교육시장 개방 반대 입장을 정책적으로 수렴하

여 정책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거나, 이들 의견의 정책적 수렴 및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섯 번째와 맥락을 같이한다.

열째, 영역별 교육 국제화 추진에 대한 세부 정책을 수립, 보완해야 한다. 교육 시장 및 교역형태, 그리고 분류기준에 대한 국가간 이해 차이, 또한 틈새 교육시장을 놓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결국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국제교육진흥 종합발전방안」이라는 정책안에 대한 평가 연구로서 정책안의 내용에 주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의 국제화 또는 국제교육이라는 것을 아우르는 첫 정책안이라는 점에서 평가 전반이 개념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정책안의 등장배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배경을 모두 섭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교육 국제화를 둘러싼 유관 개념에 대한 논의 고찰은 국제 수준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시장개방과 관련된 국가주의 측면 속에서 전반적인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수렴되는 개념으로 통합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힌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양 측면을 아우르는 정책적 수렴 노력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정책안이 전반적인 여론 수렴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안의 평가질문들을 가능한 한 비판적 입장에서 구성·활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정책평가 자문위원들은 교육의 국제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으로서 본 정책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데에 동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수렴하는 데에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제한된 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이기에 정책안에 제시된 모든 세세한 부분을 평가하기보다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관심사에 의해 취사선택된 내용들에 대한 논의만이 주로 이루어진 면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한 쟁점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계의 합의 도출과 경제적·교육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전략적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자, 조연순, 김왕식(1997). 세계교육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교육과학연구*. 26.
- 김준동(2002).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간담회 토의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순찬(2002).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및 국내 현황.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간담회 토의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석진(1995). 세계화·국제화와 정치. 백완기(편). *국제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 박영사.
- 송권봉(2002). 교육개방: 한국교육 위기의 새로운 단계. *진보교육*(15호).
- 전숙자, 이인표(1999). 국제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교육학연구*. 1999(제3호). 22-52.
- 정두용, 신은숙, 정득(2000).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 한준상(1994). *한국교육개혁론*. 학지사.
- 21세기 진보교육연구소 교육정세연구팀 역(2002). WTO체제와 밀레니엄라운드: 무엇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는가?. EI, PSI 공동보고서(1999).
<http://saveedu.jinbo.net/maybbs/view.php?db=eduright&code=pds&n=1&page=1>
- WTO교육개방·시장화 관련 4대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홈페이지
<http://saveedu.jinbo.net>
-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 <http://www.wto.org>

<부록 1-1>

설문지

-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태국, 홍콩, 베트남 지역 재외동포들의 교육수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이 지역 한국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재외동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분석과

<신상관련질문>

1. 성별 : (남 / 여)

2. 연령 : () 세

3. 체류국명 : () 체류지역 : ()

5. 체류구분 :

① 일시 ② 영주1세 ③ 영주2세 ④ 영주3세 이상

6. 채용유형 및 직위 (중복해서 선택가능)

① 파견교원 ② 현지채용교원 ③ 강사(임시직)
④ 사무직 ⑤ 교장·교감 ⑥ 이사회 임원

7. 경력 및 교원 자격증 소유여부

· 교직경력 : () 년

· 교원 자격증 소유여부 : (유 / 무)

· 전직 : ()

<시설 및 운영 관련질문>

8. 시설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학급수(학급당 학생수)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특별학급수 : _____

(어학실습실 등 구체적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체육시설 : _____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숙사 : _____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교직원 편의시설 : _____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현지교민을 위한 행사지원 시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사. 행정장비 및 교육기자재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아.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9.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②현재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③앞으로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보기>에서 골라 답해 주십시오.)

<보기>

- ① 재단이사회 ② 교장 ③ 교사협의회 ④ 학부모회 ⑤ 대한민국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이하 교육부)

9-1.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9-2. 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9-3. 학교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9-4.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9-5.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9-6. 기타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주십시오.

<교직원 관련질문>

10.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파견교원의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 채용 교원의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강사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11. 교원의 자격·능력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모든 교원이 교원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교원의 교과 관련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교원의 현지어 및 영어구사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한국문화 등 한국이해와 관련된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격·능력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 교원 연수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연수기회 확대 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연수의 질 제고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연수 내용의 다양화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1.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라. 연수 담당 기관이 변경되어야 한다.(현재는 국제교육진흥원이지만, 일반 교육청 등과 같은 기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한국학교 과전 전 교육이 현지근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과전 전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십시오.

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13. 교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임금이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임기 연장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정년 보장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업무량이 감소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법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사. 경력인정 등 보상체계가 안정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아.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교육과정 및 내용 관련질문>

14.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가. 한글교육 및 한국이해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어 및 현지적응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귀국후 연계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영어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15. 앞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가. 한글교육 및 한국이해 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어 및 현지적응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귀국후 연계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영어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16.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업교재 및 자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한국의 교육적 상황을 반영하는 교재 및 자료가 더 필요하다. (입시관련자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 사정에 적합한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중언어로 제작, 현지 사회·문화적 특성 반영...)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영어 및 현지어로 제작된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예체능 및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가 더 필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한국문화 및 한국어 관련 교재가 더 필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17. 교재의 출판 및 수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의 현지 수급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가-1.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에 답하신 분은 다음 중 어느 부문에서 그러한지 답해 주십시오.

a. 교재 과부족 문제해결 b. 수송시간 단축

나. 교재의 현지 출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혹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교재 출판에 관여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재정 관련질문>

18. 세입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본국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지원보다 200%이상 ② 100%이상 ③ 50%이상 ④ 지원규모는 충분하다
⑤ 정부 지원보다는 기부금이 많아져야 한다

나. 기업 등의 기부금이 증가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안정적인 재정 수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수업료 및 학생 부담금이 줄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19. 세출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세출이 보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항목별 지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1.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에 답하신 분은 다음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20. 감사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감사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감사의 횟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감사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정부 및 학교주변기관의 역할>

21. 대한민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재정지원증대 해야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과정교원수 증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학교운영에 관여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교육과정운영에 관여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교원연수지원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22. 학교와 관련하여 대사관(교육담당영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학교와의 중간 연락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나-1. 재정 지원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2. 교사 수급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3. 연수관련업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4. 행정관련지원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5. 현지정부와의 협력/지원 관련 업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정부지원 이외에도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23. 한국학교와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단순한 법적인가면 충분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 정규 학교로서의 법적인가가 필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24. 다음은 재외동포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간의 주요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 분담 또는 기관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파견교사연수(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재외동포학생연수, 유학생지원, 외국유학생유치
	학술진흥재단	해외한국학지원(현지대학중심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교 교재지원, 한국어 능력시험
외무부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한국학지원(기금지원중심)
	한국국제협력단	개도국에 대한 지원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홍보자료발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교재연구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 보급에 관한 지원

가. 관련 기관의 기능(역할)을 현 상태를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한국학교 지원과 관련된 업무(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국어연구원 등)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한국학교 지원 업무(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국어연구원 등)와 한글학교 지원 업무(재외동포재단 등)가 통합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모든 재외동포관련 업무가 한 기관의 관할 아래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이밖에 재외동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ex1. 업무 A를 기관 B로 이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ex2. 기관 A의 업무 B를 기관 C의 업무 D와 통합하는 것이 교사의 번거로움을 더 덜어줄 수 있다.

ex3. 업무 A를 기관 B가 더욱 강화하여 주관할 필요가 있다.

의견1: _____

의견2: _____

의견3: _____

<기타>

25. 현재 한국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학생수 감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정부지원 등의 재원 부족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교사간 갈등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재단 이사회의 역할 비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한국학교의 정체성(근본설립목적)의 위기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26. 이밖에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2>

설문지

-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태국, 홍콩, 베트남 지역 재외동포들의 교육수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이 지역 한국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재외동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분석과

<신상관련질문>

1. 성별 : (남 / 여)

2. 연령 : () 세

3. 체류국명 : () 체류지역 : ()

5. 체류구분 :

① 일시 ② 영주1세 ③ 영주2세 ④ 영주3세 이상

6. 체류기간 : () 년

7. 현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일 : ()

8. 자녀의 학년 :

ex) (초등) 학교 (3) 학년

① 자녀1: () 학교 () 학년

② 자녀2: () 학교 () 학년

③ 자녀3: () 학교 () 학년

<재외동포 교육에 관한 인식>

9. 재외동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1. 한국학교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치 않다 ⑤ 없는 것이 더 낫다

9-2. 한글학교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치 않다 ⑤ 없는 것이 더 낫다

9-3. 한국문화원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치 않다 ⑤ 없는 것이 더 낫다

10. 자녀가 현재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괄호 안에 학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① 한국학교 ② 제3국 국제학교 ③ 현지 정규학교 ④ 기타 ()

- 자녀1 : () 학교
- 자녀2 : () 학교
- 자녀3 : () 학교

11. 한국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시면 다음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11-1. 자녀를 한국학교 이외의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외국학생들과의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고 싶어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현지에 적응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 같아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교사의 자질 등이 더욱 우수한 것 같아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유학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국제학교 등에 보내기 때문에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11-2.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 자녀의 한국어 실력의 감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귀국 후 적용 문제 (한국식 학교생활에 적용 등)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대학 입학 관련 문제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11-3. 한국학교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가. 교육 시설의 양적·질적 향상 필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우수한 교사 유치 필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영어 및 현지어 교육 강화 필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 필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귀국 후 적응교육 강화 필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현지 적응교육 강화 필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11-4. 귀하가 바라는 부분이 개선된다면 한국학교에 보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생각해보겠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12. 한국학교에 취학한 자녀가 있으시면 다음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12-1.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한국인으로 당연히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귀국후 학업진도 등 적응문제를 염두에 두어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한국어 교육문제 때문에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한국학교에 다녀도 현지 적응이나 외국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이 대학입시(특례입학)에 유리해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다른 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2. 한국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 현지 적응 문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영어 및 외국어 교육문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교사 수준이나 교육내용의 질 문제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국제학교 등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 느끼는 자녀의 상대적 열등감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시설 및 운영 관련질문>

13. 시설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학급수(학급당 학생수)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특별학급수 : _____

(어학실습실 등 구체적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체육시설 : _____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숙사 : _____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교직원 편의시설 : _____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14.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⑦현재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⑧앞으로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보기>에서 골라 답해 주십시오.)

<보기>

- | | | | | |
|-------------------|------|---------|--------|-----------|
| ① 재단이사회 | ② 교장 | ③ 교사협의회 | ④ 학부모회 | ⑤ 대한민국 정부 |
| (교육인적자원부: 이하 교육부) | | | | |

14-1.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14-2. 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14-3. 학교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14-4.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14-5.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현재 담당 주체 : () 나. 앞으로 담당 주체 : ()

<교직원 관련질문>

15.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파견교원의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 채용 교원의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강사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16. 교원의 자격·능력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모든 교원이 교원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교원의 교과 관련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교원의 현지어 및 영어구사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한국문화 등 한국이해와 관련된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격·능력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17. 교원 연수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연수기회확대 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연수의 질 제고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연수 내용의 다양화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1.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라. 연수 담당 기관이 변경되어야 한다.(현재는 국제교육진흥원이나 일반 교육청 등과 같은 기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18. 교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임금이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임기 연장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정년 보장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업무량이 감소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법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사. 경력인정 등 보상체계가 안정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아.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교육과정 및 내용 관련질문>

19.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가. 한글교육 및 한국이해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어 및 현지적응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귀국후 연계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영어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20. 앞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가. 한글교육 및 한국이해 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어 및 현지적응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귀국후 연계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영어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2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업교재 및 자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한국의 교육적 상황을 반영하는 교재 및 자료가 더 필요하다. (입시관련자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 사정에 적합한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중언어로 제작, 현지 사회·문화적 특성 반영...)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영어 및 현지어로 제작된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예체능 및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가 더 필요하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한국문화 및 한국어 관련 교재가 더 필요하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22. 교재의 출판 및 수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의 현지 수급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가-1.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에 답하신 분은 다음 중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지 답해 주십시오.

- a. 교재 과부족 문제해결 b. 수송시간 단축

나. 교재의 현지 출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혹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교재 출판에 관여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재정 관련질문>

23. 세입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본국 재정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기업 등의 기부금이 증가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안정적인 재정 수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수업료 및 학생 부담금이 줄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수업료 및 학생 부담금에 비해 학교교육의 질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아주 낮다

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24. 세출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세출이 보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항목별 지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1.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에 답하신 분은 다음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25. 감사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감사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감사의 횟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감사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학교주변기관의 역할>

26. 대한민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재정지원증대 해야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과전교원수증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학교운영에 관여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교육과정운영에 관여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교원연수지원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27. 학교와 관련하여 대사관(교육담당영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학교와의 중간 연락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나-1. 재정 지원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2. 교사 수급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3. 연수관련업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4. 행정관련지원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5. 현지정부와의 협력/지원 관련 업무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정부지원 이외에도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28. 한국학교와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 단순한 법적인가면 충분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현지 정규 학교로서의 법적인가가 필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29. 다음은 재외동포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간의 주요 업무 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 분담 또는 기관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파견교사연수(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재외동포학생연수, 유학생지원, 외국유학생유치
	학술진흥재단	해외한국학지원(현지대학중심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교 교재지원, 한국어 능력시험
외무부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한국학지원(기금지원중심)
	한국국제협력단	개도국에 대한 지원
국정 홍보처	해외홍보원	홍보자료발간
문화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교재연구
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 보급에 관한 지원

가. 관련 기관의 기능(역할)을 현 상태를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한국학교 지원과 관련된 업무(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국어연구원 등)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한국학교 지원 업무(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국어연구원 등)와 한글 학교 지원 업무(재외동포재단 등)가 통합되어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모든 재외동포관련 업무가 한 기관의 관할 아래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이밖에 재외동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ex1. 업무 A를 기관 B로 이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ex2. 기관 A의 업무 B를 기관 C의 업무 D와 통합하는 것이 교사의 번거로움을 더 덜어줄 수 있다.
 ex3. 업무 A를 기관 B가 더욱 강화하여 주관할 필요가 있다.

의견1: _____

의견2: _____

의견3: _____

<기타>

30. 현재 한국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학생수 감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나. 정부지원 등의 재원 부족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다. 교사간 갈등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라. 재단 이사회와의 역할 비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마. 한국학교의 정체성(근본설립목적)의 위기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아니다

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기타 의견포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31. 이밖에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부록 II-1>

「국제교육 전문가」 면담 질문지

다음의 질문은 국제교육 전문가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드리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해주시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I. 개인 배경 정보

1. 성명:
2. 현 수행업무 (소속 국제기구):
3. 파견 전 국제기구 관련 경력
 - 학력(전공포함):
 - 파견 전 근무 부서:
 - 기타(관련 자격 및 연수 등):

II.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참여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국제기구 참여 정책 및 전략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2. 전문가 양성(선발, 훈련...)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III.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한 실효성 평가

※ 다음 “국제 기구 전문가 양성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 지원체제 마련방안	실효성 평가
<p>Ⓐ 선발제도 개선 방안 : employee benefit→ 전문성 중심 선발 ex> 고등교육사업 참여에는 고등교육 담당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한다.</p> <p>※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사업 및 활동 내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p> <p>Ⓑ 국제교육 담당 부서간 협의회 운영 체제 마련 ex> 국제교육 협력 담당관실과 인적자원 정책 국간의 협의회 운영</p> <p>Ⓒ 국제 전문가 POOL 구축방안 : 정보공유 및 파견 준비과정으로서의 활용</p> <p>Ⓓ 국제기구의 주요직 진출 방안 : 국제 기구 근무 경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계속기회 부여</p> <p>Ⓔ 재정 지원 방식의 변화 및 확대 방안 : 국제기구에 대한 투자→목적 사업별 투자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p>	

2. 전문가 선발 후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실효성 평가
<p>Ⓐ 부서 내 비형식 교육의 강화 방안 : Mentoring system (파견 경험자와 파견 예정자의 연계 시스템) 도입</p> <p>Ⓑ 현 파견자와 파견 예정자의 연계 시스템 도입 방안</p> <p>Ⓒ 민간위탁교육의 활성화 방안 : 파견근무 준비를 위한 유급휴직제의 도입</p> <p>Ⓓ 현지 연구 프로젝트 훈련 프로그램 도입 방안 : 관련 국제 기구 사업 활동과 동향에 대한 사전 조사</p>	

3. 전문가 파견 복귀 후 단계	실효성 평가
<p>Ⓐ 국제기구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 파견자를 활동하는 방안 : 복귀 후 3개월 간 무보직 활용 제도 도입</p> <p>Ⓑ 국제기구 관련 정부산하 연구소의 고용 휴직 장려 방안 : 국제기구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연구 수행 기회 제공</p>	

4. 기타방안	실효성 평가
<p>Ⓐ 민간 전문가 양성방안 : 목적 사업 투자시 사업관리자로서의 활용</p> <p>Ⓑ 민간 전문가 귀국 후 활용 방안 :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p>	